
2008년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2008.10

국회의원 김소남 南

I . 2008년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	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
(1) 해외연수로 둔갑한 포상 휴가 - 해외연수로 둔갑한 포상휴가	7
(2) 제4회 지방선거, 제17대 대선, 제18대 국선 - 선거개표 도중 투표지분류기 160대 멈춰	11
(3)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9억 3천만원	14
(4) 정치자금 전자영수증 윈도우VISTA나 신기종 프린터로는 발급 안된다	17
(5)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극복해야... ..	19
2. 행정안전부	22
(1)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참여정부 정보 비공개 심각	22
(2) 참여정부기간 우리영해 침범한 해적선 105.8% 증가	28
(3) 국가상징물 방치하는 공공기관 직무유기 심각	32
(4) 대부업체, 44.7%가 불법사각지대	37
(5) 공문서위·변조 사범 최근 4년간 79.8% 증가	39
(6) 2007~2008년 상반기 동안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 23개 주요 공공기관 사이버테러 습격 당해	42
(7) 농어촌 137가구 인터넷 사용료 없어 PC환수당해	48
(8) 정부조직개편 법률작업 미흡 심각	51
(9)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범죄 최근 7년간 79% 증가	54
(10) 행정정보 DB 구축사업 지역고용격차 심화	57
(11) 주민등록 예약민원처리제 유명무실	60
(12) 행정안전부 매일 47건 꼴로 해킹공격 받아	63

3. 서울특별시	69
(1) 서울시, 16개 시·도중 균형발전평가 15위	69
(2) 잃어버린 10년, 자살자 수 100.6% 증가	72
4. 경찰청	78
(1)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하는데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는 매년 증가	78
(2) 지하철범죄 증가, 2007년 1730건	82
(3) 무인단속카메라 10대중 1대는 가짜 모형카메라	89
(4) 운전면허시험장 총신 운전자 면허기록, 민간운전학원 출신자의 8.5배	97
(5) 지난 3년간 발견된 위조지폐 총액 3억8천만원	100
(6) 2007년 음주운전 채혈측정 45,383건, 14.5%인 6,570명 행정처분 변경, 처분 감경이 2/3	106
(7) 경찰, 지난 3년간 통신장비 1001개 분실	112
(8) 경관 10명 중 1명은 사격 낙제자	115
(9)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폐기직전 무인단속기도 정기검사, 4년간 20억원 예산낭비	118
5. 소방방재청	120
(1) 불별더위로 인한 폭염진료환자 4년 동안 59.4% 증가	120
(2) 벼락 맞을 확률 매년 증가해	129
(3) 우리나라 지진나면 건축물 83.7% 무너져 내려	135
(4) 화재발생 최근 3년간 72.8% 증가	139
6.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143
(1) 112 허위신고 증가, 경찰 행정력 낭비 심각	143
(2) 관악구, 서울시내 강력범죄 발생 최다지역, 2008년 3,513건	147
(3) 서울시내 조직폭력배 개입 범죄 심각	152
7. 경기도	157
(1) 기초생활수급자 단수조치 최근 3년간 32.2% 증가	157
(2) 국무총리 특별지시 '쇠귀에 경 읽기' - 경기도청 1~8월 전력사용료 전년대비 9.8% 증가	160

(3) 경기도 행정서비스 전국에서 꼴지	165
8. 경기지방경찰청	169
(1) 경찰대학 골프장은 환경감시 사각지대 - 맹독성 농약검출	169
(2) 도내 서바이벌 게임장, 모의총포 사각지대	173
(3) 2007년 도내 부동산투기범 3,358명, 전국의 45%	176
9. 부산광역시	183
(1) 부산시민 형세 낭비하는 부정수급가구 85% 급증	183
(2) 자살사고 난 지하철 역 스크린 도어 설치 5%	187
(3) 항만시설 과부족 지난해 25.9% 증가	190
10. 부산지방경찰청	196
(1) 지난 2년간 부산지역 보이스피싱 피해액 75억6천만원, 검거율은 19%에 그쳐	196
(2) 부산진구, 부산시내 강력범죄 최다지역, 2008년 3,180건 발생	199
(3) 2008년 10월, PIFF·롯데자이언츠·부산불꽃축제에 동원된 경찰 8,500명, 90% 전의경	203
11. 울산광역시	211
(1) 울산지역, 결식아동 82.2% 증가	211
(2) 울산시, 관광 해외 마케팅사업 평가 꼴지	213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15위	216
12. 울산지방경찰청	220
(1) 울산지역, 인구 10만명당 5대범죄 발생 최고, 5대 범죄 검거율 전국 최하위	219
(2) 울산 경찰관, 16개 지방청 중 사격 실력 꼴찌	224
13. 대구광역시	228
(1) 가장 더러운 공기를 마시는 지역 /가장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지역	228
(2) 대구광역시 여성정책 '빵점'	237

14. 대구지방경찰청	241
(1) 10월 21일 경찰의 날, 표창받는 경찰관 10,515명	241
(2) 대구시내 유사 사행성게임기 운영 청소년게임장 19곳	247
15. 강원도	252
(1) 텅빈 지방공항 예산낭비 심각	252
(2) 불법광고물 최근 3년간 2.4배 증가	259
(3) 강원지역 결식아동 최근 6년간 20배 증가	262
16. 강원지방경찰청	264
(1) 강원랜드 강력범죄 연간 45% 증가, 2007년 188건 발생	264
(2) 강원도내 민간보유 석공 5정중 1정은 행방불명	268
(3) 강원도내 해수욕장은 폭력사건 우범지역	272
17.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277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2만㎡ 부동산 25년째 미활용	277
(2) 2003년 이후 공무원연금 과오지급액 약 1,100억원,83억원은 미환수	280
18. 도로교통공단	285
(1) 교통안전분담금, 계좌오류난 환급금 6억1,500만원	285
(2) 도로교통공단, 46억 국민혈세로 주식출자, 감사원“지분전액매각”지시	288
II. 2008년 국정감사 관련 언론기사	291
III. 2008년 국정감사 대표발의 법안	301

2008년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I

2008년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해외연수로 둔갑한 포상 휴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매년 편법으로 외유성 해외연수 (2008년 10월 5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거관리유공자 등에 대한 해외연수가, 사실상 포상 휴가나 다름없는 외유성 해외연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비례대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국 선거제도 연수 등을 명목으로 선거관리유공자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편법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 2004년 이후 선거관리유공자 해외연수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4년간 2억9,576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되었고, 223명이 연수를 다녀왔다. 그리고 이들이 방문했던 국가는 태국(5회), 싱

가포르(5회), 인도네시아(3회), 홍콩(3회), 대만(3회)으로서, ‘선진국의 선거·정당제도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치제도 발전을 모색한다’는 본래의 취지와 거리가 먼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 또한 해외연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6~8일 정도의 연수 기간 동안 각국의 선거 관련 기관은 1곳 정도 형식적으로 방문하는데 그쳤으며, 나머지 기간은 정치·문화체험을 명목으로 관광을 하는 데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소남 의원은 "매년 선거제도 연수라는 명목으로 포상 차원의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편법적 예산 낭비 사례"라며, "공무국외연수에 대해 철저한 사전 심의와 엄격한 예산 집행 및 관리를 통해 반드시 시정조치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선거관리유공자 해외연수 실시 현황>

■ 2007년

기간	국가	인원	유형(목적)	집행 예산 (단위:원)
3. 26 ~4. 2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16명	제도연수(선거관리유공자 등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부여로 사기진작 도모)	22,240,000
5. 10 ~5. 16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18명	제도연수(선거관리유공자 등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부여로 사기진작 도모)	25,200,000
5. 17 ~5. 23	태국 베트남 대만	18명	제도연수(선거관리유공자 등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부여로 사기진작 도모)	25,200,000

■ 2006년

기간	국가	인원	유형(목적)	집행 예산 (단위:원)
10. 30 ~11. 3	대만 홍콩	18명	선거기관 방문 및 자료수집(선거관리유공자 등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부여로 사기진작 도모)	18,360,000
11. 5 ~11. 11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18명	선거기관 방문 및 자료수집(선거관리유공자 등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부여로 사기진작 도모)	16,920,000
11. 19 ~11. 26	태국 싱가포르 홍콩	18명	선거기관 방문 및 자료수집(선거관리유공자 등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부여로 사기진작 도모)	19,800,000

■ 2005년

기간	국가	인원	유형(목적)	집행 예산 (단위:원)
12. 8 ~12. 13	태국 싱가포르	17명	선거제도 연수 및 자료수집(선거관리유공자 등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부여로 사기진작 도모)	16,660,000
12. 12 ~12. 17	베트남 캄보디아	18명	선거제도 연수 및 자료수집(선거관리유공자 등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부여로 사기진작 도모)	20,160,000

■ 2004년

기간	국가	인원	유형(목적)	집행 예산 (단위:원)
11. 14 ~11. 19	일본 필리핀	17명	선거제도 연수 및 자료수집(선거관리유공자 등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부여로 사기진작 도모)	27,642,000
11. 15 ~11. 20	대만 인도네시아	16명	선거제도 연수 및 자료수집(선거관리유공자 등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부여로 사기진작 도모)	25,376,000
11. 17 ~11. 22	태국 싱가포르	18명	선거제도 연수 및 자료수집(선거관리유공자 등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부여로 사기진작 도모)	19,026,000
11. 20 ~11. 25	인도 방글라데시	16명	선거제도 연수 및 자료수집(선거관리유공자 등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부여로 사기진작 도모)	39,680,000
11. 25 ~11. 30	말레이시아 홍콩	15명	선거제도 연수 및 자료수집(선거관리유공자 등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부여로 사기진작 도모)	19,504,000

(2) 제4회 지방선거, 제17대 대선, 제18대 국선 선거개표 도중 투표지분류기 160대 멈춰

■ 전자선거시스템 (명부기, 투표기) 장애 총 187대! (2008년 10월 6일)

- 선거 때마다 매번 투표지 분류기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소남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투표지분류기 수리·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번의 선거에서 160대가 오작동으로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선거별로 살펴보면 투표지분류기 총 1,377대 중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50대,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75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35대가 선거당일 개표 도중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 <조치·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개표 중에 장애가 발생하여 기술요원이 수리한 경우가 60대로 가장 많았으며 개표종료시점에 장애가 발생하여 사용이 중단된 경우 52대, 부품이 빠졌거나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예비기기로 교체한 경우가 48대로 나타났다.

<개표당일 투표지분류기 장애발생 및 조치 현황>

선거별	총 사용수량	장애발생 수량	조치 수량			사용불가 수량
			계	현장조치 수량	예비기기 교체수량	
제4회 지방선거	1,377	50	29	18	11	21
제17대 대선	1,377	75	55	24	31	20
제18대 국선	1,377	35	24	18	6	11
합계(1,377)		160	108	60	48	52

- 한편 최근 전자선거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터치스크린 투표기 및 명부기 총 2,762대에서도 187대가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되었다.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기 교체, 수리 현황>

투표기기	보유 수량	교체·수리 수량	비율(%)
명 부 기	770	66	8.6
투 표 기	1,992	121	6.1
합 계	2,762	187	6.8

-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은 200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460회 선거에 사용되었으며 수리내역을 살펴보면 ‘프린터 센서 수정 등’이 65대, ‘프로그램 재설치’ 57대, ‘배선 조정 등’이 31대, ‘단색 등 부품 교체’가 11대 등으로 나타났다.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기 교체, 수리이유>

1차장비	수 리 내 역	수 량	비 고
명 부 기 (66대)	프로그램 재설치	23	
	모니터 후크 교체	8	
	터치 값 재설정	4	
	기타 배선 조정 등	31	
투 표 기 (121대)	프로그램 재설치	34	
	전면 커버 교체	11	
	단색등 부품 교체	11	
	기타 프린터 센서 수정 등	65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투표지분류기, 터치스크린 등 선거관련 기기가 선거 때마다 과부하 및 오작동 등으로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며 “앞으로 투표결과에 대한 시시비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디지털시대에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련 기기의 예상되는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속적인 성능점검과 보수정비를 통해 해당기기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고 말했다.

(3)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9억 3천만원!

- 과태료 부과액, 수원시 장안구에서 금품수수료 2억원 부과..
- 선거법 위반 신고로 받은 포상금, 진도군에서 5천만원 받아..
(2008년 10월 6일)

- 최근 '50배 과태료 부과, 최고 5억원의 포상금 지급' 현수막을 내걸고 전국적으로 포상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소남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제18대 국회의원선거<포상금 및 과태료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선거법 위반신고로 받은 포상금은 총 74건으로 1억3천만원이며 선거법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352건으로 9억3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전남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9건, 강원도 6건, 광주 5건 순으로 많았으며 포상금 지급액은 전남이 5천7백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고 서울이 1천6백만원, 경기도 1천4백만원 순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지역별 과태료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7건, 충남 28건, 전남 27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과태료 부과액은 경기도가 3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되었고 광주가 1억 1천4백만원, 부산 9천2백만원, 서울 9천2백만원, 전남 7천5백만원 순으로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포상금 및 과태료부과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포상금		과태료	
	접수건수	지급액	접수건수	지급액
계	74	130,632	352	930,591
서울	9	16,040	47	92,827
부산	4	4,500	15	96,150
대구	0	0	7	3,300
인천	4	2,160	8	31,975
광주	5	2,700	10	114,200
대전	2	1,200	11	17,190
울산	2	2,400	19	8,250
경기	9	14,022	71	313,990
강원	6	10,600	21	22,893
충북	4	2,200	20	24,741
충남	4	2,300	28	33,765
전북	4	3,900	23	29,746
전남	14	57,910	27	75,926
경북	3	4,900	26	31,396
경남	4	5,800	18	33,742
제주도	0	0	1	500

- 한편 <포상금 지급 상위 20위>를 분석해 본 결과에 따르면, 지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신고로 가장 많이 받은 포상금은 진도군에서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위는 광주시와 서울 강동구에서 6백8십만원, 4위는 서울시 장안구에서 5백만원, 5위는 강릉시에서 4백9십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반유형로 보면 20건 중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이 전체의 70%(14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과태료 부과 상위 20위>를 분석해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가장 많이 부과된 과태료는 수원시 장안구에서 ‘금품수수’로 2억원이 부과되었으며 2위 광주 남구에서 1억1천만원, 3위 부산에서 8천8백만원, 4위 서울 강동구에서 5천2백만원, 5위 수원시장안구에서 4천4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금품 및 관광 등 제공’이 전체의 80%(16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최근 정부가 신고포상금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자금범죄의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선거범죄를 예방하고 공명선거를 구현하는데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불법선거 운동의 대처방식에 있어 유권자의 90%가 소극적인 만큼 정부는 유권자 내부에서 공명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선거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4) 정치자금 전자영수증, 윈도우 VISTA나 신기종 프린터로는 발급 안된다!

■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과 정치자금기부 센터 자료 호환 안돼 이중업무 해야하는 실정 (2008년 10월 6일)

- 2008년 6월부터는 선관위 정치자금기부센터에 기탁금 및 후원금을 기부한 자가 인터넷상에서 직접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전자무정액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졌다.
- 해당 시스템 도입에 집행된 예산은 약 1억8천만원.
- 한편 선관위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사용자 PC의 운영체제가 윈도우비스타이거나, 사용 프린터가 공유된 프린터나 신기종 프린터일 경우 영수증 출력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

- 이런 사정으로 인한 불만과 민원은 프로그램 개발자인 선관위 측이 아니라 이를 사용하고 있는 국회의원 후원회측에서 고스란히 떠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또한 선관위가 개발하여 현재 정당·국회의원·국회의원후원회 등에서 폭넓게 쓰고 있는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 상의 데이터와 정치자금 기부센터 데이터 상호간에 호환이 되지 않는다.

- 따라서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를 관리함에 있어 이중으로 일을 해야 하는 실정이고, 이는 향후 회계보고 시에도 업무상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 ☞ 김소남 의원 : 선관위는 향후 신규 프로그램 개발 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칠 것. 또한 문제가 발생한 해당 프로그램상 오류를 신속히 시정하여 정당·국회의원·국회의원후원회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것.

(5)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극복해야...

■ 신용카드 포인트 등 정치자금 기부, 2004년 2,568건→2008년 8월말 244건 급격히 감소 (2008년 10월 6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소남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정치자금 기부현황>을 살펴보면 정치자금 기탁금은 2003년 3건에서 2004년 1,794건, 2006년 46,329건에서 2007년 62,058건으로 매년 증가하였고 수탁총액은 2003년 250만원에서 2004년 1억5천만원, 2006년 4억4천만원, 2007년 5억4천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자금 기부 현황>

구분 연도별	기탁금 수탁액				비 고
	수탁총액	건수	정치자금기부센터를 통한 수탁액	건수	
2003	2,500,000	3	-	-	
2004	151,744,910	1,794	-	-	
2005	2,039,461,230	22,280	95,496,280	1,031	
2006	4,456,038,250	46,329	258,712,077	2,642	
2007	5,445,011,740	62,058	123,575,267	1,354	

- 한편 최근 정치자금 기부의 활성화와 소액다수의 정치자금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치자금 인프라가 구축된 가운데 <신용카드 포인트 등 정치자금 기부현황>을 살펴보면 포인트 등 기부실적은 2005년 2,568건에서 2006년 4,495건으로 증가하다가 2007년 875건, 2008년 8월말 현재 244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부액은 2005년 1억 9천만원에서 2006년 3억4천만원으로 증가하다가 2007년 2천4백만원에서 2008년 8월말 현재 4백6십만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신용카드 포인트 등 정치자금 기부현황>

(금액단위 : 원)

연도별	구분	포인트 등 기부 실적			비 고
		계	후원금	기탁금	
2005	건수	2,568	2,222	346	
	금액	190,371,905	165,218,331	25,153,574	
2006	건수	4,495	3,727	768	
	금액	347,748,476	287,624,398	60,124,078	
2007	건수	875	730	145	
	금액	24,838,506	20,146,108	4,692,398	
2008. 8월말	건수	244	198	46	
	금액	4,681,846	2,890,241	1,791,605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소액정치자금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정치자금기부시스템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탁자가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올해 9월 17일부터 개설된 모바일 정치후원시스템의 경우 모바일 후원 시 후원인이 통신요금을 부담하고 있어 모바일 통신요금의 수신자 부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 행정안전부

(1)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참여정부 정보 비공개 심각!

(2008년 9월 30일)

- 지난 참여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국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공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김소남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연도별 정보공개 현황>자료에 따르면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는 2003년 192,292 건에서 2004년 104,024건, 2005년 13,841건, 2006년 150,582건, 2007년 235,230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 시 <연도별 비공개 처리현황>을 보면 비공개 처리건수는 2003년 7,816건에서 2004년 9,686건, 2005년 11,412건, 2006년 12,571건, 2007년 18,18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 5년간 정보 비공개율이 3.6%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정보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 타 (취하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07년	235,230	197,617	157,958	21,479	18,180	401	37,212
		(100)	(80)	(11)	(7.7)		
2006년	150,582	132,964	106,423	13,970	12,571	286	17,332
		(100)	(80)	(11)	(9)		
2005년	130,841	120,879	96,899	12,568	11,412	79	9,883
		(100)	(80)	(11)	(9)		
2004년	104,024	96,187	78,089	8,412	9,686	43	7,794
		(100)	(81)	(9)	(10)		
2003년	192,295	186,087	170,828	7,443	7,816	96	6,112
		(100)	(92)	(4)	(4.1)		

※ '04년부터 국가기록원 기록물열람을 통계에서 제외함에 따라 '04년 청구건수 감소

- 한편 2007년 <정보 비공개율>을 공공기관별로 살펴보면 66개 공공기관 중 국가정보원이 44.7%로 가장 높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36.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1.8%, 국세청 29.2%, 금융감독위원회 28.7%, 국민경제자문회의 26.9%, 국방부 24.7% 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16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8.2%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특별시 8%, 충청남도 7.6%, 대전광역시 7.4%, 인천광역시 6.5%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 공공기관별 정보공개 비공개율 상위 16개 기관>

행정기관 (%)		중앙지방자치단체 (%)	
국가정보원	44.7	경기도	8.2
국가안전보장회의	36.4	서울특별시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1.8	충청남도	7.6
국세청	29.2	대전광역시	7.4
금융감독위원회	28.7	인천광역시	6.5
국민경제자문회의	26.9	부산광역시	6
국방부	24.7	강원도	5.3
국무조정실	24.2	충청북도	5.1
대검찰청	22.9	경상북도	4.7
감사원	21.5	울산광역시	4.6
외교통상부	20.1	경상남도	4.5
건설교통부	18.6	광주광역시	4.3
소방방재청	17.9	전라북도	4.2
경찰청	17	대구광역시	4.1
관세청	15.7	전라북도	3.9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15.4.	제주특별자치도	2.5

- 정보비공개 현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총 18,180건수 중 ‘기타 부존재’가 7,493건(41%)로 가장 많았고 ‘법령상 비밀 비공개’가 4,149건(23%), ‘개인 사생활 침해’가 2,888건(16%)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정보공개 비공개 사유별 현황>

(단위: 건수,%)

구분	청구 건수	법령상 비공개	국방 등 국익 침해	국민의 생명 등 공익 침해	재판 관련 정보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개인 생활 침해	법인 등 영업상 비밀 침해	특정인의 이익	기타 부존재 등
2007년	18,180	4,149	103	186	851	1,111	2,888	913	486	7,493
	(100)	(23)	(1)	(1)	(4)	(6)	(16)	(5)	(3)	(41)
2006년	12,571	1,843	61	130	870	793	2,411	708	423	5,332
	(100)	(15)	(1)	(1)	(7)	(6)	(19)	(6)	(3)	(42)
2005년	11,412	1,111	64	159	790	926	2,221	969	401	4,771
	(100)	(10)	(1)	(1)	(7)	(8)	(19)	(8)	(4)	(42)
2004년	9,686	1,052	62	121	747	1,153	1,790	675	425	3,661
	(100)	(11)	(1)	(1)	(8)	(12)	(18)	(7)	(4)	(38)
2003년	7,816	952	65	130	591	527	1,427	444	370	2,908
	(100)	(12)	(1)	(2)	(7)	(7)	(18)	(6)	(5)	(37)

- 그러나 <연도별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결과>를 살펴보면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율’은 2003년 25%(141건)에서 2007년 43%(1,560)건으로 지난 5년간 18% 증가하였으며 ‘행정소송에 대한 인용율’은 2003년 13%(6건)에서 2007년 16%(13건)으로 지난 참여정부기간 3% 증가하여 그동안 참여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는지 밝혀졌다.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단위: 건수)

구 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신청 건수	처리결과			청구 건수	계류 중	심판결과			제기 건수	계류 중	판결결과		
		취 하 · 각 하	기 각	인 용			취 하 · 각 하	기 각	인 용			취 하 · 각 하	기 각	인 용
2007 년	3,653 (100)	845 (23)	1,248 (34)	1,560 (43)	312 (100)	59 (19)	100 (32)	125 (40)	28 (9)	82 (100)	34 (41)	22 (27)	13 (16)	13 (16)
2006 년	1,806 (100)	314 (17)	885 (49)	607 (34)	278 (100)	50 (18)	56 (20)	131 (47)	41 (15)	76 (100)	36 (47)	22 (29)	5 (7)	13 (17)
2005 년	1,315 (100)	276 (21)	656 (50)	383 (29)	321 (100)	45 (14)	86 (27)	126 (39)	64 (20)	119 (100)	50 (42)	49 (41)	12 (10)	8 (7)
2004 년	779 (100)	98 (13)	446 (57)	235 (30)	350 (100)	56 (16)	62 (18)	168 (48)	64 (18)	54 (100)	20 (37)	11 (26)	14 (20)	9 (17)
2003 년	574 (100)	78 (13)	355 (62)	141 (25)	184 (100)	57 (31)	27 (15)	70 (38)	30 (16)	45 (100)	20 (45)	2 (4)	17 (38)	6 (13)

-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지난 2007년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197,617건 중 당일 32,461건, 3일 이내 41,364건, 5일 이내 32,212건, 10일 이내 77,481건, 20일 이내 11,264건, 20일 초과는 2,835건으로

나타났다.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단위: 건수,%)

구분	계	당일(즉시)	3일이내	5일이내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2007년	197,617	32,461	41,364	32,212	77,481	11,264	2,835
	(100)	(17)	(21)	(16)	(39)	(6)	(1)
2006년	132,964	27,976	24,910	19,256	51,157	7,109	2,556
	(100)	(21)	(19)	(14)	(39)	(5)	(2)
2005년	120,879	31,632	23,608	16,650	42,847	5,165	977
	(100)	(26)	(20)	(14)	(35)	(4)	(1)
2004년	96,187	30,952	17,565	11,891	26,970	7,880	929
	(100)	(32)	(18)	(12)	(28)	(8)	(1)
2003년	186,087	134,750	12,414	14,654	21,876	2,136	257
	(100)	(72)	(7)	(8)	(12)	(1)	-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해 김소남 의원은 “ 행정정보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뿐만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 및 참여의식을 제고하는 특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참여정부는 열린행정 실현을 지향하면서 실제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민의 참여를 차단시키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며 “앞으로 정부는 비공개 사유 및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필요한 정보만 비공개로 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 참여정부기간 우리영해 침범한 해적선 105.8% 증가!

- 중국어선이 2,607척으로 전체 침범어선의 99.7%
- 지난 5년간 영해침범으로 구속인원 57.6% 증가
(2008년 10월 1일)

- 최근 중국어선의 우리나라 불법어로가 횡행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해양경찰청에서 김소남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우리나라 영해침범 내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참여정부기간 동안 우리나라 영해 및 EEZ 침범으로 나포된 어선은 총 2,283척으로 매일 1.3척의 외국 어선이 우리 영해를 무단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 240척, 2004년 443척, 2005년 584척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2006년 522척, 2007년 494척으로 약간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국가별로 보면 중국어선이 2,607척으로 전체 침범어선의 99.7%, 일본은 7척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 보면 우리나라 영해침범 어선은 168척, EEZ침범 어선은 2,115척인 것으로 밝혀졌다.
- 우리나라 영해 및 EEZ 침범을 하게 되면 불법 침범한 외국 어선은 담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지난 5년간 부담한 담보금은 총 212억 1,7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우리나라 영해 침범으로 구속된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962명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 151명, 2005년 167명, 2006년 218명에서 2007년 238명으로 구속인원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우리나라 영해 침범내역 현황>

구 분	총 계 (척)	국 가 별	위 반 유 형(척)			구 속		담보금 (원)
			계	영해 침범	EEZ 침범	척수	인원	
' 07년도	494	중국	494	27	467	88	238	48억 5,350만
' 06년도	522	중국	522	21	501	84	218	54억 4,150만
' 05년도	584	중국	584	41	543	64	167	49억 9,100만
' 04년도	443	중국	437	47	390	73	188	40억 400만
		일본	6	-	6	-	-	4,100만
' 03년도	240	중국	240	32	208	142	151	18억 8,600만

- 한편 <우리나라 피랍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총 89척이 피랍되었으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 27척에서 2004년 20척, 2006년

11척으로 감소하다가 2007년 15척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96.6%(86척)로 가장 많았으며 러시아 2척, 중국 1척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 보면 영해침범이 8척 EEZ 침범이 81척으로 나타났다.
- 한편 피랍으로 구속된 인원을 보면 2004년 21명이 구속된 이후 한 번도 구속된 적이 없었으며 지난 5년간 지급한 담보금은 총 9억5,244만원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우리나라 피랍 현황>

구 분	총 계 (척)	국가별	위 반 유 형(척)			구 속		담보금 (원)
			계	영해 침범	EEZ 침범	척수	인원	
'07년도	15	일본	15	4	11	-	-	7,515만
'06년도	11	일본	10	-	10	-	-	10,463만
		중국	1	-	1	-	-	520만
'05년도	16	일본	15	2	13	-	-	28,350만
		러시아	1	-	1	-	-	1,800만
'04년도	20	일본	19	1	18	2	21	18,519만
		러시아	1	-	1	-	-	2,430만
'03년도	27	일본	27	1	26	-	-	25,647만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해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 불법어호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영해를 지키는 경

차공무원의 단속 및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다.”며 “정부는 외국불법어선의 침범을 막기 위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해양경찰인력에 대한 안전관리 및 단속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구속된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 조업 근절교육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3) 국가상징물 방치하는 공공기관 직무유기 심각

■ 공공기관 국기계양 및 관리실태 점검결과, 법원, 경찰서, 소방서 등 33개 기관이 법규정 무시 (2008년 10월 2일)

- 정부는 2008년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6개 시·도 공공기관 200곳을 대상으로 국기계양 및 관리실태를 실시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김소남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공공기관 국기계양관리 및 실태점검 결과>자료에 따르면 총 200개 공공기관 중 16.5%인 33개 기관이 법규정 위반으로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적받은 기관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광역시는 39개 공공기관 중 7개 기관이 지적받아 17.9%로 가장 많았고 대구광역시 17.8%, 경상북도 17.6%, 전라남도 16.7% 순으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 한편 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는 수도사업소, 노인복지회관, 노동청, 농협, 우체국 등 7곳이 지적받았고 대구광역시는 소방서, 우체국, 농협중앙회 등 5곳, 경상북도는 보건소, 주민센터, 경찰서 지구대

등 9곳이 지적받았다. 또한 전라남도는 세무서, 보호관찰소, 면사무소, 보건지소 등 4곳이 지적받았고 제주도는 법원, 보건소, 농협 등 3곳이 지적받았으며 강원도는 박물관, 우체국, 경찰서 치안센터 등 5곳이 지적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요 지적사례별로 살펴보면, 국기의 깃면이 찢어지거나 일부가 떨어져 나간 채 게양한 기관이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수기 게양 시 국기 등 게양위치가 잘못된 기관이 7곳, 국기게양대가 있으나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기관 6곳, 국기가 심하게 오염된 채 게양한 기관 5곳,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지 않은 기관이 1곳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사항으로는 게양대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거나 게양대가 잘 보이지 않은 경우, 그리고 깃대간 간격에 비해 태극기 크기가 너무 큰 것을 게양한 사례가 있었다.

- 현행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제3항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또한 「태극기사랑운동실천지침」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신축건물에 대한 국기꽃이 설치 관리·감독, 노후된 게양대 및 깃봉의 도색 등 정비, 태극기의 게양과 게양위치 등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법을 준수하고 법치국가를 선도해야 할 법원, 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라고 말하며 “특히 국기계양은 국가에 대한 존엄성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등 국민통합과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임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공무원에 대한 국기계양관리의 중요성 및 관련 법규정에 대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고 말했다.

- 한편 김의원은 “내일 10월 3일은 개천절이다. 최근 국경일에 국기 계양하는 사람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을 볼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극기 계양 등 국가상징에 대한 존엄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국기계양 홍보 및 캠페인 등 국가상징 선양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태극기를 비롯한 국가상징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상징물을 통합한 근거법령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취지에서 「대한민국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 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하며 입법 추진계획을 밝혔다.

<08년 7월 공공기관 국가 계양관리 실태점검 결과>

점검지역	점검기관수	지적받은 기관 수	지적받은 기관명	비고
계	200	33(16.5%)		
전라남도	24	4(16.7%)	○ 00보건지소 ○ 00면사무소 ○ 00보호관찰소 목포지소 ○ 00세무서	
대구광역시	28	5(17.8%)	○ 00소방서 00119안전센터 ○ 00대구지점 ○ 00우체국 ○ 00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0000	
강원도	38	5(13.2%)	○ 00세무서 ○ 00우체국 ○ 000보건소 ○ 00국립박물관 ○ 00경찰서 000치안센터	
인천광역시	39	7(17.9%)	○ 000수도사업소 ○ 00 수도사업소 ○ 000 노인복지회관 ○ 00지방노동청 0000지청 ○ 00인천지사 ○ 000농협 ○ 0000 우체국	
경상북도	51	9(17.6%)	○ 000 주민센터 ○ 00 00우체국 ○ 00보건소 ○ 00경찰서 00지구대 ○ 000 농협 서부지점 ○ 000 보건지소 ○ 00 면민회관 ○ 000 경찰문화센터 ○ 0000산림조합	
제주도	20	3(15.0%)	○ 000 보건소 ○ 0000 법원 ○ 000 농협	

<주요지적 유형별 현황>

- 1) 국기의 깃면이 찢어지거나 일부가 떨어져 나간 채 게양한 사례
 - 00군 00면 보건지소, 00세무서, 00시 00동 주민센터, 00시 00우체국, 00소방서 00119안전센터, KT&G 00지점, 000보건소, 00체국, 00시 00수도사업소, 00경찰서 000지구대 등
- 2) 국기가 심하게 오염된 채 게양한 사례
 - 00시 00구 노인복지회관, 00지방 노동청 00북부지청, KT00지사, 00시 00동 우체국, 00시 농협 00지점
- 3) 다수기 게양시 국기 등 게양위치가 잘못된 사례
 - 00보호관찰소 00지소, KT&G 00지점, 00세무서, 00구 수도사업소, 00보건소, 00지방노동청 00북부지청, 00농협
- 4)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
 - 00시 00-00 통합보건지소
- 5) 국기게양대가 있으나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사례
 - 00시 00동우체국, 00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00중앙지점, 00시 00면민회관, 00시 경찰문화센터, 00군 산림조합
- 6) 특이사항
 - 일부 기관에서는 게양대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거나 게양대가 작아서 게양대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었음
 - ※ 00시 00국립박물관, 00경찰서 00동치안센터
 - 일부 기관에서는 깃대간 간격에 비해 태극기 크기가 너무 큰 것을 게양한 사례가 있었음
 - ※ 00도 00시 법원

(4) 대부업체 44.7%가 불법 사각지대

**■ '05년 53.6%→ '06년 75%→ '07년 41%
대부업체 위반
(2008년 10월 3일)**

- 최근 고리사채 등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빚을 갚지 못해 자살하는 등 서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등록된 대부업체 또한 법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 사례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감독원에서 김소남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대부업체 정기검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대표적인 대부업체 132개소를 선정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44.7%인 59개소의 대부 업체에서 83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었다.
-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17,399개소의 대부업체로 정기검사가 확대될 경우 약 7,000여 개소의 대부업체가 불법행위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 대부업체는 지난 3년간 '폭언이나 관계인에게 채무상환 독촉', '채무관

련 이외의 개인정보 요구’, 채무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 사용’, ‘채무 관련인 이외의 신용정보 조회’, ‘무자격자 등록, 명의 대여 금지 위반’ 등의 불법을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최근 서민들의 급박한 자금사정을 이용하여 고리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비양심 대부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등록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것은 그동안 제도권 금융제도로 유인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실효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다.”라며 “앞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대부행위는 활성화 시키면서 대부업체 불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 대부업자 검사실적>

(단위 : 건)

검사결과 지적사항	건수	비 고
채무관련 이외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경우	27	표준약관 제20조
채무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사용토록 한 경우	18	표준약관 제10조
대부 계약서 기재, 교부 및 보관을 소홀히 한 경우	12	대부업법 제6조
채무관련인 이외의 신용정보 조회	5	신용정보법 제24조
폭언이나 관계인에게 채무상환을 독촉한 경우	4	대부업법 제10조
무자격자 등록, 명의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대부업법 제4조
영업장에 대부계약 주요내용 미게시	2	대부업법 제9조
불공정약관 사용	1	표준약관 제13조
대부업 광고 부적절	1	대부업법 제9조
채권양도담보 제공승낙서 부적절	1	표준약관 제19조
기타	10	
합계	83	

(5) 공문서 위·변조 사범 최근 4년간 79.8% 증가 (2008년 10월 4일)

- 최근 사기 및 대출, 유흥업소 취업, 대리시험 등을 목적으로 한 공문서 위·변조 사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가운데, 경찰청이 김소남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공문서 위·변조 사범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공문서 위·변조는 2004년 4,695건에서 2005년 5,562건, 2006년 4,785건, 2007년 6,041건으로 최근 4년간 28.7% 증가하였으며, 단속사범은 2004년 8,019명에서 2005년 11,984명, 2007년 14,421명으로 최근 4년간 7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구속율>은 2004년 23.4%에서 2005년 19.8%, 2006년 7.5%에서 2007년 4.3%로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구속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 한편 최근 4년간 공문서 위·변조 사범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전체의 28.7%(12,901명)로 가장 많았고, 경기 15.8%(7,127명), 인천 13.6%(6,105명), 부산 10.9%(4,903명)로 4개 시·도가 전체의 69%(31,036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문서 위·변조사범 단속 현황>

(단위: 건, 명)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건	명 (구속)	건	명 (구속)	건	명 (구속)	건	명 (구속)
계	4,695	8,019 (1,878)	5,562	11,984 (2,367)	4,785	10,589 (791)	6,041	14,421 (620)
서울	1,026	2,175 (469)	1,394	3,532 (875)	1,239	3,044 (283)	1,458	4,150 (167)
부산	399	994 (202)	569	1,462 (141)	493	1,326 (35)	474	1,121 (24)
대구	163	381 (62)	157	417 (94)	174	392 (41)	248	677 (41)
인천	679	1,038 (515)	1,049	1,720 (503)	742	1,382 (135)	909	1,965 (115)
광주	58	76 (2)	56	81 (2)	35	53 (5)	66	117 (6)
대전	56	85 (3)	52	64 (4)	39	74 (1)	103	184 (3)
울산	33	84 (20)	59	99 (26)	84	173 (4)	93	193 (6)
경기	635	1,136 (273)	828	1,664 (405)	755	1,514 (157)	1,255	2,813 (139)
강원	128	310 (21)	198	399 (64)	173	367 (30)	188	434 (32)
충북	124	263 (34)	146	272 (28)	126	356 (22)	163	444 (8)
충남	105	218 (28)	150	367 (12)	183	530 (10)	204	624 (15)

- 특히 최근 중국에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밀반입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주민등록증 위·변조 범죄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445건에서 2006년 396건으로 감소하다가 2007년 522건으로 최근 3년간 1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위·변조로 인한 구속율은 2005년 48.5%에서

2006년 18%, 2007년 7%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주민등록증 위·변조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구 분	발생건수	검거인원		
		소계	구속	불구속
2005년	445	507	246	261
2006년	396	448	81	367
2007년	522	428	30	398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해 김소남 의원은 “최근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를 위·변조한 금융사기 범죄가 날로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매우 낮아져 공문서 위·변조 사범이 급속히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공문서 위·변조 방지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공문서 위·변조 사범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6) 2007년~2008년 상반기 동안,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재정 경제부 등 23개 주요 공공기관 사이버테러 습격 당해!

**■ 건강보험공단, 제3자가 의사와 공모하여
홈페이지에 부정 접속하여 개인정보
빼내....**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비공개 게시물
비밀번호 해킹...
(2008년 10월 7일)**

- 최근 민간 및 공공기관의 사이버 테러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 행정안전부에 대한 김소남 의원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의 질의에 따르면, 지난 2007년도에 사이버테러 침해를 당한 공공기관은 12개소, 2008년 상반기에 13개소 공공기관으로 나타났다.
-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공공기관 사이버침해 현황>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2007년도에는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국정홍보

처, 인천시청, 강원도청, 한국석유공사, 김천소방서, 부천상대박물관, 울산동부소방서, 강원지방청, 대전중부서 등 12개소 공공기관이 사이버 침해를 당하였으며 2008년 상반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우정사업본부, 울릉군청, 서울청기동대, 건강보험관리공단, 경기대, 동국대, 전주공업대, 부산여대, 호남대, 경남영산고, 해성고, 인천청학중학교 등 13개 기관이 해킹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기관 사이버침해 현황>

연도별	관련기관
2007년	재경부, 외통부, 산자부, 국정홍보처, 인천시청, 강원도청, 한국석유공사, 김천소방서, 부천상대박물관, 울산동부소방서, 강원지방청, 대전중부서 등 12개 기관
2008.6월	공정위, 우정사업본부, 울릉군청, 서울청기동대, 건강보험관리공단(2회), 경기대, 동국대, 전주공업대, 부산여대, 호남대, 경남영산고, 해성고, 인천청학중 등 13개 기관(14회)

※ 자료 : 경찰청, 2008. 7

- 특히 국민의 건강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경우 제3자가 공단에 접속권한이 있는 의사·약사와 공모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 부정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빼내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2번이나 해킹당한 것으로 밝혀졌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홈페이지 비공개 게시물에 대해 비밀번호를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청에서 제출한 <연도별 사이버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6월 현재 사이버테러 범죄 발생건수는 57,363건 검거건수는 49,071건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사이버테러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03년 68,445건에서 2004년 77,099건, 2006년 82,186건, 2007년

88,847건, 2008년 6월 현재 57,363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단위: 건수)

연도	유형	총 계	사이버테러형		
			소 계	해 킹	바이러스
' 03	발생	68,445	14,241	14,159	82
	검거	51,722	8,891	8,844	47
' 04	발생	77,099	15,390	15,348	42
	검거	63,384	10,993	10,955	38
' 05	발생	88,731	21,389	21,336	53
	검거	72,421	15,874	15,831	43
' 06	발생	82,186	20,186	20,119	67
	검거	70,545	15,979	15,934	45
' 07	발생	88,847	17,671	17,593	78
	검거	78,890	14,037	13,988	49
' 08.6	발생	57,363	9,696	9,599	97
	검거	49,071	8,202	8,125	77

※ 자료 : 경찰청, 2008. 7

- 그러나 연도별 <사이버범죄자 구속 및 조치현황>을 보면 2003년 84명에서 2005년 68명, 2007년 33명, 2008년 상반기 8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실제 사이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범죄자 구속 및 조치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6
구속인원	84	73	68	27	33	8

※ 자료 : 경찰청, 2008. 7

- 또한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노출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하반기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최근 2년간 2,624개 공공기관에서 182,666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현황>

(단위: 건수)

연도	'06 하반기	'07 상반기	'07 하반기	'08 상반기	노출합계
노출건수	72,927	25,428	67,159	17,152	182,666
대상기관	304	531	721	1,068	

※ 자료 : 행정안전부, 2008. 7

- 정부는 이러한 사이버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전자정부통신망 구성 및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였고 2002년에는 바이러스 방역시스템 구축 및 침입탐지를 위해 보안관제실을 설치하였다.
- 그러나 현재 전자정부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정보 보호 및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인력이 고작 1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 사이버 침해 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2008년 상반기 1,582건으로 전체의 38.5%로 가장 많으나 경기도, 경북, 대구, 인천, 전북은 사이버 침해 대응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분야 사이버침해사고 대응현황>

(단위: 건수)

연도별	합계	국가기관	지자체	연구기관	교육기관	산하기관	기 타
2003년	623	10	75	7	477	37	17
2004년	3,970	798	701	155	1,537	558	221
2005년	4,549	332	768	184	2,546	672	47
2006년	4,286	456	1,470	260	1,464	620	16
2007년	7,588	625	3,827	198	2,148	706	84
2008년 6월	4,104	482	1,582	359	1,049	386	246

※ 자료 : 행정안전부, 2008. 7

<지방자치단체 사이버침해예방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명	예산	추진사항	
	'08년예산(A)	발주시기	진행현황
소 계	5,972		
서울	417	7월	사업 추진
부산	380	10월초	공고 준비
대구	-	-	-
인천	-	-	-
광주	500	10월초	공고 준비
대전	595	7월 ~ 10월	1회(7월) : 인프라 사업완료 2회(10월) : 공고 준비중
울산	690	10월초	공고 준비
경기	-	-	-
강원	700	9월	사업자 선정중
충북	800	10월초	공고 준비
충남	670	10월초	공고 준비
전북	100	10월초	공고 준비
전남	-	-	-
경북	-	-	-
경남	700	9월	사업자 선정중
제주	420	8월	사업자 선정중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최근 국가의 보안자료 및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주요 공공기관이 사이버 침해에 쉽게 노출되는 것은 우리나라 정보보안체계가 그동안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며 “특히 행정정보 공유 등 전자정부서비스가 확대되면 앞으로 보안위험은 더욱 증가될텐데 현재 사이버 침해예방 및 방지대책은 부처마다 제각각이고 부처간의 공유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철저한 보안교육 실시와 웹 방화벽 설치 등 개인정보노출을 최소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부처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 테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7) 농어촌 137가구 인터넷사용료 없어 PC 환수당해

**■ 정보화마을, 농어촌 정보격차 해소위해 보급
한 PC, 농어촌 노인들의 정보 접근권 보장
해야..**

(2008년 10월 7일)

- 정부는 지역간, 계층간, 도농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며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생활화 촉진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정보화 마을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 국정감사 행정안전부에 대한 김소남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의 질의에 따르면 2008년 6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보화 마을은 338개로 나타났으며 그 중 보급된 PC는 총 25,204대로 조사되었다.
-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166대로 가장 많으며 경북 4,008대, 강원 3,310대, 전남 3,116대, 전북 2,262대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PC를 보급받은 농어촌 지역 가구 중 인터넷 사용료가 없어 PC를 환수조치 당한 가구는 총 137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78대로 가장 많았고, 강원 28대, 경남 12대

순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도시와 농·어촌간의 정보격차가 심화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정보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PC를 보급하고 있지만 인터넷 사용료를 못내고 있다는 이유로 PC를 환수조치 하는 것은 본래의 정보화 마을 사업의 취지에 어긋난다.” 며 “경제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농어촌 지역에 사는 대상의 대부분이 노인들임을 감안할 때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어촌 노인들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화마을 PC보급 가구의 인터넷 사용료 연체현황>

(단위 : 대, 건)

시 도	PC 보급대수	인터넷 사용현황		
		계	인터넷 사용료 연체현황	사용정지 현황
총 계	25,204	137	116	21
부 산	240	0	0	0
대 구	188	0	0	0
인 천	85	0	0	0
광 주	157	0	0	0
대 전	100	0	0	0
울 산	314	0	0	0
경 기	4,166	78	72	6
강 원	3,310	28	21	7
충 북	1,362	6	5	1
충 남	2,841	9	3	6
전 북	2,262	2	2	0
전 남	3,116	0	0	0
경 북	4,008	2	1	1
경 남	1,757	12	12	0
제 주	1,298	0	0	0

(8) 정부조직개편 법률작업 미흡 심각

■ 최소 62개 법률, 기존부처 명칭 그대로 명 시돼 있어 (2008년 10월 7일)

-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발표되고 법령작업이 완료되어 지난 2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공포된 가운데 국정감사 행정안전부에 대한 김소남 의원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의 질의에 따르면 현재 존재 하지 않는 과거부처의 명칭이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법률에 명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소남 의원이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에 따르면 최소 62개 법률에서 기존 부처의 명칭이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명시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 부처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13건으로 가장 많으며 ‘농림부’ 8건, ‘방송위원회’ 7건, ‘문화관광부’ 6건, ‘기획예산처’ 6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소송법 제6조에서는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총무처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존의 명칭에 대한 개정

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법령정비작업은 법치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정부조직 개편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이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법령작업이 현행 제도와 상황에 맞게 규정될 수 있도록 미개정된 법률 개정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고 말했다.

<정부부처 조직개편 미 개정된 법률 현황>

부처별	법률 (62)
행정자치부 (7)	도시철도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 지하수법,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중앙인사위원 (1)	청소년보호법
재정경제부 (4)	공탁법, 동서남해안발전 특별법, 새만금사업추진을 위한 특별법, 양곡관리법,
기획예산처 (6)	공탁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영유아보육법, 자연재해대책법, 정부법무공단법
방송위원회 (7)	공공기록물관리예관법률 제46조, 공직선거법 제8조의5,7,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기상법 제1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3조,
정보통신부 (1)	검찰청법 제16조제2항
문화관광부 (6)	도서관법,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자연공원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해양생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산업자원부 (3)	비료관리법 제10조,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중재법 제40조
농림부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에 관한 특별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주세법, 지하수법
해양수산 (2)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건설교통부 (3)	자동차교통관리 개선 특별 회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천법
보건복지부 (1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활동 구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병역법, 수의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연재해대책법, 장사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등에 관한 법률,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1)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9)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범죄 최근 3년간 79% 증가

■ ‘뇌물수수’ 전체의 64.4%, 3급 이상 공무원 28.2% 로 가장 많아.. (2008년 10월 7일)

- 국정감사 행정안전부에 대한 김소남 의원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의 질의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범죄는 2006년 98건에서 2007년 125건, 2008년 8월말 117건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최근 3년간 <지방공무원의 유형별 범죄현황>을 살펴보면, 총 340건 중 ‘뇌물수수’가 229건으로 전체의 6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무유기’ 24.7%, ‘직권남용’ 10.9%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장 범죄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8		
	뇌물 수수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뇌물 수수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뇌물 수수	직권 남용	직무 유기
서울	25	0	1	22	1	6	41	0	0
부산	0	0	0	2	1	0	2	0	0
대구	6	1	0	2	0	0	1	3	1
인천	1	0	4	5	4	2	7	0	3
울산	0	0	0	3	0	0	0	0	0
경기	10	4	6	9	0	8	6	0	15
강원	4	0	4	5	2	3	6	0	6
충북	5	0	0	0	0	0	0	3	0
충남	1	1	0	1	0	0	0	0	2
대전	0	0	0	0	8	0	1	0	0
전북	3	0	3	4	0	5	2	0	0
전남	1	0	2	7	1	2	1	1	1
광주	1	0	0	0	0	0	0	0	0
경북	4	6	2	11	0	0	5	1	2
경남	3	0	0	7	0	4	1	0	2
제주	0	0	0	0	0	0	4	0	0
계	64	12	22	78	17	30	77	8	32

- 한편 2008년 8월 현재 <직급별 범죄현황>을 보면 전체 117건 중 3급이상인 33건으로 전체의 28.2%로 가장 많았으며 6급이 21.3%, 7급 18.8% 순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5%로 가장 많고 경기 17.9%, 강원 10.2%순으로 나타났다.

<직급별 범죄현황>

구 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계
2003	0	3	17	35	23	13	4	8	103
2004	1	4	11	34	26	8	4	23	111
2005	1	22	32	66	58	12	2	19	212
2006	2	7	10	23	30	6	2	18	98
2007	4	8	27	38	26	5	2	15	125
2008.8	33	11	8	25	22	9	4	5	117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 스스로가 금품, 향응, 수수나 청탁 등 부패행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조직 내에서 용인되고 있기 때문이다.”며 ”부패를 방지하고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0) 행정정보 DB 구축사업 지역고용격차 심화

■ 최근 3년간 서울 38.7%, 울산 0.2% (2008년 10월 7일)

- 정부는 경기 조기진작과 청년실업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전자정부의 ‘행정정보 DB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에 국정감사에서 김소남 의원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행정정보 DB 구축사업의 지역고용 격차가 매우 심각해 지역적 소외현상마저 느낀다”고 주장했다.
-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 3년간 지역별 고용현황>을 보면 전체 45,958명 중 서울은 17,785명(38.7%), 대전 12,018명(26.2%), 경기 6,559명(14.3%)이 고용된 반면 울산은 105명(0.2%), 제주 159명(0.3%), 전북 296명(0.6%)으로 고용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장이 서울·경기·대전 중심으로 설치되어 이 지역에 고용인력이 편중되고 있으며 국내 DB 구축관련 사업자의 소재지도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행정정보 DB 구축사업이 청

년실업 해소와 경기부양에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며 ”동 사업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고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여 고용 편중을 완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지역별 고용인원 대비표>

(2007. 12. 31 기준)

시도명	2005년		2006년		2007		합계	
	고용 인원	비율(%)	고용 인원	비율(%)	고용 인원	비율(%)	고용 인원	비율(%)
서울특별시	8,864	38.4	6,053	45.5	2,868	30	17785	38.7
부산광역시	627	2.7	591	4.4	221	2.3	1439	3.1
대구광역시	277	1.2	192	1.4	341	3.6	810	1.8
광주광역시	169	0.7	186	1.4	1,189	12.4	1544	3.4
대전광역시	7,942	34.4	2,874	21.6	1,202	12.6	12018	26.1
인천광역시	292	1.3	420	3.2	548	5.7	1260	2.7
울산광역시	58	0.3	41	0.3	6	0.1	105	0.2
경기도	3,270	14.2	1,622	12.2	1,667	17.4	6559	14.3
강원도	258	1.1	60	0.5	197	2.1	515	1.1
충청북도	125	0.5	619	4.7	492	5.1	1236	2.7
충청남도	507	2.2	91	0.7	501	5.2	1099	2.4
경상북도	175	0.8	143	1.1	40	0.5	358	0.8
경상남도	130	0.5	155	1.2	47	0.5	332	0.7
전라북도	116	0.5	113	0.9	67	0.7	296	0.6
전라남도	188	0.8	105	0.8	150	1.6	443	1
제주특별자치도	90	0.4	40	0.3	29	0.3	159	0.3
합 계	23,08	100	13,35	100	9,565	100	45958	100

(11) 주민등록 예약민원처리제 유명무실

- 충북 청주시 1,369건으로 가장 많이 처리...
- 충북 괴산군 등 23개 지역 처리건수 0건,
(2008년 10월 8일)

- 행정안전부는 2007년 4월부터 근무시간 내에 각종 주민등록 민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특정일을 지정, 근무시간 후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예약민원처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 그러나 국정감사 행정안전부에 대한 김소남 의원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의 질의에 따르면 주민등록예약민원처리제가 실적이 적고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여러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지난 2007년 4월부터 12월까지 <예약민원 처리제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9개월 동안 총 15,365건이 처리되었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4,938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3,849건, 충북 1,404건, 인천 871건, 부산 966건, 대전 774건 순으로 처리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입세대 열람이 6,4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등초본 발급이 3,667건, 통합전출입 2,963건, 정정 1,024건, 인감발급 912건 등으로 나타났다.

- 한편 주민등록예약민원처리제를 가장 많이 활용한 지역은 충북 청주시로 1,369건을 처리하였고 경기도 성남시 1,009건, 경기도 화성시 618건 순으로 처리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충북 괴산군, 경북 봉화군 등 23개 지역의 경우 주민등록예약 민원처리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10건 이하로 처리된 곳은 무려 102개 지역에 이르고 있다.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주민등록예약민원처리제는 지역별로 사용편차가 크고 이용율이 저조하여 예산 낭비 및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며 ”동 사업이 찾아가는 행정 민원서비스의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시행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등록 예약민원처리제의 이용실적>

	신규 등록	출생 등록	재등 록	정정	세대 합가	세대주 변경	국외이 주신고	통합 전출입	중발급	전입 세대 열람	등초본 발급	인감 발급	계
계	8	137	26	1,024	93	108	1	2,963	0	6,426	3,667	912	15,365
서울	4	64	10	304	60	64	1	1,633	0	1,186	1,156	426	4,938
경기	2	34	5	333	16	24	0	667	0	1,506	1,148	114	3,849
강원	0	0	0	9	0	0	0	9	0	89	42	5	154
인천	0	4	0	81	2	1	0	51	0	584	143	5	871
광주	0	0	0	10	0	0	0	4	0	12	98	188	312
대구	0	2	1	27	2	2	0	56	0	136	185	15	426
대전	0	4	1	43	2	2	0	40	0	605	59	18	774
울산	0	1	0	12	1	1	0	21	0	205	18	3	262
충남	0	1	1	21	0	1	0	50	0	39	111	20	244
충북	0	6	0	21	0	3	0	31	0	1,275	57	11	1,404
경남	0	7	2	44	1	3	0	75	0	95	126	35	388
경북	1	2	1	31	0	3	0	101	0	42	70	10	261
전남	0	2	1	12	1	1	0	27	0	48	60	28	180
전북	0	5	0	28	1	1	0	15	0	173	272	15	510
제주	0	1	0	4	0	0	0	8	0	4	17	2	36
부산	1	4	4	44	7	2	0	145	0	427	105	17	756

(12) 행정안전부 매일 47건 꼴로 해킹공격 받아

- 지식경제부 매일 109.1건 꼴로 공격당해
- 국제해킹 매일 227건 꼴로 침해시도!
(2008년 10월)

- 국정감사 행정안전부에 대한 김소남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의 질의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외부의 해킹공격이 심각하여 전자정부시스템의 보안관리체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제출한 <2008년 중앙행정기관 침해시도 탐지건수 및 차단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해킹 침해 시도’가 가장 많은 부처는 지식경제부로 9개월 동안 무려 29,917건의 해킹 공격을 받아 매일 109.1건 꼴로 해킹침해를 당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16,487건, 행정안전부 12,894건, 농촌진흥청 11,702건 순이다.
- 또한 ‘해킹 차단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농촌진흥청(8,106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해양경찰청 5,743건, 농림수산식품부 4,779건, 행정안전부 4,056건 순이다.
-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중앙행정기관의 모든 해킹시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외부해킹이 공격할 경우 보안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차단 되는 ‘침해시도 탐지건수’와 해킹공격이 심각한 위협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전문 보안인력이 직접 차단하는 ‘차단건수’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다.

- 특히 정보보안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의 경우 9개월 동안 총 12,894건의 해킹시도가 탐지되었으며 차단건수는 4,056건으로 나타났다. 해킹시도 탐지건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매달 1,432건의 해킹이 탐지되고 있었고 매일 47건 꼴로 해킹 침해시도가 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해킹공격의 근원지를 살펴보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해킹공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국제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행정기관을 위협하는 <국제 사이버 테러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62,193건의 해킹시도가 있었으며 매일 227건 꼴로 해킹공격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27,606건으로 전체의 4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14.6%(9,119건), 러시아 7.2%(4,455건), 독일 3%(1,890건) 순이다.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의 정보망을 뚫기 위한 외국의 해킹시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이버 전쟁을 공공연히 선포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며 “정부는 사이버 테러에 대한 국가간 대응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이버 수사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부처별 해킹시도 현황>

(침해시도 탐지건수 / 차단건수)

부처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계
감사원	36/22	504/12	351/13	173/16	17/13	22/15	30/18	45/23	37/16	1215/148
과학기술부	806/11	189/26	2/2	0/0	0/0	0/0	0/0	0/0	0/0	997/39
관세청	143/64	5154/83	687/45	169/47	652/56	561/54	157/75	127/54	196/114	7846/592
교육과학기술부	0/0	0/0	82/31	94/47	211/49	144/44	1375/40	208/62	536/62	2650/335
교육인적자원부	62/27	1799/25	1/1	6/0	0/0	0/0	0/0	0/0	0/0	1868/53
국가보훈처	58/13	2759/51	66/32	76/37	73/38	62/13	96/9	662/17	78/12	3930/222
국무조정실	65/21	155/6	0/0	3/0	1/1	0/0	1/1	0/0	0/0	225/29
국무총리실	0/0	0/0	21/12	23/9	24/13	27/11	53/26	45/19	33/20	226/110
고충위	869/15	448/9	2/0	0/0	0/0	0/0	0/0	0/0	0/0	1319/24
국민권익위원회	0/0	0/0	51/22	28/14	43/17	112/26	67/22	263/17	132/19	696/137
국정홍보처	525/160	4204/555	26/25	8/1	2/0	0/0	0/0	0/0	0/0	4765/741
국토해양부	0/0	0/0	110/24	50/17	82/23	55/27	88/51	97/29	165/35	647206
금융감독위원회	7/6	479/10	0/0	7/0	0/0	0/0	0/0	0/0	0/0	493/16
금융위원회	0/0	0/0	8/4	6/2	13/9	10/2	87/11	50/8	26/0	200/36
기획재정부	0/0	0/0	69/43	78/51	153/41	83/35	85/36	110/57	99/48	677/311
노동부	89/3	450/18	642/17	119/9	19/7	27/9	81/12	52/7	132/5	1611/87
농림수산식품부	0/0	0/0	9/2	2/1	3/3	8/3	8/1	6/1	4/0	40/11
문화관광부	60/44	65/27	1788/29	0/0	0/0	0/0	0/0	0/0	0/0	1913/100
문화체육관광부	0/0	0/0	722/443	1128/705	1080/679	10686/963	824/567	939/691	1108/749	16487/479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92/1	141/7	90/6	64/9	86/5	79/29	105/11	109/20	26/5	992/93
방송위원회	0/0	0/0	2/1	1/1	0/0	0/0	1/1	0/0	0/0	4/3
방송통신위원회	0/0	0/0	926/302	713/177	952/117	702/58	641/76	477/95	921/102	5332/927
법제처	2586/11	280/8	33/6	36/15	159/10	65/13	62/16	94/24	36/12	3351/115
보건복지가족부	0/0	0/0	184/117	476/109	194/115	334/91	127/80	150/107	98/69	1563/688
보건복지부	72/18	548/69	16/5	0/0	0/0	0/0	0/0	0/0	0/0	636/92
산업자원부	495/47	344/23	12/6	0/0	0/0	0/0	0/0	0/0	0/0	851/76
소방방재청	63/11	317/38	113/36	259/10	297/15	361/25	132/35	147/40	102/37	1791/247
세정경제부	123/21	180/36	3/2	0/0	0/0	0/0	0/0	0/0	0/0	306/59
정보통신부	11517/680	4827/680	411/60	0/0	0/0	0/0	0/0	0/0	0/0	16755/1420
조달청	1104/289	517/233	508/295	577/316	512/298	612/306	693/397	582/339	257/139	5362/2612
지식경제부	0/0	0/0	2494/377	6526/324	4008/239	4395/151	4638/229	5343/330	2513/247	29917/1897
청소년위원회	48/25	336/65	6/6	0/0	0/0	0/0	0/0	0/0	0/0	390/96
통계청	451/63	718/71	110/39	478/48	412/51	890/47	604/52	203/46	148/60	4014/477
해양수산부	898/44	745/55	13/3	2/0	4/4	1/0	2/0	0/0	0/0	1665/106
행정안전부	0/0	180/1	256/70	1016/97	722/107	548/152	3390/198	1371/233	1216/165	8699/1023
행정자치부	301/59	3556/95	4/2	13/0	1/1	0/0	0/0	0/0	0/0	3875/157
환경부	1287/41	665/70	484/125	218/94	252/132	568/172	233/126	235/103	215/125	4157/988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기획재정부	48/21	147/121	108/56	85/41	62/49	69/60	39/34	33/19	43/35
공정거래위원회	218/66	475/178	527/173	443/109	552/218	531/299	305/88	358/243	352/272
국민권익위원회	18/10	33/28	44/36	43/18	65/57	434/56	43/31	39/30	29/24
국세청	932/241	453/182	704/210	1007/108	1865/187	487/195	421/214	324/171	175/159
통일부	1/1	96/34	168/50	208/98	223/100	110/61	70/22	67/22	91/28
외교통상부	108/63	133/95	201/169	254/206	495/405	392/343	201/154	484/265	373/331
법무부	113/82	147/127	96/68	80/55	114/80	91/80	72/53	87/78	51/44
대검찰청	86/54	207/176	307/265	367/298	402/350	319/283	117/82	330/277	374/327
병무청	161/21	155/32	217/44	285/52	540/101	283/169	131/66	202/167	179/162
행정안전부	356/215	324/136	195/120	219/139	210/111	726/666	717/655	846/454	602/537
광주정부통합센터	1284/2	160/1	243/1	94/3	77/2	340/4	118/4	117/2	164/2
경찰청	109/75	140/116	147/111	354/158	638/343	582/351	311/254	303/252	256/203
보건복지가족부	0/0	0/0	0/0	0/0	0/0	0/0	0/0	0/0	1/0
기상청	218/143	391/360	281/246	311/261	233/177	220/190	178/128	661/563	521/463
여성부	621/43	138/65	187/75	151/66	273/150	225/159	149/87	422/112	262/194
농촌진흥청	308/131	700/346	1491/660	1305/742	1751/1225	1829/1533	1606/1304	1545/1251	1167/914
산림청	174/94	187/102	221/166	252/174	386/334	558/507	339/299	477/416	604/508
중소기업청	437/296	272/190	295/189	434/280	450/307	476/366	364/292	583/509	906/852
특허청	30/19	50/39	59/45	226/207	70/47	90/84	112/102	292/190	285/264
식품의약품안전청	448/304	672/342	419/243	369/192	400/249	390/256	250/185	387/304	263/126
해양경찰청	231/74	412/154	427/220	567/315	746/468	1202/1000	1302/1082	1444/1322	1187/1108
농림수산식품부	352/189	922/775	726/341	702/331	949/488	793/619	403/295	1057/868	987/873
문화재청	258/140	441/322	2661/1605	971/457	264/130	149/92	97/84	488/76	116/90
국토해양부	335/190	605/457	302/158	384/94	355/151	297/170	152/82	545/215	552/218

<국가별 부처별 해킹시도 현황 (상위 10개국)>

구 분	중국	한국	미국	브라질	독일	영국	인도	러시아	터키	폴란드	기타	계
계	7601	4775	1788	394	450	294	163	391	323	137	2754	19,070
감사원	46	59	7	0	0	0	0	0	3	0	33	148
과학기술부	8	11	5	1	1	0	2	0	0	1	10	39
관세청	273	131	32	4	4	3	2	4	13	0	126	592
교육과학기술부	70	105	49	8	11	6	1	1	14	2	68	335
교육인적자원부	12	10	8	1	4	2	1	2	6	0	7	53
국가보훈처	95	71	16	2	5	1	0	0	9	0	23	222
국무조정실	8	12	1	0	0	0	0	0	2	0	6	29
국무총리실	37	39	6	0	2	0	1	4	2	1	18	11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	17	0	0	0	0	0	0	1	0	4	24
국민권익위원회	52	26	10	6	5	6	2	0	10	2	18	137
국정홍보처	242	89	99	11	22	7	8	128	9	5	121	741
국토해양부	57	69	17	6	6	6	2	1	7	1	34	206
금융감독위원회	0	4	1	0	0	0	0	0	11	0	0	16
금융위원회	10	18	1	1	0	0	0	0	4	1	1	36
기획재정부	60	36	86	7	17	8	0	10	13	0	74	311
노동부	4	48	12	1	1	0	0	0	3	1	17	87
농림수산식품부	6	1	1	0	0	0	0	0	0	0	3	11
문화관광부	28	46	6	2	0	0	0	3	5	1	9	100
문화체육관광부	3001	389	399	94	55	67	38	52	38	46	618	4,79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7	18	12	6	3	1	4	1	2	0	19	93
방송위원회	1	1	1	0	0	0	0	0	0	0	0	3
방송통신위원회	230	261	95	23	24	30	10	14	15	7	218	927
법제처	28	45	7	12	2	0	0	1	3	1	16	115
보건복지가족부	314	109	67	20	21	10	5	10	17	4	111	688
보건복지부	5	22	17	4	4	3	1	2	4	2	28	92
산업자원부	19	45	2	0	2	0	0	0	2	0	6	76
소방방재청	58	144	17	0	5	1	0	0	1	0	21	247
세정경제부	8	18	6	1	2	0	1	1	8	0	14	59
정보통신부	192	682	101	23	33	28	14	28	28	22	269	1,420
조달청	1110	427	157	43	87	55	41	55	24	9	604	2,612
지식경제부	497	630	198	32	44	23	17	20	15	10	411	1,897
청소년위원회	86	4	3	0	1	0	0	0	1	0	1	96
통계청	56	198	76	8	14	8	1	15	10	8	83	477
해양수산부	18	29	12	1	7	1	3	1	2	0	32	106
행정안전부	446	303	74	27	23	8	4	11	15	6	106	1,023
행정자치부	64	48	10	2	3	1	0	1	8	1	19	157
환경부	362	149	162	16	42	16	4	25	17	6	189	988

구 분	계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독일	영국	브라질	캐나다	터키	네덜란드	기타
기획재정부	634	306	148	52	12	16	3	2	8	36	5	46
공정거래위원회	3761	1486	571	324	36	62	364	21	66	29	70	732
국민권익위원회	748	432	72	65	10	24	6	3	7	10	7	112
국세청	6368	3261	567	163	27	28	14	21	13	37	6	2231
통일부	1034	239	201	182	16	21	12	2	6	13	11	331
외교통상부	2641	1120	556	435	38	78	32	7	71	44	26	234
법무부	851	314	38	119	28	39	13	28	15	26	16	215
대검찰청	2509	1247	374	214	76	69	58	30	12	14	56	359
병무청	2153	734	461	83	23	96	34	56	7	21	36	602
행정안전부	4195	948	1633	456	38	34	47	182	37	95	42	683
광주정부통합센터	2597	2597	0	0	0	0	0	0	0	0	0	0
경찰청	2840	853	813	321	43	47	47	66	48	42	48	512
보건복지가족부	1	0	0	0	0	0	0	0	0	0	0	1
기상청	3014	838	312	812	76	96	43	36	103	28	38	632
여성부	2428	478	982	63	41	12	84	74	26	24	32	612
농촌진흥청	11702	4305	4617	1136	140	222	218	218	84	139	60	563
산림청	3198	482	1311	367	101	74	83	80	54	42	24	580
중소기업청	4217	1988	1043	674	76	123	30	72	31	42	31	107
특허청	1214	480	194	178	13	29	12	14	13	33	18	230
식품의약품안전청	3598	2120	481	268	32	55	24	27	38	41	55	457
해양경찰청	7518	2771	3689	339	48	88	35	97	83	85	36	247
농림수산식품부	6891	3814	1613	588	54	140	80	91	223	46	44	198
문화체육관광부	5445	1472	139	369	3115	42	23	11	25	49	62	138
국토해양부	3257	2631	190	123	21	45	7	37	57	17	16	113
합 계	82,814	34,916	20,005	7,331	4,064	1,440	1,269	1,175	1,027	913	739	9,935

3. 서울 특별시

(1) 서울시, 16개 시·도중 균형발전평가 15위! (2008년 10월 8일)

- 국정감사 서울시에 대한 김소남 의원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의 질의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2007년 12월 정부의 균형발전추진평가에서 16개 시·도 가운데 157.33점으로 15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균형발전추진실적, 사업추진 협력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우수시책 등을 평가하였으며 지역별 평가결과를 보면 충북이 18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광주 172.5점, 충남과 강원도는 171.7점, 전북 171.5점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서울특별시는 그동안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다.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주도하고 선도해야 할 서울특별시가 오히려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며 “균형발전사

업의 조직 및 예산확보와 강북, 강남의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및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상생발전 전략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시도 점수 및 순위 현황 >

순 위	시 도	합계(200점)
1	충 북	183.00
2	광 주	172.50
3	충 남	171.67
3	강 원	171.67
5	전 북	171.50
6	경 북	170.67
7	경 남	166.67
8	전 남	165.67
9	대 구	165.50
10	부 산	162.50
11	경 기	161.50
12	제 주	160.33
13	대 전	159.17
14	울 산	158.67
15	서 울	157.33
16	인 천	148.83

< 시도 평가표 >

평가항목 (배점비율)	평가지표	평가기준	배점	점수	
1. 지역단위 평가결과 (50점)	1-1. 지역단위 평가결과	- 지역별 평가결과 반영	50		
2. 균형발전 자체시책 추진노력 및 실적 (100점)	2-1. 균형발전 관련 자체 예산확보 노력(10점)	- 시도별 균특예산 대비 자체시책 관련 예산규모	10		
	2-2. 균형발전 제도개선 실적 (40점)	- 균형발전 조직정비, 관련 조례제정, 지역혁신협의회 · 지역발전아카데미 운영 개선 등 제도개선 실적	40		
	2-3. 대표 시책 (50 점)	기획 (20)	독창성	- 자체사업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계획에 반영했는지	20
			다양성	- 자체 사업을 어느 정도 다양하게 기획·추진했는지	
	2-3. 대표 시책 (50 점)	집행 (20)	예산확보 및 집행실적	- 지방비, 민자 등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집행했는지	20
			지역혁신의 노력도	- 제도, 교육, 조직개선,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등에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평가	
			사업 관리 노력도	-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평가, 피드백 등 관리에 노력했는지	
2-3. 대표 시책 (50 점)	성과 (10)	직접적 성과	- 사업 추진결과가 지역과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가시적 산출	10	
		성과 기대가능성	- 인구증가, 소득증대, 고용증대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3. 균형발전 추진 협력도 (50점)	3-1.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행사, 사업추진, 자료요청 등에 어느 정도 협력했는지를 평가	50		
합 계			200		

(2) 잃어버린 10년, 자살자 수 100.6% 증가

■ 자살자 수 1998년 6,068명→2007년 12,174명

※ 6,068명은 10년간의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1997년 12월 31일 까지의 최종자살자수를 대입한 것임.

■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는 자살공화국! (2008년 10월 8일)

- 최근 연예인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자살문제가 우리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이 김소남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자살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자 수는 총 94,873명으로 잃어버린 10년 동안 10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체의 19.4%(18,40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 16.2%(15,373명), 부산 7.8%(7,376명), 경남 7.7%(7,303명) 순이다.
- 한편 지난 10년동안 자살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 106.6% 증가하였으며 뒤이어 광주 101.8% 증가하였다.

김소남의원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탄생에 가장 중요한 역할

을 했던 전북과 광주에서 자살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역차별에 의한 지역민들의 고단한 삶을 대변해주는 듯해 마음이 무겁다
“고 전했다.

<우리나라 자살자 현황>

(단위: 명)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전국	8,622	7,056	6,444	6,911	8,612	10,898	11,492	12,011	10,653	12,174	94,873
서울	1,716	1,046	919	959	1,376	1,670	1,887	2,013	1,742	2,045	15,373
부산	734	475	481	590	596	814	988	972	807	919	7,376
대구	410	394	309	267	361	500	554	561	509	568	4,433
인천	440	366	350	336	432	633	523	635	584	620	4,919
광주	158	175	151	138	189	245	273	268	232	319	2,148
대전	228	188	181	181	224	297	326	368	322	355	2,670
울산	206	131	124	156	146	233	204	218	174	207	1,799
경기	1,464	1,133	1,144	1,302	1,747	2,176	2,278	2,517	2,211	2,433	18,405
강원	439	331	299	376	429	580	541	533	477	563	4,568
충북	316	308	266	303	345	407	445	487	421	467	3,765
충남	445	443	433	451	446	589	653	702	625	734	5,521
전북	287	340	314	355	443	538	522	492	476	593	4,360
전남	335	444	330	320	445	515	505	476	440	484	4,294
경북	577	612	569	534	650	742	792	753	707	802	6,738
경남	728	562	488	546	688	814	872	867	812	926	7,303
제주도	139	108	86	97	95	145	129	149	114	139	1,201
국외	24	19	16	22	19	34	31	36	35	41	277

- 또한 <수단별 자살자 현황>을 보면 ‘목땀·압박 및 질식으로 인한 자살’은 전체의 38.6%(36,656명)로 가장 높았으며 ‘살충제에 의한 음독자살’은 25.8%(24,466명), 투신자살은 13%(12,337명)순이다

<수단별 자살자 현황>

(단위: 명)

원인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합계	8,622	7,056	6,444	6,911	8,612	10,898	11,492	12,011	10,653	12,174	94,873
음독	1,586	1,461	1,487	1,712	2,631	3,301	3,534	3,126	2,747	2,881	24,466
목매	3,403	2,362	2,073	2,170	2,651	3,696	4,181	5,399	4,669	6,052	36,656
투신	721	646	651	726	1,334	1,703	1,795	1,599	1,454	1,708	12,337
기타	2,912	2,587	2,233	2,303	1,996	2,198	1,982	1,887	1,783	1,533	21,414

- <직업별 자살자 현황>을 살펴보면, 무직·가사·학생이 전체 자살자의 54%(38,56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11.3%(8,050명), 농업·임업·어업종사자 9.7%(6,936명), 사무종사자 6.2%(4,448명)순이다.

- 이에 김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극심한 경제적 불안과 실업률, 그리고 교육정책의 남발로 교육의 마루타로 전락한 학생들이 겪는 부담은 더욱 심화되었다.”며 “교육 및 경제정책의 부실이 결국 무직자, 주부 및 학생 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직업별 자살자 현황>

(단위: 명)

직업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계	7,383	5,859	5,253	5,429	6,558	8,111	8,279	8,576	7,421	8,580	71,449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36	30	25	17	24	36	35	35	31	32	301
전문가	145	101	57	59	80	90	125	158	134	174	1,123
기술공	241	142	134	127	187	240	251	249	195	250	2,016
사무종사자	408	308	267	306	376	497	516	595	524	651	4,448
서비스업	775	538	534	553	739	1,020	1,038	1,008	884	961	8,050
농업,임업,어업	818	732	679	672	766	777	751	671	545	525	6,936
기능 종사자	440	296	218	256	290	331	307	296	227	214	2,875
기계 종사자	283	180	118	98	177	186	170	154	135	141	1,642
노무종사자	440	290	327	298	345	417	436	377	303	303	3,536
무직,가사,학생	3,639	3,110	2,750	2,915	3,424	4,304	4,447	4,835	4,159	4,978	38,561
기타	158	132	144	128	150	213	203	198	284	351	1,961

※직업별(15~64세)

- 교육정도별로 보면 고등학교가 전체의 39.1%(27,972명)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20.4%(14,613명), 초등학교 20.3%(14,502명), 대학 이상 15.9%(11,347명)순이다.

<교육정도별 자살자 현황>

(단위: 명)

교육정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계	7,383	5,859	5,253	5,429	6,558	8,111	8,279	8,576	7,421	8,580	71,449
불취학	293	296	243	236	266	291	283	237	245	227	2,617
초등학교	1,725	1,385	1,192	1,254	1,426	1,678	1,676	1,605	1,323	1,238	14,502
중학교	1,597	1,267	1,168	1,179	1,461	1,691	1,682	1,675	1,428	1,465	14,613
고등학교	2,799	2,156	1,985	2,058	2,489	3,174	3,240	3,420	2,969	3,682	27,972
대학이상	960	743	661	693	899	1,248	1,353	1,584	1,376	1,830	11,347
미상	9	12	4	9	17	29	45	55	80	138	398

※ 교육정도별(15~64세)

- 또한 혼인상태별로 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전체의 50%(47,27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혼 25.2%(23,762명), 사별 14%(13,311명), 이혼 9.7%(9,172명)순이다.

<혼인상태별 자살자 현황>

(단위: 명)

혼인상태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계	8,548	6,995	6,414	6,877	8,580	10,865	11,449	11,970	10,618	12,121	94,437
미혼	2,606	2,054	1,792	1,830	2,099	2,575	2,453	2,885	2,339	3,129	23,762
유배우	4,408	3,532	3,296	3,448	4,263	5,443	5,907	5,924	5,358	5,696	47,275
이혼	622	555	522	607	864	1,140	1,177	1,248	1,101	1,336	9,172
사별	888	822	786	963	1,325	1,646	1,787	1,756	1,613	1,725	13,311
미상	24	32	18	29	29	61	125	157	207	235	917

※ (사망자수(혼인상태:15세이상))

-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전체의 19.9%(18,86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17.8%, 20대 17.7%, 50대 15%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자살자 현황〉

(단위: 명)

연령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계	8,622	7,056	6,444	6,911	8,612	10,898	11,492	12,011	10,653	12,174	94,873
0-9세	7	7	7	4	0	1	1	1	1	1	30
10-14세	67	54	23	30	31	32	42	40	34	52	405
15-19세	393	309	241	193	203	265	206	239	198	257	2,504
20-24세	616	492	432	391	425	546	494	608	429	620	5,053
25-29세	900	625	501	535	593	678	594	753	613	937	6,729
30-34세	884	684	600	644	778	911	814	936	641	968	7,860
35-39세	1,019	858	739	718	868	1,024	1,016	986	837	984	9,049
40-44세	959	770	760	724	921	1,199	1,220	1,124	943	1,027	9,647
45-49세	764	626	548	636	827	1,047	1,190	1,225	1,146	1,204	9,213
50-54세	635	506	459	551	673	826	955	953	988	984	7,530
55-59세	652	498	514	503	592	767	861	800	817	789	6,793
60-64세	561	491	459	534	678	848	929	952	809	810	7,071
65-69세	387	365	337	451	530	876	943	1,048	925	997	6,859
70-74세	288	307	304	363	512	603	810	866	850	941	5,844
75-79세	256	238	267	310	447	597	631	646	642	743	4,777
80-84세	154	137	160	210	327	412	505	528	487	492	3,412
80세이상	234	226	253	324	533	678	786	834	780	860	5,508
85-89세	63	71	75	89	152	201	218	208	209	257	1,543
90세이상	17	18	18	25	54	65	63	98	84	111	553
연령미상	0	0	0	0	1	0	0	0	0	0	1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잃어버린 10년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수가 급증한 이유는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실업, 빈곤, 양극화 심화 등 극심한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생활고와 이로 인한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우울했기 때문이다. “며 ”정부는 앞으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번민하는 우리 국민들이 삶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밝고 희망찬 사회 분위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4. 경찰청

(1) “차 없는 날에도 오토바이는 달린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하는데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는 매
년 증가**

- 2007년 한해 오토바이 사고 15,703건 발생, 913명 사망, 18249명 부상
-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률, 일반 교통사고의 2배 이상
(2008년 9월)

- 흔히 오토바이라 불리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 운전자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 경찰청이 국회 김소남 의원(한나라당·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사망자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이 가운데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고와 사망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차종별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 분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125cc초과)	원동기 (125cc이하)	농기계	기 타	
'03년	발생	240,832	149,744	27,677	44,340	7,058	2,913	288	8,812
	사망	7,212	3,382	823	1,880	607	153	30	337
	부상	376,503	235,681	47,693	70,512	7,558	3,184	391	11,484
'04년	발생	220,755	139,675	23,214	38,837	6,635	3,634	274	8,486
	사망	6,563	2,896	747	1,749	618	194	53	306
	부상	346,987	220,909	41,296	62,568	6,993	3,995	300	10,926
'05년	발생	214,171	138,815	21,505	35,102	5,596	6,565	369	6,219
	사망	6,376	2,893	733	1,559	399	414	68	310
	부상	342,233	224,419	38,289	56,829	6,377	7,561	441	8,317
'06년	발생	213,745	142,430	17,644	33,692	7,588	6,048	361	5,982
	사망	6,327	3,009	601	1,510	472	373	55	307
	부상	340,229	229,147	32,147	54,566	8,878	6,908	467	8,116
'07년	발생	211,662	141,806	15,872	31,578	8,959	6,744	371	6,332
	사망	6,166	3,009	532	1,383	528	385	54	275
	부상	335,906	229,107	28,755	50,911	10,510	7,739	422	8,462
'08년	발생	101,051	67,386	7,606	14,303	4,824	3,341	174	3,417
1~6	사망	2,700	1,306	239	613	223	160	27	132
월	부상	156,478	106,846	13,191	22,461	5,625	3,852	200	4,303

※ 자료 : 경찰청

- 2007년 기준 오토바이 사고는 총 15,703건 발생하여 913명이 사망하고 18,249명이 부상.

이는 전체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6,166명의 15%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다.

2008년에는 1월부터 6월까지만 총 8,165건의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여 383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원인별로 보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하겠다.

<원인별 이륜차 사고 현황>

연 도 별	이 른 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무면허
2005년	82	111	96	162
2006년	85	151	59	168
2007년	118	166	78	174
2008년 1~6월	61	60	46	68

※ 2008년도 통계는 잠정 집계임

- 한편 2003년 이후 5년간 교통사고는 총 1,202,216건이 발생하여 35,344명이 사망하였는데 교통사고 1건당 평균 사망자 수가 0.029명인 반면 오토바이사고 1건당 평균 사망자 수는 0.065명으로 오토바이 사고 사망률은 일반 교통사고의 2배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2008년 7월말 현재 신고된 자동차는 16,735,767대이며, 이륜차는 1,809,494대로 도로 교통수단의 10대 중 1대를 오토바이가 차지하고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쿠터와 같이 등록이 필요 없는 50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할 경우 오토바이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하겠다.

<이륜자동차 신고현황>

50cc 이상	100cc 초과	260cc 초과	계
978,325대	791,068대	40,101대	1,809,494대

※ 자료 : 국토해양부 (*50cc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신고대상아님)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륜차는 아직도 폭주족, 퀵서비스, 배달업 등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보편적인 교통수단이라기보다는 특정층에 한정된 사람들만 관계되는 운송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이륜차는 운전면허 취득과정에서도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고, 운전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적절한 교육과 평가를 받지 않은 채 운전을 하게 됨으로써 이륜차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 사륜차 운전자 등 다른 교통참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 김소남 의원은 “오토바이는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지하철범죄 증가, 2007년 1730건!

- 노선 1Km당 2.1건, 하루 평균 5건 발생
- 종로3가역 범죄 발생 가장 빈번
- 경찰, 지하철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2008년 10월)

- 지난 2007년 지하철경찰대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된 예산은 7억9천8백만원이다.
- 한편 경찰청이 국회 김소남 의원(한나라당·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지하철 범죄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이후 감소하던 지하철 범죄가 다시 증가하여, 2007년에는 2006년 1453건에 비해 약300건이 증가한 1730건의 지하철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의 지하철 길이가 총 833.8km인 점을 감안하면,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지하철 1Km당 연간 2.1건, 하루 평균 약 5건의 범죄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지하철 연장 길이 현황 ('08.04.20 현재)>

구분	총 길이 (km)
합계	833.8
서울	286.9
부산	96.0
대구	57.3
인천	22.9
경기 (수도권전철)	329.7
광주	20.5 (2007년은 11.9)
대전	20.5

※ 자료 : 국토해양부

- 범죄유형별로는 성폭력(584), 폭력(571), 절도(451)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6년 205건에서 2배 이상 증가한 폭력사건(571건)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 역사별로는 종로3가, 신도림, 사당역 순으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종로3가는 절도와 폭력범죄가, 신도림은 성폭력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범죄발생 상위 5개역>

	1.종로3가	2.신도림	3.사당	4.교대	5.서울역
계	206	182	141	64	62
살인	0	0	0	0	0
강도	0	0	0	0	0
절도	22	15	12	7	6
성폭력	15	82	45	31	12
폭력	157	78	80	19	42
기타	12	7	4	7	2

※ 자료 : 경찰청

- 한편 지하철 경찰대 인력은 2006년 193명, 2007년 178명, 2008년 177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전국 지하철 경찰대 177명 중 행정지원 인력을 제외하면 순찰과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158명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인천, 대전, 광주는 수사인력이 전무한 실정이다.

<지하철 경찰대 현황>

구분	계			행정팀(지원팀)			순찰팀			수사팀		
	계	경찰	의경	계	경찰	의경	계	경찰	의경	계	경찰	의경
계	178	177	1	19	19		93	92	1	66	66	
서울	110	110	0	11	11		56	56		43	43	
부산	19	19	0	2	2		8	8		9	9	
대구	10	10	0	2	2		4	4		4	4	
인천	9	9	0	1	1		8	8				
경기	22	21	1	3	3		9	8	1	10	10	
광주	5	5	0	0			5	5				
대전	3	3	0	0			3	3				

※ 자료 : 경찰청

- 김소남 의원 : 지하철경찰대 인력부족도 지하철 범죄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겠으나, 그렇다고 무한정 인력을 충원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하철 범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은 지하철에 인접한 일선 경찰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하철은 우리나라 여객 수송량의 17%를 차지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늘어나는 범죄로 인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하철 범죄와 관련한 주무기관인 경찰청은 지하철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인근 경찰서와 협력하는 등 수사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하철 범죄 현황>

2006년

구 분	계	살인	강도	절 도			폭력	성폭력	기타			
				소계	치기 사범	카드 이용				일반도 일철도		
계	발생(건)	1453	0	1	308	235	3	70	205	616	323	
	검거	건	1505	0	4	285	199	6	80	212	633	371
		명	2029	0	10	328	228	4	96	514	634	543
서울	발생(건)	1304	0	1	221	196	0	25	188	590	304	
	검거	건	1329		3	214	188		26	196	607	309
		명	1818		6	234	206		28	488	608	482
부산	발생(건)	51			44	29	3	12		3	4	
	검거	건	23		1	14	4	4	6	1	2	5
		명	44		4	29	13	3	13	3	2	6
대구	발생(건)	13			1			1	6	2	4	
	검거	건	64		10	1	1	8	6	3	45	
		명	64			12	1	1	10	8	3	41
인천	발생(건)	33			17	8		9	5	5	6	
	검거	건	40		22	4	1	17	5	5	8	
		명	49			25	6		19	10	5	9
경기	발생(건)	42			24	2		22	1	15	2	
	검거	건	42		24	2		22	1	15	2	
		명	47			27	2		25	2	15	3
충남	발생(건)	8			1			1	4	1	2	
	검거	건	6		1			1	3	1	1	
		명	6			1			1	3	1	1
전남	발생(건)	2			0				1		1	
	검거	건	1		0						1	
		명	1			0						1

2007년

구분	계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성폭력	기타		
				소계	치기 사범	카드 이용	일반 도					
계	발생(건)	1730	0	4	451	322	4	125	571	584	120	
	검거	건	1644	0	4	374	264	4	106	566	581	119
		명	2262	0	6	422	294	4	124	1120	581	133
서울	발생(건)	1434	0	1	345	301		44	492	552	44	
	검거	건	1369		1	283	243		40	492	549	44
		명	1934		1	309	263		46	1020	549	55
부산	발생(건)	135		1	38	9	2	27	31	2	63	
	검거	건	135		1	38	9	2	27	31	2	63
		명	149		1	50	18	2	30	33	2	63
대구	발생(건)	75			20	1		19	39	9	7	
	검거	건	57		6	1		5	35	9	7	
		명	73			6	1		5	48	9	10
인천	발생(건)	42		2	32	11	2	19	4	4		
	검거	건	42		2	32	11	2	19	4	4	
		명	60		4	39	12	2	25	13	4	
경기	발생(건)	33			13	0		13	0	17	3	
	검거	건	33		13	0		13	0	17	3	
		명	36			16	0		16	0	17	3
광주	발생(건)	7			1			1	5		1	
	검거	건	4		0				4			
		명	6			0			6			
대전	발생(건)	4			2			2			2	
	검거	건	4		2			2			2	
		명	4			2			2			2

2008년 1~6월

구분	계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성폭	기타		
				소계	치기 사범	카드 이용	일반 절도					
계	발생(건)	816	0	0	207	151	2	54	343	242	24	
	검거	건	783	0	0	181	131	2	48	338	240	24
		명	1169	0	0	207	146	4	57	705	232	25
서울	발생(건)	679	0	0	155	131		24	297	216	11	
	검거	건	658		0	135	112		23	297	215	11
		명	1022		0	148	122		26	648	215	11
부산	발생(건)	58			21	15	2	4	19	14	4	
	검거	건	58			21	15	2	4	19	14	4
		명	64			28	19	4	5	21	11	4
대구	발생(건)	39			14	1		13	17	4	4	
	검거	건	33			12			12	14	3	4
		명	43			14			14	22	3	4
인천	발생(건)	15			9	4		5	2		4	
	검거	건	15			9	4		5	2	4	
		명	22			12	5		7	5		5
경기	발생(건)	13			3	0		3	2	8	0	
	검거	건	13			3	0		3	2	8	0
		명	11			4	0		4	4	3	0
광주	발생(건)	9			4			4	5			
	검거	건	3			0			3			
		명	4			0			4			
대전	발생(건)	3			1			1	1		1	
	검거	건	3			1			1	1	1	
		명	3			1			1	1		1

(3) 무인단속카메라 10대중 1대는 가짜 모형카메라!

■ 전남지역 76대로 최다, 국도 및 특별광역시도에 주로 설치 (2008년 10월 9일)

○ 경찰청이 아직까지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가짜 모형카메라를 철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국회 김소남 의원 (한나라당/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 2008년 8월 현재 경찰청이 운영 중인 무인단속카메라는 2996대이며, 실제 작동되지 않는 모형카메라 322대가 도로 위에 추가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 아직까지도 무인단속기 10대 중에 1대가 가짜 카메라라는 것.

<모형카메라 지방청별 현황 ('08. 8월 현재)>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22	0	28	34	30	20	8	12	25	0	51	30	0	76	0	0	8

- 지역별로는 전남 지역에 전체의 24%에 해당하는 7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어 충북 51대, 대구 34대 순이다.
- 또한 도로별로는 국도 134대, 특별광역시도 109대, 지방도 43대, 고속도로 23대, 시도 12대, 자동차전용도로 1대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청은 2005년 당시 모형카메라를 모두 철거하기로 하였으나, “교통사고 증가 우려에 대한 일부 반대여론이 있고, 예산 확보 및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하여 아직까지 철거를 미루고 있다.

<2005년 이후 모형카메라 철거현황 ('08.8월)>

모형 카메라 설치대수	철거	잔류
1,109(100%)	787(71%)	322(29%)

- 물론 모형카메라로 인한 사고예방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부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법규준수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모형·무인단속 장비를 實 단속장비로 교체해야 한다.
- 김소남 의원은 “경찰청에서는 아직 철거되지 않은 장비에 대해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實 단속장비로 교체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통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하였다.

[첨부] 도로별 모형카메라 설치 현황 (08.8월말 기준)

<도로별 모형카메라 설치 현황 (08.8월말 기준)>

지역	도 로 구 분	도로명	설치대수	
경기	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하)	1	
	자동차전용도로	자동차전용도로	1	
	국 도	1호 국도		1
		3호 국도		3
		6호 국도		2
		38호 국도		1
		39호 국도		2
		42호 국도		1
		43호 국도		1
		46호 국도		1
	시 도	수원시 팔달구		1
		수원시 장안구		1
		성남시 분당구		3
		부천시 원미구		1
		고양시 일산서구		1
		광주시		1
		안산시 단원구 성포동		1
	지 방 도	74호 지방도		1
		356호지방도		1
인천	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상)	1	
		제2경인고속도로(상)	1	
		제2경인고속도로(하)	1	
		영동고속도로(상)	1	
		서해안고속도로(하)	1	
		공항고속도로(상)	2	
		공항고속도로(하)	2	
		외곽순환도로(상)	2	
		외곽순환도로(하)	2	
		특별광역시도	해 안 로	
	경 명 로			2
	경 원 로			2
	무내미길			2
	인 주 로			2
	송 립 로			1
	호구포길			1
	남 동 로			1
	장 제 로			1
	장고개길			1
	서 곳 길			1
	비 류 길			1
	대전		특별광역시도	대전시 중구 목동 한사랑아파트 앞

		대전시 중구 중촌동 중촌초교 건너편	1
		대전시 동구 상소동 662 산흥초교 앞	1
		대전시 서구 둔산동 정부청사 북문 앞	1
		대전시 서구 정림동 불티구름다리 앞	1
		대전시 서구 탄방동 유승기업사 앞	1
		대전시 유성구 궁동 충남대 서문 앞	1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461-6 한의학 연구원 앞	1
충북	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상)	3
		중부고속도로 (하)	2
		중부내륙고속도로 (상)	1
	국도	3번국도	2
		4번국도	3
		5번국도	4
		17번국도	3
		19번국도	4
		25번국도	2
		34번국도	2
		36번국도	10
		37번국도	1
		38번국도	3
	시도	제2순환로	1
		제천시도	2
	지방도	82번지방도	2
		508번지방도	1
		510번지방도	3
		591번지방도	1
596번지방도		1	
충남	국도	1번국도	2
		4번국도	2
		6번국도	2
		29번국도	3
		32번국도	3
		36번국도	3
		37번국도	3
		39번국도	3
		96번국도	3
		지방도	603번
	606번		1
	623번		1
	635번		1
	645번		1
		799번	1
광주	광역시도	하남로	3
		남문로	2

		무진로	2		
		산정로	2		
		송정로	1		
		제봉로	1		
		중앙로	1		
		양동로	1		
		동문로	1		
		일곡로	1		
		문흥로	1		
		지산로	1		
		사암로	1		
		동곡로	1		
		삼성로	1		
		대구	국 도	5번국도	4
				30번국도	1
특별광역시도	앞산로		3		
	상 화 로		2		
	팔달로		2		
	화 랑 로		1		
	안 심 로		5		
	갓바위 길		1		
	팔 공 로		2		
	호 국 로		2		
	북비산로		1		
	신천대로		4		
	황 금 로		1		
	동 북 로		1		
	동 명 로		1		
	무 열 로		1		
	대 명 로		1		
	국채 보상로		1		
	울산		국 도	7호국도	1
				31호국도	1
광역시도		강북로	1		
		북부순환로	2		
		산업로	2		
		방어진순환로	2		
		공단로	2		
		성안로	1		
부산	국 도	14번	3		
	특별광역시도	도시고속도로	2		
		관문대로	1		
		거제로	2		
		중앙로	2		
		구덕로	1		
		낙동남로	1		

전남		낙동로	3	
		녹산산업로	1	
		르노삼성로	1	
		금곡로	2	
		부두로	1	
		가야로	1	
		동평로	1	
		신선로	1	
		황령로	1	
		충령로	1	
		강변로	2	
		남해선 연결로	1	
		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하)	1
			호남고속도로 (상)	1
	호남고속도로 (하)		1	
	국도	목포시 옥암동 영산강 하구언(목포방면)	1	
		목포시 석현동 구 검문소(목포시내방면)	1	
		나주시 대호동 쌍용 주유소(동신대방면)	1	
		장성군 진원면 울곡리(광주방면)	1	
		여수 율촌 취적 삼경주유소(순천방면)	1	
		광양 중마동 와우육교 앞(광양방면)	1	
		장흥읍 안양 수양리(보성방면)	1	
		곡성 검면 흥복리(옥과방면)	1	
		목포시 대양동 광산가든 앞(광주방면)	1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달마사 앞(시내방면)	1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공항주유소(순천방면)	1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공항주유소(여수방면)	1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삼부특수강(순천방면)	1	
순천시 별량면 금치리 태신주유소(순천방면)		1		
나주시 보산동 보산주유소 앞(목포방면)		1		
나주시 금천면 금천교회 앞(광주방면)	1			
나주시 송월동 현대자동차 앞(영암방면)	1			
광양시 광양읍 석정리 입구(광양방면)	1			
광양시 중동 컨부두4거리(광양제철방	1			

	면)	
	고흥군 두원면 고흥레미콘 앞(광주방면)	1
	해남군 문내면 충무리 대교입구(목포방면)	1
	장흥군 용산면 어동리(관산방면)	1
	장흥군 장동면 하산리 금강기사식당(장흥방면)	1
	보성군 벌교읍 척령리 다성촌 앞(보성방면)	1
	보성군 벌교읍 낙성리 낙성초교(벌교방면)	1
	보성군 보성읍 녹차 시험장 앞(장흥방면)	1
	영광군 군서면 남죽리 남동저수지 앞	1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장미마을 앞(무안방면)	1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공설 운동장 앞(함평읍방면)	1
	영암군 삼호면 산호리 대불대 앞(목포방면)	1
	영암군 덕진면 금강리 꼴산커브(광주방면)	1
	장성 남면 분향리 입구(장성방면)	1
	강진군 성전면 월남(상월)리 동부철강 앞(강진방면)	1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 신흥마을입구(광주방면)	1
	완도군 군외면 황건리 황건교회 앞(남창방면)	1
	완도군 군외면 신학리 마을직선로(남창방면)	1
	구례군 산동면 계척리 입구(구례읍방면)	1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용정마을 앞(구례읍방면)	1
	목포시 터미널 목포여상	1
	나주시 현대아파트 입구	1
	고흥군 동강남 유둔리	1
	화순군 화순읍 연양리	1
	영암군 삼호면 검문소 앞	1
	장성군 장성읍 단공리 단광마을	1
	강진군 군동면 평리	1
	나주 노안 학산 해송정 맞은편(나주방면)	1

		함평 학교 죽정 덕산마을 입구(목포방면)	1
		함평 학교 죽정 신동창(교)앞(광주방면)	1
		순천 별량 원창(별교방면)	1
		순천 해룡 호두(여수방면)	1
		보성 별교 칠동 1334(보성방면)	1
		보성 별교 호동(순천방면)	1
		여수 봉계(순천방면)	1
		여수 율촌 취적(여수방면)	1
	지방도	보성 미력 반룡리 종합병원 앞(장흥방면)	1
		순천시 풍덕동 사무소 앞(여수방면)	1
		해남군 황산면 송호리 앞(해남방면)	1
		해남군 화원면 별암리 자연과사람들 앞(목포방면)	1
		영광군 염산면 봉남(한시)리 입구	1
		화순군 도곡면 평리 입구(능주방면)	1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테마모텔 앞(능주방면)	1
		화순군 춘양면 용두리 입구(광주방면)	1
		곡성군 옥과면 이문리 외곽도로(곡성방면)	1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 금성농산 앞(지도방면)	1
		무안군 해제면 용학리 한나유치원(지도방면)	1
		진도군 의신면 거룡리 입구(임회방면)	1
		목포시 대방동 언어바위횃집	1
		나주시 봉황면	1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1
		해남읍 연동리	1
		함평군 나서면 백양리	1
		함평군 해보면 대창리 창서마을	1
		강진군 강진읍 옥치리	1
제주		지방도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16호선		1
	지방도 1136호선		2
계			322

(4) 운전면허시험장 출신 운전자 면허기록, 민간운전학원 출신자의 8.5배 !

■ 지난 10년간 운전면허시험장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355만 명, 면허기록은 2480만 건, 1명당 약 7건 !

**■ 향후 운전면허관리단 도로교통공단 이양 시, 운전자 사고 및 운전면허취득 절차상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대책 세워야
(2008년 10월 9일)**

- 국정감사 경찰청에 대한 김소남 의원(한나라당·행정안전위원회)의 질의에 따르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출신 운전자들의 면허취소·정지·법규위반·교통사고 등 면허기록이 민간 자동차전문학원 출신 운전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국정감사 경찰청에 대한 김소남 의원(한나라당·행정안전위원회)의 질의에 따르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출신 운전자들의 면허취소·정지·법규위반·교통사고 등 면허

기록이 민간 자동차전문학원 출신 운전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이처럼 지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며 운전면허시험장 출신 운전자의 면허 행정처분이 많았던 이유에 대해서 경찰청은 “운전면허시험장은 저소득층 및 운전면허 재취득자가 많이 이용하고, 운전면허 취득 후 바로 운전을 하므로 운전전문학원 출신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가 많다”고 답변한 바 있다.

- 그러나 이는 1)차사고가 나면 병원비를 비롯한 사고처리비용 부담이 더 큰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부신했다는 점과, 2)면허 재취득자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경찰청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 따라서 이러한 면허기록의 현저한 차이는 운전면허시험장과 자동차전문학원에서 각각 면허를 취득하는 절차와 취득 단계별 자격상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즉, 면허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 시수, 교육 방법 등이 실제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여지며,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 김소남 의원 : 운전에 있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면허취득부터 제대로 되어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운전면허관리단 이양과 운전면허제도 간소화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운전면허관리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을 세우고, 이양 이후에

도 경찰의 포괄적인 감독을 통해 면허관리 이양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출신별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수 추이 >

(단위 : 천명, %)

연도	국가시험장	전문학원	국가시험장 출신 비율
1998	762	450	62.9
1999	428	738	36.7
2000	351	993	26.1
2001	329	1023	24.3
2002	424	1,090	28.0
2003	157	935	14.4
2004	271	665	29.0
2005	350	589	37.3
2006	228	566	28.7
2007	252	570	30.7
합계	3552	7,619	31.8

※ 자료 : 경찰청

<출신별 운전면허 취득자 면허기록 추이>

(단위 : 천 건)

연도	국가시험장					운전전문학원				
	법규 위반	교통 사고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소계	법규 위반	교통 사고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소계
1998	2671	355	386	241	3653	29	4	3	2	38
1999	1760	403	534	193	2890	57	18	10	5	90
2000	1396	408	401	218	2423	99	35	19	14	167
2001	1850	347	555	220	2972	191	43	45	23	302
2002	1793	291	608	242	2934	241	48	69	31	389
2003	1394	290	487	244	2415	224	55	75	42	396
2004	1595	209	421	247	2472	288	41	73	45	447
2005	1184	186	319	181	1870	235	38	59	47	379
2006	835	181	286	179	1481	173	39	51	46	309
2007	1029	172	298	205	1704	233	40	61	60	394
합계	15507	2842	4295	2170	24814	1770	361	465	315	2911

※ 자료 : 경찰청

(5) 지난 3년간 발견된 위조지폐 총액 3억8천만원!

■ **경찰 위조지폐 검거율은 5%!**

■ **2007년 3614건 발생, 검거는 고작 161명**

(2008년 10월 9일)

- 김소남 의원 (한나라당·행정안전위원회)은 10월 9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한국은행이 확인한 위조지폐의 총액이 약 3억8천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 2007년에는 위조방지기능이 강화된 새 은행권이 발행되면서 한 해 동안 15,678장이 발견되었고, 이는 전년(21,939장)에 비하여 6,261장(△28.5%) 감소한 것이다¹⁾.

- 위폐의 절대적인 수가 차츰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경찰에 접수된 위폐 발생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500건 증가한 3,614건에 달했다.

위폐 총 발견장수가 15,678건임을 감안했을 때, 사건 한 건당 약 4.3장, 액수로는 약 10만6천원에 상당하는 위폐가 경찰에 접수되었다고 하겠다.

1) 참고로 위조수표는 위조지폐에 해당하지 않으며, 어음·cd등과 함께 '유가증권'에 포함.
2007년 한 해 유가증권 위조 발생 1,652건, 검거 1,111건, 검거인원 2,512명임.

- 그러나 경찰의 검거건수는 고작 182건(161명)으로, 5%라는 저조한 검거율을 보이고 있다.
- 지역별 위조지폐 발생을 살펴보면, 서울이 1,346건(검거 22건, 1.6%)으로 총량에서 압도적으로 많으며, 부산 557건(검거 71건, 12.7%), 경기 460건(검거 13건, 2.8%), 강원 272건(2건, 0.7%), 광주 180건(검거 1건, 0.6%)순이다.
- 검거율에서는 제주(1건발생, 1건검거)를 제외하고, 전북(70%), 울산(38.8%), 부산(12.7%) 순으로 높으며, 반대로 광주(0.6%), 강원(0.7%), 서울(1.6%)순으로 검거율이 저조하였다.

위폐 발생 사례에는,

- 경남 진주에서 복합기를 이용, 일만원권 11매, 오천원권 1매, 일천원권 53매 등 총 65매를 위조, '08. 1. 4. ~ 3. 23 사이 담배값·택시비 등으로 6회에 걸쳐 91,000원을 사용('08. 5. 13. 검거)하였다.
- 강원 정선에서는 복합기를 이용하여 일만원권 총 663매를 위조하여 '07. 7. 28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300매를 소지하고 들어가 200매를 슬롯머신에 사용('07. 8. 1. 검거),
- 부산 연제구에서 칼리복사기로 복사한 후 은분을 덧칠하는 방법으로 1만원권 2천여매를 위조, '06. 6월 ~ '07. 9. 20 사이 재래시장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받아가는 방법으로 1,400여회에 걸쳐 위조지폐를 행사('07. 9. 20. 검거)한 사례가 있었다.

- 한편, 위폐방지를 위해 한국은행이 주관하는 ‘위조지폐방지실무위원회’에 금년 경찰청이 유일하게 불참하였다.

위폐 단속과 범인 검거에 있어 주무기관인 경찰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아쉽다.

- 김소남 의원 : 위조지폐 문제가 아직까지는 원화의 신용도를 위협하거나 국민들이 사용을 꺼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내년부터 5만원과 10만원짜리 고액권이 발행되면 위조비용대비 범죄수익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위조지폐 제작에 대한 유인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경제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향후 경찰청은 한국은행, 조폐공사 등 관련기관과 주기적으로 위폐관련 범죄수법, 범죄동향 등 통화위조 정보를 교환하고 협조를 강화하여 위조지폐 발생을 억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5%라는 낮은 범인 검거율 제고를 위해 과학적 수사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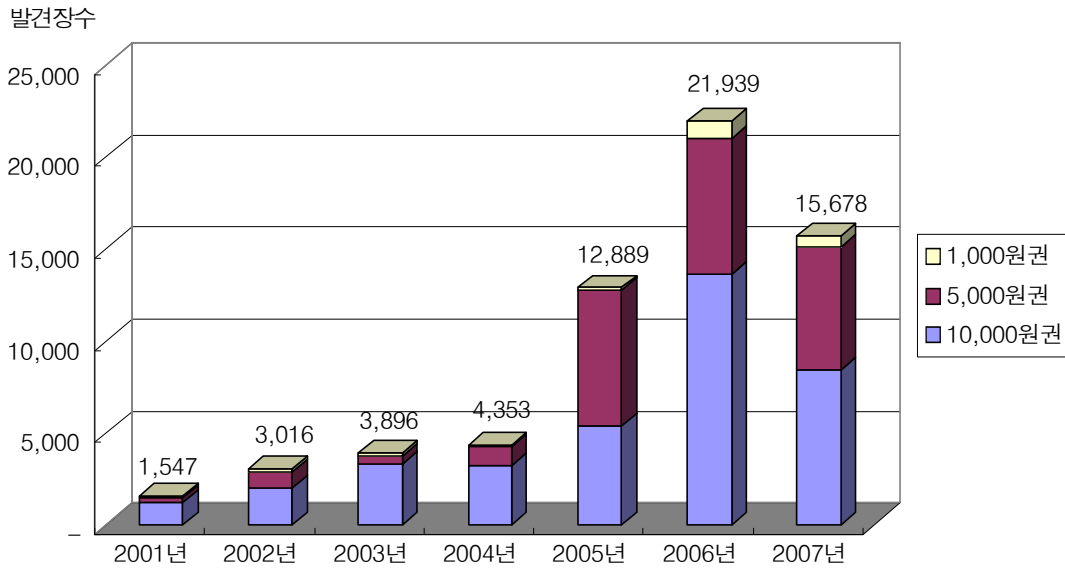
<위조지폐 발생 및 검거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7월말		
	발생	검거 건수 검거 인원	검거율	발생	검거 건수 검거 인원	검거율	발생	검거 건수 검거 인원	검거율	발생	검거 건수 검거 인원	검거율
계	1,426	83 82	5.8	3,119	97 97	3.1	3,614	182 161	5.0	1,847	93 90	5.0
서울	654	15	2.3	1273	14	1.1	1,346	22	1.6	672	19	2.8
부산	255	17	6.7	321	9	2.8	557	71	12.7	185	18	9.7
대구	6	1	16.7	17	4	23.5	38	4	10.5	45	22	48.9
인천	32	2	6.3	165	1	0.6	151	4	2.6	140	4	2.9
울산	1	0	0.0	8	0	0.0	49	19	38.8	16	2	12.5
광주	-	-	-	-	-	-	180	1	0.6	54	0	0.0
대전	-	-	-	-	-	-	177	6	3.4	128	0	0.0
경기	273	28	10.3	706	37	5.2	460	13	2.8	341	10	2.9
강원	29	1	3.4	97	2	2.1	272	2	0.7	52	1	1.9
충북	17	1	5.9	42	3	7.1	32	1	3.1	39	1	2.6
충남	61	3	4.9	290	16	5.5	166	17	10.2	83	0	0.0
전북	21	6	28.6	11	2	18.2	10	7	70.0	3	0	0.0
전남	30	2	6.7	97	3	3.1	28	3	10.7	25	4	16.0
경북	15	2	13.3	23	2	8.7	52	4	7.7	23	4	17.4
경남	32	5	15.6	68	3	4.4	95	7	7.4	38	6	15.8
제주	0	0	-	1	1	100.0	1	1	100.0	3	2	66.7

※ 자료 : 경찰청

<위조지폐 발견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위조지폐 발견장수>

(단위 : 장, %)

	2005년	2006년 (A)	2007년 (B)	B-A	
				증감	증감률
발견장수	12,889	21,939	15,678	-6,261	-28.5
만 원 권	5,404	13,624	8,438	-5,186	-38.1
5천 원 권	7,337	7,387	6,631	-756	-10.2
천 원 권	148	928	609	-319	-34.4

※ 자료 : 한국은행 (위조수표 제외)

<발견자별 위조지폐 발견장수>

(단위 : 장, %)

	2005년		2006년(A)		2007년(B)		증감률 (B-A)/A
총 계	12,889	<100.0>	21,939	<100.0>	15,678	<100.0>	-28.5
한국은행	8,739	<67.8>	9,752	<44.5>	9,009	<57.5>	-7.6
금융기관	3,999	<31.0>	4,813	<21.9>	6,200	<39.5>	28.8
일반국민	151	<1.2>	7,374	<33.6>	469	<3.0>	-93.6

※ 자료 : 한국은행, (위조수표 제외)

(6) 2007년 음주운전 채혈측정 45,383건, 14.5%인 6,570명 행정처분 변경, 처분 감경이 2/3 !

■ ‘면허취소→훈방’ , ‘훈방→면허취소’ 274건, 2008년은 상반기에만 344건!

■ 장비 불신으로 너도나도 채혈, 지난 3년간 채혈 예산집행만 15억원!
(2008년 10월 9일)

- 음주운전 호흡측정기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채혈 측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김소남 의원(한나라당.행정안전위원회)은 10월 9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작년 한 해 동안 45383건의 음주운전 채혈측정이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호흡측정 후 채혈측정을 해서 행정처분이 변경된 것은 14.5%에 해당하는 6570건으로, 감경이 4711건, 가중이 1859건이라고 밝혔다.
- 또한 ‘면허취소에서 훈방’으로, ‘훈방에서 면허취소’로 행정처

분이 두 단계나 차이가 난 경우도 2006년 242건, 2007년 274건이며, 2008년은 상반기에만 344건이 발생했다.

- 경찰청에서 구입한 음주측정기 매뉴얼에는 해당 장비가 0.100% 알콜농도에서 편차율 $\pm 0.005\%$ 이내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이를 행정처분 변경 수치와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경찰이 장비를 구매할 때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 한편, 채혈측정의 경우 채혈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전자가 아니라 경찰이 병원에 지급하고 있으며, 채혈 한 건당 소요 예산은 채혈용기 구입비를 포함하여 건당 9790원이다.

- 그런데 경찰의 ‘채혈비 집행현황’에 따르면, 작년에 총 45383건의 음주측정 채혈이 있었고 여기에 단가 9790원을 곱하면 경찰이 집행해야 하는 채혈비용은 약 4억4천4백만원이 되어야하나, 경찰이 실제로 집행한 비용은 2억9천만원에 불과하다.

이유는 채혈비용이 각 지역 병원마다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채혈비를 평균 9790원이라는 고가로 책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한 후, 지난 2년간 집행비 잔액 5억3천만원(’06년 236,547천원, ’07년 300,525천원) 채혈과 관계없는 교통업무용품이나 사무용품 등의 구입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 김소남 의원 : 채혈측정으로 인한 음주운전 행정처분 변경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접한 국민들은 음주측정기에 대해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찰은 향후 장비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장비 구매나 교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채혈 예산 편성시 사전에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불용이나 전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행정처분이 두 단계 이상 차이난 사례>

1. 약물복용으로 수치가 과다 측정된 경우

1) 부산금정서 서금지구대 관내에서 음주단속된 남모씨 상대 음주측정 한 바 0.286%가 나왔지만 본인이 음주시간이 12시간이 지났으며 평소 자신이 위가 좋지 않아 약을 먹어 그렇다고 하여 채혈한 바, 결과가 0.010%미만이 나와 무혐의 종결처분.

2) '08. 5. 3. 14:49경 서천군 판교면 판교사거리에서 교통 사망 사고 발생, 가해자는 피해자가 사망하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근처 약국에서 액체 우황청심환을 구입후 마심.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확인하기 위해 호흡측정한 결과 0.117%(취소수치)가 나왔으나 가해자는 본인이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혈액채취를 원함. 그후 혈액채취결과 0.020%가 나와 훈방조치함.

2. 측정기 오작동으로 채혈한 사례

08. 06. 24자 위반자 김모씨가 부산 진구 개금요금소 노상에서 음주운전 적발 단속되어 05:05경 측정기기(SD-400,054594D)로 측정된 바, 0.500%수치 확인되어 채혈감정의뢰 한바, 결과수치는 0.047%로 확인된 사례.

3. 구강청정제(가그린)으로 호흡측정 수치가 과다 측정된 경우

2008. 4. 15. 23:13 경 거제동 유바외과 앞에서 김모씨가 혈중알콜농도 0.118%로 단속되어 음주후 구강청정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채혈감정의뢰한 바 0.023% 결과 수치가 나옴

<2007년 음주운전 채혈측정 현황>

구분	총계	호흡측정 > 채혈결과							호흡측정 < 채혈결과							호흡측정 = 채혈결과			
		소계	취소 → 취소	정지 → 정지	취소 → 정지	취소 → 수치 이하	정지 → 수치 이하	수치 이하 → 수치 이하	소계	취소 → 취소	정지 → 정지	정지 → 취소	수치 이하 → 취소	수치 이하 → 정지	수치 이하 → 수치 이하	소계	취소	정지	수치 이하
총계	45,383	10,630	3,801	2,109	1,924	239	2,548	9	33,688	21,083	10,743	1,806	35	18	3	1,065	533	525	7
서울	8,114	1,679	500	326	281	65	505	2	6,197	3,642	2,173	371	4	7	0	238	136	100	2
부산	4,926	1,173	306	348	181	22	316	0	3,544	1,593	1,702	236	10	3	0	209	98	111	0
대구	1,759	413	195	77	68	5	68	0	1,322	847	416	59	0	0	0	24	4	20	0
인천	3,475	881	247	170	176	35	253	0	2,549	1,564	832	152	1	0	0	45	18	27	0
광주	1,057	240	83	42	50	3	62	0	801	513	244	44	0	0	0	16	6	10	0
대전	708	202	72	39	52	4	35	0	499	313	161	25	0	0	0	7	4	3	0
울산	706	144	60	28	31	0	25	0	556	407	124	25	0	0	0	6	1	5	0
경기	9,662	2,252	883	412	407	39	509	2	7,206	4,670	2,146	372	15	3	0	204	103	98	3
강원	1,873	708	256	111	144	21	172	4	1,137	767	324	45	0	1	0	28	15	13	0
충북	2,055	406	160	95	65	4	82	0	1,606	945	583	76	0	1	1	43	16	27	0
충남	2,692	605	224	134	105	8	134	0	2,039	1,430	517	90	2	0	0	48	16	32	0
전북	1,710	486	172	97	73	12	131	1	1,200	820	324	55	1	0	0	24	14	10	0
전남	2,511	715	313	107	181	8	106	0	1,758	1,239	439	77	1	1	1	38	18	19	1
경북	1,231	284	140	33	53	7	51	0	928	696	182	49	0	1	0	19	9	10	0
경남	2,077	293	134	62	37	6	54	0	1,683	1,180	401	99	1	1	1	101	65	35	1
제주	827	149	56	28	20	0	45	0	663	457	175	31	0	0	0	15	10	5	0

<채혈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예산	건	지급 대상액	실제 집행액	미지급액	예산 불용액
채혈 비	2005	179,613	44,999	266,394	173,064	93,330	6,549
	2006	325,141	41,595	246,242	149,098	97,144	176,043
	2007	325,141	45,383	268,667	160,610	108,057	164,531
	2008.7.	286,112	24,362	144,223	72,973	71,250	213,139
채혈 용기 비	2005	146,955	44,999	197,996	203,016	-5,020	-56,061
	2006	265,421	41,595	183,018	204,917	-21,899	60,504
	2007	265,421	45,383	199,685	129,427	70,258	135,994
	2008.7.	233,561	24,362	107,193	128,654	-21,461	104,907
계		2,027,365	312,678	1,613,418	1,221,759	391,659	805,606

<2007년 지방청별 채혈비 집행현황 (채혈용기 제외)>

구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채혈 건수	80,136	14,549	8,679	3,105	6,069	1,874	1,214	1,268	18,340	3,038	3,704	4,779	2,934
집행액 (천원)	160,610	20,378	8,748	3,559	6,750	4,861	1,314	1,556	25,733	5,664	4,931	26,801	11,658
평균 단가(원)	2,004	1,401	1,008	1,146	1,112	2,594	1,082	1,227	1,403	1,864	1,331	5,608	3,973

구분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채혈건수	4,307	2,178	3,861	1,505
집행액 (천원)	11,616	6,609	16,979	4,453
평균 단가(원)	2,697	3,034	4,396	2,959

(7) 경찰, 지난 3년간 통신장비 1001개 분실!

■ 사적으로 분실한 장비만 141개 (2008년 10월 9일)

- 경찰은 2007년에 한해에만 24000대, 254억원에 해당하는 정보화 장비(휴대폰,무전기,교통용PDA)를 구입했다.
- 그런데 ‘정보화장비 분실현황’ 자료에 의하면 경찰은 지난 2005년 이후 휴대폰조회기 499대, 휴대용무전기 472대, 교통용PDA 30대 등 통신장비 1001개를 분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약3억원(구입비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분실로 인한 변상과 신규 구입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크다고 본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근무 시간 이후 사적인 활동 중 부주의로 분실한 것만 141개나 된다.
이는 개인정보라던가 차량조회가 가능하여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통신장비에 대한 경찰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경찰의 보안의식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 김소남 의원 : 통신장비는 개인정보유출이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장비 관리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 장비이다. 장비 신규구입에 앞서 보유 장비에 대한 관리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시기 바람.

<정보화장비 분실 현황>

구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30)		
		조회기	무전기	PDA	조회기	무전기	PDA	조회기	무전기	PDA	조회기	무전기	PDA
계	1001	179	139	8	106	130	5	161	80	11	53	123	6
서울	271	56	29	1	9	17	1	50	10	3	18	76	1
부산	97	16	12	0	15	11	0	17	16	0	5	5	0
대구	55	8	6	0	7	7	0	13	8	0	2	4	0
인천	46	11	4	0	6	4	0	10	2	1	5	3	0
광주	13	3	4	0	0	0	0	1	1	0	0	4	0
대전	8	0	0	0	0	0	0	2	0	1	1	3	1
울산	30	5	7	0	3	2	1	1	5	0	2	3	1
경기	173	16	32	3	20	42	1	19	17	2	5	15	1
강원	26	7	0	0	4	4	0	9	0	0	2	0	0
충북	34	8	4	0	3	8	0	3	4	1	1	2	0
충남	47	17	9	0	8	4	1	5	1	0	0	1	1
전북	55	7	6	4	8	13	0	10	3	0	3	1	0
전남	41	7	11	0	2	6	1	2	6	1	3	1	1
경북	64	12	8	0	16	1	0	13	4	0	5	5	0
경남	33	4	6	0	4	8	0	5	3	2	1	0	0
제주	8	2	1	0	1	3	0	1	0	0	0	0	0

<분실원인 및 조치결과>

휴대폰 조회기	분실 원인	계	사건처리		교통단속	112출동	검문검색	수사	부주의
		499	114		44	80	44	131	86
휴대용 무전기	분실 원인	계	집회 시위	사건 처리	교통단속	112출동	검문검색	수사	부주의
		461	182	25	55	92	27	27	53
교통용 PDA	분실 원인	계	사건처리		교통단속	112출동	검문검색	수사	부주의
		30	8		18	2	0	0	2

※ 부주의는 근무 종료 후 사적인 활동 중 분실한 것임

※ 변상이 대부분인 것은 업무 중 장비관리 소홀 및 개인의 실수로 인한 것임

<장비별 평균 구입 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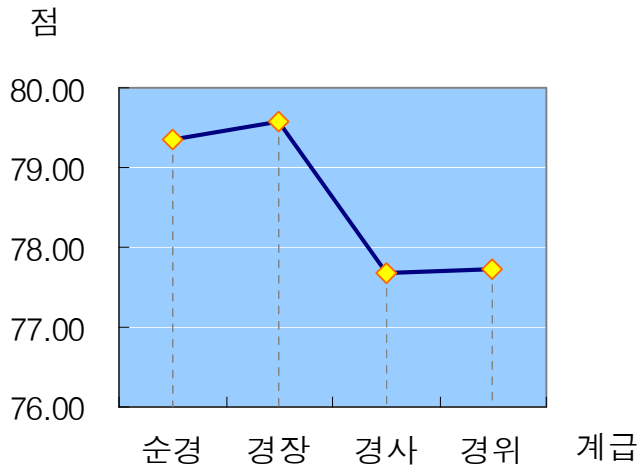
구분	휴대폰 조회기	휴대용 무전기		교통용 PDA
		TRS 무전기	VHF 무전기	
평균	235,100	970,000	336,660	

(8) 경찰관 10명 중 1명은 사 격 낙제자!

(2008년 10월 9일)

-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회에 걸쳐 경위이하 경찰관 237131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격훈련에서, 1/10에 해당하는 23081명이 60점 미만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개별 점수를 보면 10점부터 99점까지 분포되어 있고, 20점인 경찰관들도 34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소속 기관별 사격 실력도 천차만별이다.
경찰수사연수원 65점부터 경찰종합학교 88점에 이르기까지 최저점과 최고점을 받은 기관의 평균점수는 23점이나 차이가 나고 있다.
- 또한 직급별로 보면 순경 79.54점, 경장 79.58점, 경사 77.67점, 경위 77.73점으로, 경사계급의 점수가 가장 낮고, 경장 계급의 실력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별 평균 사격 점수>



- 지난 5년간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실제 총을 발사한 것이 314건이다.
이 가운데 12.1%는 총을 사용하고도 검거하지 못했고, 범인 가운데 4명이 중상, 3명은 사망.
- 경찰관의 사격실력은 국민안전과 직결된다고 하겠는데, 경찰청이 국민들의 안전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러움.
청장은 경찰관 사격실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보고하시기 바람.

<경찰관의 총기사용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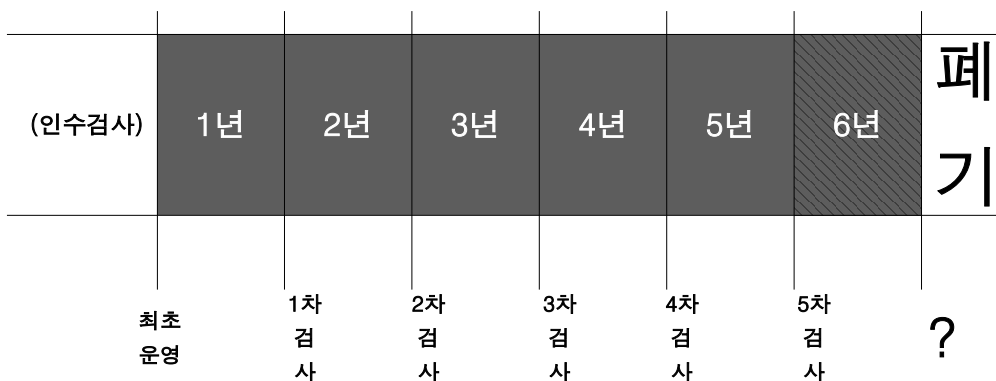
연도	총기 사용건수	검거인원		부상정도			
		검거	미검	피해없음	경상	중상	사망
2003	95	84	11	90	5	0	0
2004	66	59	7	57	6	2	1
2005	47	40	7	43	2	1	1
2006	50	39	11	46	4	0	0
2007	35	35	0	33	2	0	1
2008.7.	21	19	2	19	1	1	0
계	314	276 (87.9%)	38 (12.1%)	288	20	4	3

※ 자료 : 경찰청

(9)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폐 기직전 무인단속기도 정기검 사, 4년간 20억원 예산낭비 (2008년 10월 9일)

- 조달청 고시와 경찰내부 규정에 의하면 무인단속장비 수명은 6년이고, 연1회 장비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경찰은 한 장비에 대해 6년동안 6번의 정기검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다.
그런데 6년차 폐기 대상 장비의 경우, 6회차 정기검사일과 폐기일이 같게 되어 검사하고 나자마자 폐기해야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6회차 정기검사는 불필요하다.

<무인단속장비 검사주기>



※ 자료 : 경찰청 자료, 김소남의원실 채구성

- 한편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3년간 6회차 장비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비율은 전체 폐기대상 장비의 86%에 해당하는 412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폐기되는 장비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하는 이유는 공단이 검사주기를 잘 지키지 않고, 경찰청이 한 장비에 대해 5번 정기검사 예산을 편성해 주면 되는데 6번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 2005년 이후 현재까지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0억이 넘는 예산을 불필요하게 편성하고 집행.

또, 2002년 이후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수가 급증했음을 감안했을 때 경찰청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2009년 15억6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되며, 앞으로도 연간 수십억의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 ☞ 김소남 의원 : 무인단속기 정기검사는 대당 155만원 이상의 고가의 국비가 들어가는 만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일차적으로 무인단속기 정기검사 기간을 준수해야 함.

또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서 경찰청 단속처리지침이나 장비 규격서에 “6년차 폐기대상인 무인단속장비에 대한 정기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시행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5. 소방방재청

(1) 불별더위로 인한 폭염진료 환자 4년 동안 59.4% 증가!

- 폭염진료환자 '04년 5,339명→ ' 05년 6,452명→' 06년 7,337명→' 07년 8,508명으로 해마다 급증
- 폭염관련 진료비 '04년 2억7천8백만원에서 ' 07년 4억3천 500만원으로 56.9% 증가
- 최근 4년동안 연령별·성별 폭염환자 분석결과, 60세 여성 노인이 14%(3,881명)로 가장 높아
- 연령별, 60세 이상 노인 22%(6,228명), 9세 이하 어린이 17.1%(2,612명)순으로 높아
- '07년도 지역별 폭염환자 충북(22.8%), 경기(14%), 전남 (12.8%) 순으로 많아
- 폭염관련 구조활동 '05년 458명→ ' 06년 804명→' 07년 1,005명으로 해마다 급증
- 지난 3년간 폭염관련 구조활동 시 사망자 12명에 달해
- 최근 4년간 폭염관련 구급활동 61세이상 노인이 40.3%로 제일 높아..
- 폭염으로 인한 열대야 발생일 '04년 48일→ ' 05년 60일 →' 06년 72일→' 07년 82일로 해마다 증가
- 사회취약계층인 여성·노인·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폭염예방대책 마련돼야...
(2008년 8월 5일)

- 최근 불별더위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사망사고 등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폭염진료현황>자료를 보면, 폭염진료 환자는 2004년 5,339명에서 2006년 7,337명, 2007년 8,508명에서 2008년 3월 현재 2,190명으로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2008년 연도별 폭염관련 진료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입원	외래
2004년	5,339	417	4,922
2005년	6,452	379	6,073
2006년	7,337	377	6,960
2007년	8,508	362	8,146
2008년 3월	2,190	34	2,156
총계	29,826	1,569	28,257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7

- 폭염관련 병명을 살펴보면 열사병, 일사병, 열 실신, 열 탈진 등이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 4년 동안 폭염관련 진료환자는 59.4% 증가하였다.
- 한편 <폭염관련 진료비 현황>을 보면, 2004년 약 2억7천800만원에서 2005년 3억4천9백만원, 2007년 4억3천6백만원으로 최근 4년간 5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2007년 폭염관련 총 진료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입원	외래
2004년	277,878	148,716	129,162
2005년	348,610	166,655	181,955
2006년	413,901	194,801	219,100
2007년	435,935	207,788	228,147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7

-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60세 이상 노인이 22.5%(6,22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9세 이하의 어린이가 17.1%(2,612명)로 그 다음으로 높았고 성별로 보면 여성이 53.3%(14,719명)로 남성 46.7%(12,917명)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최근 4년간 연령·성별을 종합해 볼 때 60세이상 여성노인의 폭염 진료비가 14%(3,881명)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취약계층인 여성, 노인, 어린이에 대한 폭염예방대책이 시급한 것을 말해주고 있다.

<연령별·성별 폭염진료현황>

(단위 : 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5,339	2,553	2,786	6,452	3,102	3,350	7,337	3,390	3,947
0세~9세	1,064	607	457	1,534	829	705	995	562	433
10세~19세	430	235	195	482	286	196	600	347	253
20세~29세	557	241	316	637	275	362	825	351	474
30세~39세	725	364	361	978	473	505	1,231	537	694
40세~49세	800	411	389	857	440	417	1,094	544	550
50세~59세	552	254	298	670	320	350	861	388	473
60세이상	1,211	441	770	1,294	479	815	1,731	661	1,070

구분	2007년			합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8,508	3,872	4,636	27,636	12,917	14,719
0세~9세	1,133	614	519	4,726	2,612	2,114
10세~19세	632	362	270	2,144	1,231	914
20세~29세	927	364	563	2,946	1,240	1,715
30세~39세	1,484	627	857	4,418	2,001	2,417
40세~49세	1,327	659	668	4,078	2,054	2,024
50세~59세	1,013	480	533	3,096	1,442	1,654
60세이상	1,992	766	1,226	6,228	2,347	3,881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7

- 또한 지난 2007년 폭염진료 환자를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충북지역이 22.8%(1,939명)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경기지역 14%(1,189명), 전남지역 12.8%(1,085명), 충남지역 10.4%(884명) 순으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 폭염진료현황>

(단위 : 명)

구분	2007년		
	계	입원	외래
계	8,508	362	8,146
서울	444	19	425
부산	318	7	311
대구	169	10	159
인천	268	6	262
광주	314	11	303
대전	136	11	125
울산	80	7	73
경기	1,189	56	1,133
강원	218	18	200
충북	1,939	9	1,930
충남	884	14	870
전북	432	49	383
전남	1,085	61	1,024
경북	324	33	291
경남	498	45	453
제주	210	6	204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7

- 한편 2005년부터 2008년 7월까지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폭염관련 구급활동 실적>을 보면, 총 이송건수는 2,438건으로 2005년 458건에서 2006년 804건, 2007년 1,005건에서 2008년 7월 현재 171건으로 폭염으로 인한 구급활동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이송 건수는 총 371건이며 이중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12명, 현장처리 66명, 기타 263건으로 나타났다.
- 현장처리는 얼음팩 처치로 체온을 저하시키고 산소 공급 및 정맥주사 처치를 의미하며 기타사례로는 환자상태가 호전되어 귀가조치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관련 구급활동 실적>

(단위 : 건수, 명)

구분	출동	미이송건수				이송 건수	이송 인원
		소계	사망	현장처리	기타		
총계	2,438	371	12	66	293	2,067	2,090
2005	458	87	1	21	65	371	373
2006	804	132	6	18	108	672	676
2007	1,005	135	5	21	109	870	886
2008년 7월	171	17	0	6	11	154	155

※ 자료 : 소방방재청, 2008. 7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 3년간 폭염으로 인한 구급활동 실적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총 1,993명 중 61세이상 노인이 40.7%(811명)로 가장 높았고 41세에서 50세가 15%(3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관련 구급활동 실적>

(단위 : 건수, 명)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10세이하	25	31	42	98
11세~20세	25	44	40	109
21세~30세	40	80	62	182
31세~40세	39	74	82	195
41세~50세	51	110	139	300
51세~60세	62	100	136	298
61세이상	170	284	357	811
합계	412	723	858	1,993

※ 자료 : 소방방재청, 2008. 7

- 한편 폭염으로 인해 열대야도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기상청에서 제출한 <연도별 열대야 발생현황>을 보면 최근 4년간 일일 최적기온 25도 이상인 열대야 발생일수는 2004년 48일에서 2005년 60일 2006년 72일에서 2007년 82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열대야 발생현황>

(단위 : 일)

구 분	일 수
2004년	48
2005년	60
2006년	72
2007년	82
합계	262

※ 자료 : 기상청, 2008. 7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해 김소남 의원은 “매년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폭염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안되고 있는 등 폭염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며 “날로 심화되고 있는 폭염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폭염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에 대한 폭염예방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폭염예방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또한 김 의원은 “폭염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폭염을 ‘자연재해’의 범주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보시스템이나 체계정보 등 폭염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할 부서와 협조 부서간의 명확한 역할분담도 필요하다.” 고 말했다.

※참고자료

<폭염관련 구급활동 실적 중 현장처리 및 기타사례>

□ 현장처리 사례

- 음주 후 장시간 햇빛에 노출된 환자를 얼음팩 처치로 체온저하
- 철거작업 중 어지러움·탈수·우측마비 현상으로 산소 공급, 안위도모
- 경찰기동대원 훈련도중 탈수, 의식혼미로 산소공급, 정맥주사 처치
- 천식환자가 폭염으로 호흡 곤란을 보여 산소공급, 흡입기로 호흡보조

□ 기타 사례

- 만취자로 약간의 두통 있다고 하였으나 병원이송 거부해 귀가조치
- 장기간 외출로 육체적 피로, 현장도착시 환자상태 호전 이송거부
- 생수공급 및 병원치료 필요함을 고지하였으나 환자가 이송거부
- 환자가 회복되어 출동 중 귀소
- 운동 후 휴식 중인 학생을 열경련으로 오인하여 신고
- 구급대 현장도착 시 환자상태 호전되어 관계자에게 인계
- 도보로 가던 중 폭염으로 쓰러진 환자를 동료들이 응급처치
- 국토대순례 행군도중 열경련이 발생하여 경찰차가 병원으로 이송
- 구급대가 현장도착,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호전되어 미이송
- 농사일중 폭염으로 두통과 사지마비 증세를 보여, 시원한 그늘로 이동
- 현장도착시 주위 사람이 나무그늘로 옮긴 후였고 환자상태 확인한 바 약간의 미열 외에는 상태 양호하여 충분한 수분 공급
- 논두렁에서 환자발생으로 현장 출동, 쓰러져 있어 시원한 그늘에 이동
- 열경련 환자로 현장도착시 호전되어 시원한 장소로 이동 후 물 공

급

- 장시간 발열 등으로 인하여 환자발생, 젖은 수건을 이용하여 체온저하
- 농부가 탈진하여 119에 신고, 환자 시원한 곳으로 이동 후 음료 제공
- 운동 도중 탈수 및 현기증을 호소, 시원한 곳으로 이동 후 이온음료 공급
- 등산도중 땀을 많이 흘려 그늘진 곳으로 이동 후 이온음료 제공

(2) 벼락 맞을 확률' 매년 증가해

■ 낙뢰사고로 해마다 11명씩 죽거나 다쳐.. (2008년 10월 10일)

- 지난 6월 충북에서 소백산을 오르던 등산객 2명이 낙뢰에 맞아 다쳤고 강원도 홍천에서는 낙뢰를 맞은 한 농장이 불타 8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내는 등 최근 낙뢰로 인한 피해사고가 속출함에 따라 더 이상 낙뢰도 무시할 수 없는 자연재해의 하나라는 인식이 잇따르고 있다.
- 국정감사 소방방재청에 대한 김소남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의 질의에 따르면 <낙뢰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004년 7명에서 2006년 11명, 2007년 23명으로 최근 4년간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뢰사고로 인한 사상자 현황>

(단위: 명)

연도	평균	2004	2005	2006	2007	비 고
계	11.25	7	4	11	23	
사망(명)	5	5	2	5	8	08년 6월현재 부상 3명발생
부상(명)	6.25	2	2	6	15	

- 또한 <낙뢰사고로 인한 재산피해 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총 9억 5

백84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연도별로 보면 2005년 2억 5,753만원에서 2006년 3억296만원, 2007년 3억4,535만원으로 재산피해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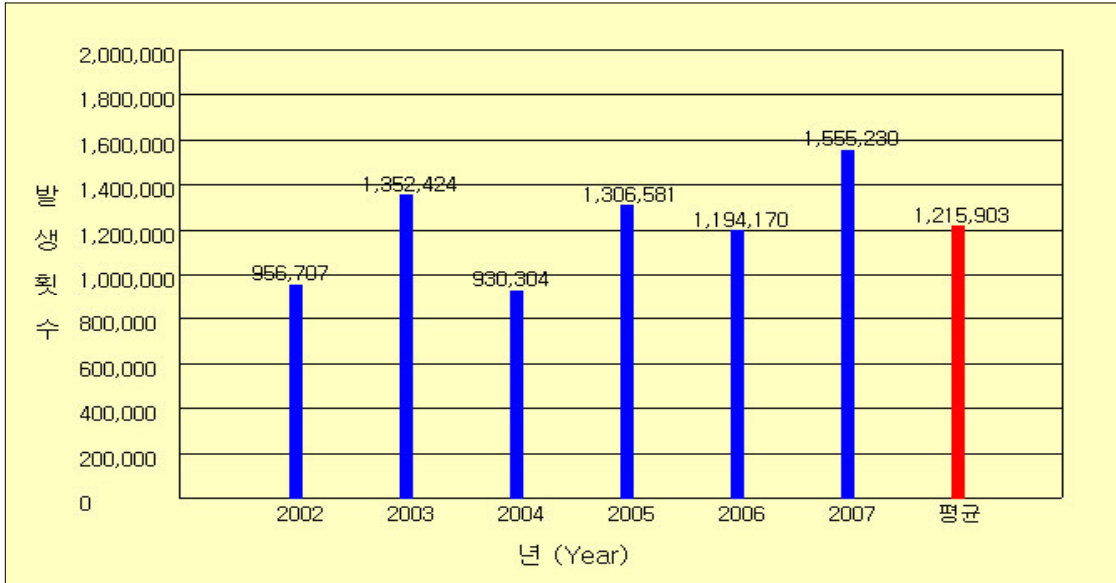
- 이렇게 낙뢰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뢰사고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부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낙뢰사고 예방관련 연구보고서는 커녕 지금까지 낙뢰사고 예방을 위한 회의조차 열린 적이 한번도 없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낙뢰로 인한 재산피해 현황>

연도별	2005	2006	2007	합계
계	25,753	30,296	34,535	90,584

- <낙뢰사고 피해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등산 중 낙뢰가 발생하여 사고를 당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밭일 등 농장 일을 하다가, 우산 쓰고 보행중이거나 체육수업 중 운동을 하다가 낙뢰사고를 당하는 등 낙뢰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떨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재해이다.
- 한편 기상청에서 발표한<2007년 낙뢰연보자료>에 따르면 2007년 낙뢰발생 횟수는 약 160만회로 최근 6년 동안 낙뢰발생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별로 살펴보면 8월에 낙뢰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2007년 낙뢰 발생 횟수 통계>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최근 낙뢰로 인한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며 “낙뢰 사고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는 낙뢰빈발지역에 인명보호용 시설이나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기상청과 연계하여 낙뢰 특보제를 도입하여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급격한 기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낙뢰를 자연재해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5년 낙뢰피해 유형별 현황>

일자	시도	주소	사고개요	인명피해		재산 피해	소실 (㎡,ha)
				사망	부상		
07.01	부산	강서구 강동동	65세 여자가 밭일 하던중 낙뢰에 맞아 사망	1			
08.02	전남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낙뢰로 화재발생, 축사 297m2, 소실			1387 만원	297m2
08.02	전남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낙뢰로 화재발생 음식점 250m2 소실			679만 원	250m2
08.06	충북	옥천군 군서면 오동리 신오천전 력소	낙뢰로 전력소 전압조정기 소실			1000만 원	
08.06	대구	달서구 월곡지 윗산 중턱	낙뢰로 등산객 2명 부상		2		
08.06	경기	평택시 경부선 평택역	낙뢰로 고압선 절단				
08.11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울면 본죽리	낙뢰로 축사 소실			4,045만 원	
08.17	충북	청원군 옥산면 덕촌리	낙뢰로 52세 남자 농약살포 중 사망	1			
08.18	경남	진주시 명석면 오미리	낙뢰로 수립물품 창고 소실			544m 2	1억8612 만원
09.17	경기	경기 용인시 양 지면 제일리 서 예용품 보관소	서예용품 보관소 화재				30만원

<2006년 낙뢰피해 유형별 현황>

일자	시도	주소	사고개요	인명피해		재산 피해	소실 (㎡,ha)
				사망	부상		
06.10	인천	남구 문학동 음식점 건물 (2/1층 2,195㎡)	낙뢰로 추정되는 화재로, 환기 덕트가 소실			48만원	
06.10	인천	남구 관교동 사랑교회(3/1 층 429㎡) 보일러실	낙뢰에 의한 발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보일러 일부가 소실			25만원	
06.10	인천	강화군 내가면 외포1리 소재 양수장	낙뢰로 추정되는 불이 나, 배 전반 일부 소실				
06.10	인천	강화군 하점면 신삼리 소재 주택	낙뢰로 추정되는 불이 나, 배 전반 일부 소실				
06.10	경기	광주시 도척면 도웅리 소재 골프장	우산을 쓴 1명이 낙뢰로 부상		1		
06.10	경기	파주시 법원읍 법원3리 소재 주방가구 생산공장	낙뢰로 추정되는 불이 나, 배 전반 일부 소실			35만원	
06.10	경기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소재 버섯농장(1층 2동 990㎡)	낙뢰로 추정되는 불이나 2동 이 소실			28000 만원	990
06.10	경기	용인시 처인구 호동 소재 주 택	낙뢰 추정되는 불이 나, 배전 반 일부 소실			30만원	
06.10	전남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천석 마을 소재 창고(1동 165㎡)	낙뢰 추정되는 불이 나, 내부 66㎡ 소실				66
06.10	경기	양평군 양동면 금왕1리 소재 주택	낙뢰 추정되는 불이 나 배전반 소실			5만원	
06.10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5리 소재 주택	낙뢰 추정의 화재로 배전반 소 실			5만원	
06.11	인천	강화군 양사면 덕하리 교회 (1층/2동/330㎡)	낙뢰로 추정되는 불이 나, 예 배당 건물(198㎡)이 전소			1327 만원	198
06.16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 고등학 교 운동장	운동장 체육수업중 1명(남,16 세)이 낙뢰에 맞아 의식불명		1		
06.30	제주	북제주군 애월읍 신엄리 해 녀탈의장 앞 바다	해녀 15명이 해산물 채취하고 나오던중 낙뢰에 맞아 3명 사 상(사망1, 중상2)	1	2		
08.09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초등학 교 운동장	축구부 학생(남,12세)이 운동 중 낙뢰에 맞아 부상(의식불명)		1		
08.21	전북	무주군 설천면 덕유산 정상	등산객(남,32세)이 낙뢰 추정 으로 사고	1			
08.23	충북	청원군 내수읍 형동 1구	원두막에서 작업중이던 1명 (남,50)이 낙뢰에 맞아 사망	1			
08.24	경남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천성 산 제2봉	등산객 7여명이 낙뢰 추정으 로 사망1(여,54세), 부상1 (여,42세)	1	1		
08.25	서울	광진구 중곡동 아차산 해맞 이공원 부근	등산객 1명(남/58)이 낙뢰를 맞아 병원이송하였으나 사망	1			
10.11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소재 군부대 막사(1층1동 93㎡)	낙뢰 추정의 화재로 군부대 막 사 1동 93㎡와 집기류 소실			821만 원	93

<2007년 낙뢰피해 유형별 현황>

일자	시도	주소	사고개요	인명피해		재산 피해	소실 (㎡, ha)
				사망	부상		
합계				8	15		
8.22	경남	진주	크레인 밑	1	0		
8.10	광주	광주공항 야전훈련장		1	3		
8.2	강원	춘천 군부대		1	0		
7.29	강원	원주	사내 보행중	0	1		
7.19	충남	서산시 팔봉면 진장1리 냉동 창고(1층,1동,36㎡)	낙뢰로 인하여 불이 나, 창고 36㎡ 및 배(10kg) 150상자가 소실	0	0	2316 만원	36
7.26	경남	창녕군 남지읍 마산리 소재 농 업용비닐하우스(1동 990㎡)	낙뢰로 추정되는 불이 나, 상부 부직 포가 소실	0	0	32만 원	
7.29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 용혈봉 부근 바위	낙뢰가 발생하여 산행중이던 등산객 8명 사상(사망4, 부상4)	4	7		
7.29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만가대 수락 산 등산로	수락산 등반후 하산중 낙뢰로 인한 감전 사고	1	2		
7.29	경기	포천시 이동면 연곡5리 소재 주택 창고(1층 66㎡)	낙뢰로 인한 불이 나, 내부 16.5㎡ 가 소실	0	0	400만 원	16.5
7.2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소재 사료배합기계 제조공장(2층 2 동 828㎡)	낙뢰로 인한 불이 나, 내부 60㎡ 및 배전반 등이 소실	0	0	628만 원	60
7.29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행만 레 이더기지 송전탑	폭우를 동반한 낙뢰가 송전탑에 떨어 져 송전탑 계량기가 일부소실	0	0		
7.29	경북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낙뢰 소리에 불꽃이 솟아 신고한 화 재임	0	0	37만 원	6
7.29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봉사 부근	등산중 도봉사부근에서 낙뢰로 인하 여 등산객(여,49)이 부상	0	1		
7.29	경북	경주시 외동읍 신계리 소재 농 기계창고(1층 66㎡)	낙뢰로 추정되는 불이 나, 내부 전소 및 보관중이던 콤바인 등이 소실	0	0	4402 만원	66
7.30	충북	제천시 봉상읍 소재 주택(1층 72㎡)	낙뢰로 인한 불이 나, 주택이 전소하 고 내부 집기류 등이 소실	0	0	4361 만원	
6.8	경남	마산시 산호동 소재 건물 (10/2층 5,274㎡) 6층 통신 기기판매 사무실(85㎡)	낙뢰에 의한 과전류로 추정되는 불이 나, 컴퓨터 및 통신케이블등이 소실	0	0	121만 원	
6.8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소재 마 을 앞 비닐하우스용 비닐 야적 장	낙뢰로 인한 전봇대 계량기에서 발화 된 화재가 야적된 비닐에 연소	0	0	138만 원	
5.6	광주	서구 광천동 95-13 주택(1 층,66㎡)	낙뢰로인한 전기단락으로 불이 나, 내부 66㎡ 및 인근 창고 33㎡ 소실	0	0	2,490 만원	99
3.28	충북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 소재 비 닐하우스(1동 48㎡)	낙뢰로 인한 불이 나, 비닐하우스가 전소	0	0	360만 원	48
3.31	경기	안성시 양성면 난살리 기원정 사(사찰,2층 330㎡)	낙뢰로 추정되는 불이 나, 내부 132 ㎡ 및 불상 등 소실	0	0	9,000 만원	132
3.31	경북	청송군 무남면 구천리 소재 상 황버섯재배사(2동 350㎡)	낙뢰로 추정되는 불이 나, 내부 265 ㎡가 소실되고 재배중인 상황버섯 등 이 소실	0	0	8500 만원	
2.8	전남	완도군 노화읍 동고리 소재 주 택(1층1동 100㎡)	낙뢰 발생후 텔레비전 뒤편에 불이 나, 가재도구와 내부 전소	0	0	1750 만원	100

(3) 우리나라 지진나면 건축물 83.7% 무너져 내려

■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축물 총
1,010,152건물 중 내진설계적용 건물
164,621개로 16.3% 불과**

■ **학교시설 중 내진설계기준 적용된 교육시설
13.7%**

(2008년 10월 10일)

- 지난 5월 중국 쓰촨 대지진으로 약 7만명이 사망하고 37만명이 부상 당하는 등 지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지진재해에서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김소남 의원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의 질의를 통해 밝혀졌다.
- 김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3층 이상 되는 총 1,010,152개 건축물 중 83.7%인 845,531개 건물이 지진에 의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내진설계 적용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용 건물의 경우, 총 622,496개 건물 중 16.5%인 103,313개 건물만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었고 상업용 건축물의 경우, 총

314,484개 건물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이 13.3%이며 그 중 근린 생활시설 10.2%, 판매 및 영업시설 29%, 숙박시설 21.6%, 위락시설 11.7%, 업무시설 39.9%로 밝혀졌다.

- 또한 공업용 건축물의 경우 전체 26,563개 건물 중 내진 설계가 적용된 공장이 37.9%, 기타 공업용 건물 27.6%로 나타났으며 기타 건축물의 경우 총 46,609개 건물 중 21.3%인 1,185개 건물만이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로 나타났다.

<내진적용 건축물 현황>

구 분		07년말 건축물 현황 (3층이상)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허가된 건축물(3층이상)	
전국	주거용	소 계	622,496	103,313
		단독주택	338,153	19,628
		공동주택	284,343	83,685
	상업용	소 계	314,484	41,759
		근린생활시설	254,322	26,003
		판매및영업시설	3,349	972
		숙박시설	24,406	5,270
		위락시설	2,823	331
		업무시설	19,603	7,820
		기타	9,981	1,363
	공업용	소 계	26,563	9,632
		공 장	22,265	8,447
		기타 공업용	4,298	1,185
	기 타	소 계	46,609	9,917
	계		1,010,152	164,621

- 한편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의 경우 전체 17,734개 건물 중 13.7%인 2,429개 건물만 내진설계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설계 학교시설 현황>

시도	내진설계 시설		비내진설계 시설		합계	
	건물수(동)	연면적(m ²)	건물수(동)	연면적(m ²)	건물수(동)	연면적(m ²)
공 립	2,029	14,942,066	12,007	41,473,707	14,036	56,415,773
	14.5%	26.5%	85.5%	73.5%	100%	100%
사 립	400	1,392,894	3,298	11,037,943	3,698	12,430,837
	10.8%	11.2%	89.2%	88.8%	100%	100%
합 계	2,429	16,334,960	15,305	52,511,650	17,734	68,846,610
	13.7%	23.7%	86.3%	76.3%	100%	100%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진설계가 적용된 급식시설은 24.2%, 기숙시설 22.5%, 체육시설 22.1%, 강당시설 21.7%, 교사시설은 12.5%, 합숙시설 12%, 교원 편의시설 4.5%에 불과하였다.
- 또한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8.4%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 18.3%, 충남 17.4%, 부산 16.7%, 경남 12.2%순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 3.4%, 경북 5.1%, 광주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용도별 학교시설 현황>

구 분		교사시설	체육시설	강당시설	기숙시설	급식시설	합숙시설	교원 편의시설	합계
총합 계	건물동수	15,571	841	598	447	186	25	66	17,734
	연면적(천m ²)	64,810	1,716	1,073	891	304	18.7	33.4	68,846
내진	건물동수	1,961	186	130	101	45	3	3	2,429
	연면적(천m ²)	15,353	404	247	241	86	1.8	1.5	16,335
비내 진	건물동수	13,610	655	468	346	141	22	63	15,305
	연면적(천m ²)	49,457	1,312	826	650	218	16.7	31.9	52,511

- 반면 공항, 다목적댐, 용수댐, 터널, 교량, 항만시설은 내진설계가 100%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철도의 43.5%, 철도교량의 85.3%가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에서는 ‘중앙본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우리나라 지진발생 횟수가 1997년부터 연평균 38회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비율이 저조한 것은 우리나라가 지진위험지대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며 ”정부는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진재해를 대비·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4) 화재발생 최근 3년간 72.8% 증가

■ 최근 3년간, 화재발생으로 아동, 여성피해자 증가하고 있어.. (2008년 10월 10일)

- 국정감사 소방방재청에 대한 김소남 의원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의 질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나라 화재발생 건수는 총 107,007건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 31,778건에서 2007년 47,760건, 2008년 6월 현재 27,469건으로 최근 3년간 7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화재발생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합계
인원	31,778	47,760	27,469	107,007

-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을 보면 화재발생으로 인한 사망자는 2006년 446명에서 2007년 457명, 2008년 6월 현재 263명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이 중 여성 피해자는 2006년 34%(152명)에서 2007년 34.1%(156명) 2008년 6월 현재 39.2%(103명)로 최근 3년간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성별현황>

(단위: 명)

구분	2006년			2007			2008.6월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446	294	152	457	301	156	263	160	103

- 또한 최근 3년간 연령별 피해 증가율을 보면 31세~40세가 122.2%로 가장 높았으며 8세~13세는 100%, 41세~50세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로 인한 연령별 사망자 현황>

(단위:명)

구분	계	0세 ~7세	8세 ~13세	14세 ~20세	21세 ~30세	31세 ~40세	41세 ~50세	51세 ~60세	61세 이상
2006	446	25	20	14	27	69	106	81	104
2007	457	22	21	15	28	71	111	80	109
2008.6	263	11	20	5	30	26	70	46	55

- 한편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현황>을 보면 2006년 1,507억원에서 2007년 2,597억원, 2008년 6월 현재 1,559원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소실면적은 2006년 161만제곱미터에서 2007년 378만제곱미터, 2008년 6월 현재 367만제곱미터로 증가하였고 소실동수는 2006년 16,173동에서 2007년 20,863동, 2008년 6월 현재 10,451동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화재발생 현황>

구 분	건 수	사 망 (명)	재산피해 (백만원)	소실면적 (㎡)	소실동수
2008.6월	27,469	263	155,974	3,670,4726	10,451
2007	47,760	457	259,763	3,788,046	20,863
2006	31,778	446	150,792	1,820,251	16,173

- 최근 3년간 <지역별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22.9%(24,608건)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14.1%(15,135건), 경남 8.8%(9,391건), 경북 6.2%(6,612건), 부산 5.7%(6,145건)순이며 화재 발생 증가율은 대구가 174.8%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이 160.7%로 그 다음을 이었다.

<지역별 화재발생 현황>

(단위: 명)

연도	2006	2007	2008.6	합계
합계	31,778	47,760	27,760	107,298
서울	4,907	6,685	3,543	15,135
부산	1,757	2,787	1,601	6,145
대구	973	2,371	1,337	4,681
인천	1,612	2,156	1,156	3,924
광주	792	1,386	902	3,080
대전	880	1,510	862	3,252
울산	971	1,469	843	3,283
경기	7,681	10,677	6,250	24,608
강원	1,534	2,457	1,456	5,447
충북	1,226	1,471	842	3,539
충남	1,357	2,699	1,769	5,825
전북	1,508	1,857	1,100	4,465
전남	1,393	2,337	1,284	5,014
경북	1,909	2,985	1,718	6,612
경남	2,707	4,238	2,446	9,391
제주도	571	675	360	1,606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최근 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 취약계층인 여성, 아동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며 “정부는 화재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장치를 보다 강화해야 하며 특히 사회취약계층인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안전교육·홍보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6.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1) 112 허위신고 증가, 경찰 행정력 낭비 심각

■ 119 허위신고는 감소하는데 112 허위 신고는 증가!

(2008년 10월 13일)

- 김소남 의원(한나라당·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경 국정감사 질의에 의하면, 2007년 기준 연간 112에 접수된 신고는 총 6,227,664건이다.
한편 112신고 이용이 늘면서 허위나 장난 등으로 잘못 접수 되는 경우도 많아 행정상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 실제로 112 허위신고는 2005년 9,534건에서 2006년 9,028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2007년 12,155건으로 급증하였고, 서울지역은 '06년 2,483건에서 '07년 2,954건으로 500건 가량 증가하였다.
- 허위·장난신고의 경우 그 특성상 대규모 경찰력 동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엄청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였다.

- 그 예로, '07. 9. 25 초등4학년 김모(10)군이 '63빌딩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문자메시지를 112로 전송, 경찰관 120여명, 경찰차량 12대, 소방차량 10대 등 동원한 사례도 있다.
 - 이처럼 허위신고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대규모 치안력이 투입되어 민생치안의 공백을 초래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가 발생하였다.
 - 특히, 인질강도 등 납치사건은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범죄로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대규모 치안력 투입이 불가피하다.
 - 경찰은 상습적으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단속하고 있다고 하나, 공중전화 등을 이용하여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검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런 이유로 신속한 출동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 김소남 의원 : 일차적으로 허위·오인 신고를 막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아울러 경찰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허위 신고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허위신고로 인해 정말로 경찰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 지연 출동하게 되어 실제 경찰이 필요하고 급한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07년 112에 접수된 신고 상세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신고유형별					허위신고	오인신고
	계	형사범	교통사범	경범	민원기타		
계	6,227,664	1,247,468	1,120,045	1,264,663	2,595,488	12,155	286,112
	100.0%	20.0%	18.0%	20.3%	41.7%	0.2%	4.6%
서울	2,062,718	419,867	449,562	692,218	501,071	2,954	145,433
	100.0%	20.4%	21.8%	33.6%	24.3%	0.1%	7.1%
부산	588,236	239,876	112,858	153,789	81,713	2,009	20,539
	100.0%	40.8%	19.2%	26.1%	13.9%	0.3%	3.5%
대구	249,908	48,338	43,813	36,681	121,076	1,195	7,586
	100.0%	19.3%	17.5%	14.7%	48.4%	0.5%	3.0%
인천	366,377	37,912	51,212	60,937	216,316	270	15,133
	100.0%	10.3%	14.0%	16.6%	59.0%	0.1%	4.1%
광주	167,377	38,431	27,855	20,500	80,591	212	3,670
	100.0%	23.0%	16.6%	12.2%	48.1%	0.1%	2.2%
대전	161,137	37,071	27,190	18,840	78,036	373	7,412
	100.0%	23.0%	16.9%	11.7%	48.4%	0.2%	4.6%
울산	120,174	13,115	23,483	31,241	52,335	251	9,330
	100.0%	10.9%	19.5%	26.0%	43.5%	0.2%	7.8%
경기	1,266,175	214,949	178,188	91,464	781,574	2,008	35,035
	100.0%	17.0%	14.1%	7.2%	61.7%	0.2%	2.8%
강원	134,015	24,798	21,373	12,335	75,509	276	5,394
	100.0%	18.5%	15.9%	9.2%	56.3%	0.2%	4.0%
충북	214,911	22,942	19,528	11,448	160,993	342	6,135
	100.0%	10.7%	9.1%	5.3%	74.9%	0.2%	2.9%
충남	134,094	20,953	26,922	9,969	76,250	393	7,947
	100.0%	15.6%	20.1%	7.4%	56.9%	0.3%	5.9%
전북	173,980	34,729	32,122	12,242	94,887	229	5,365
	100.0%	20.0%	18.5%	7.0%	54.5%	0.1%	3.1%
전남	103,335	19,456	18,504	16,500	48,875	395	3,205
	100.0%	18.8%	17.9%	16.0%	47.3%	0.4%	3.1%
경북	154,604	29,762	33,658	10,690	80,494	731	6,318
	100.0%	19.3%	21.8%	6.9%	52.1%	0.5%	4.1%
경남	270,642	34,566	46,930	81,376	107,770	475	7,153
	100.0%	12.8%	17.3%	30.1%	39.8%	0.2%	2.6%
제주	59,981	10,703	6,847	4,433	37,998	42	457
	100.0%	17.8%	11.4%	7.4%	63.4%	0.1%	0.8%

<연도별 112 신고접수 현황>

(건수,%)

구분	신고유형별					허위 신고	오인 신고
	계	형사범	교통사범	경범	민원기타		
2005	5,012,017	941,421	925,465	1,074,107	2,071,024	9,534	214,441
	100.00%	18.80%	18.50%	21.40%	41.30%	0.20%	4.30%
2006	5,408,884	1,007,334	997,364	1,071,086	2,333,100	9,028	249,408
	100.00%	18.60%	18.40%	19.80%	43.10%	0.20%	4.60%
2007	6,227,664	1,247,468	1,120,045	1,264,663	2,595,488	12,155	286,112
	100.00%	20.00%	18.00%	20.30%	41.70%	0.20%	4.60%
2008	3,926,434	759,823	668,556	773,732	1,724,323	6,771	178,197
	100.00%	19.40%	17.00%	19.70%	43.90%	0.20%	4.50%

※ 자료 : 경찰청

<연도별 119 신고접수 현황>

(건수,%)

구분	총계 (%)	소방활동	소방활동 이외 정보				
			소계	허위·장난	오접속	민원성안내	기타(오인 등)
2005	10,664,034 (100%)	1,873,097 (17.6%)	8,790,937 (82.4%)	172,763 (1.6)	4,930,648 (46.2)	1,162,188 (10.9)	2,525,338 (23.7)
2006	10,819,555 (100%)	2,018,694 (18.7%)	8,800,861 (81.3%)	91,868 (0.9%)	5,317,978 (49.9%)	677,746 (6.4%)	2,713,269 (25.4%)
2007	10,557,367 (100%)	2,319,458 (22.0%)	8,237,909 (78.1%)	54,532 (0.5%)	5,635,052 (53.4%)	1,042,994 (9.9%)	1,505,331 (14.2%)

※ 자료 : 소방방재청

(2) 관악구, 서울시내 강력범죄 발생최다지역, 2008년 3,513건!

■ **검거율 76%로, 서울평균 검거율보다 11%나 낮아**

■ **범죄유형별 우범지역, 살인=구로구(16건), 강도=구로구(42건), 강간=송파구(90건), 절도=광진구(1347건), 폭력=영등포구(2548건)!**

(2008년 10월 13일)

- 서울지역 전체 강력범죄는 2005년 112,315건에서 2006년 103,487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2007년 107,380건으로 4,000건 이상 증가, 2008년은 8월말 기준 68,950건.
- 한편 김소남 의원(한나라당·행정안전위원회)의 10월 13일 서울시경 국정감사 질의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8월말까지 관악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5대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는 총 3,513건으로 서울지역 31개 경찰서 가운데 최다였다.

- 관할인구가 관악서(52만명)보다 많은 송파서(62만4천명), 노원서(61만7천명), 강서서(56만명)의 5대범죄 건수는 각각 3,394건, 2,679건, 3,166건으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관악서가 범죄발생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범죄유형별 최다발생 지역은, 살인(16건)·강도(42건) 구로구, 강간 송파구(90건), 절도 광진구(1347건), 폭력 영등포구(2548건)이다.

특히, 구로구는 2006년 이래로 매년 살인사건 다발지역 1위(2006년 16건, 2007년 19건, 2008년 16건), 송파구는 2007년 이래 강간사건 다발지역 1위(2007년 123건, 2008년 90건), 광진구는 2006년 이래 절도사건 다발지역 1위(2006년 1859건, 2007년 1862건, 2008년 1347건), 영등포구는 2007년 이래 폭력사건 다발지역 1위(2007년 4026건, 2008년 2548건)라는 오명을 잇고 있다.

- 한편 2008년 범죄 검거율에서 서울지역은 전국 평균 검거율 75.4%보다 11%나 높은 86.7%로 높은 검거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내 각 서별로는 큰 차이를 나타내며, 광진구(70%), 도봉구(72%), 수서구(73%), 관악구(76%)는 서울평균검거율보다 10%이상 저조하다.

☞ 김소남 의원 : 서울시내에서 감소하던 강력범죄가 다시 증가하고, 지역별로 검거율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범죄별 우범지역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경찰의 범죄 예방활동이 미흡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향후 서울시내 각 경찰서별로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통한 강력범죄 소탕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내 각 서별 5대범죄 현황>

- 2007년

구분	발생	검거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계	107380	94226	219	1077	2087	29977	74020
강남	4179	3717	8	66	121	864	3120
강동	3729	3845	7	35	80	815	2792
강북	3257	3078	12	47	86	740	2372
강서	4779	3961	4	53	90	1358	3274
관악	5672	4349	13	88	102	1774	3695
광진	4681	3502	8	53	97	1862	2661
구로	4717	4152	19	52	60	1221	3365
금천	3465	2942	6	31	49	978	2401
남대문	1900	1583	0	16	20	655	1209
노원	4796	4509	11	40	91	1263	3391
도봉	2979	2397	4	27	57	1059	1832
동작	3121	2665	3	23	60	928	2107
동대문	4276	4109	13	40	87	837	3299
마포	4003	3306	5	28	110	912	2948
방배	1111	1197	3	20	23	239	826
서대문	4207	3032	4	21	84	1620	2478
서부	1732	1508	5	17	29	502	1179
서초	3314	2779	4	50	72	965	2223
성동	3038	2730	5	24	60	1005	1944
성북	2064	1825	4	23	30	629	1378
송파	5939	4845	8	65	123	1848	3895
수서	2788	2415	4	29	57	817	1881
양천	3513	3078	8	24	67	1001	2413
영등포	5628	4852	13	50	92	1447	4026
용산	2518	2314	9	24	70	733	1682
은평	2718	2296	6	20	46	799	1847
종로	2130	1665	5	29	52	581	1463
종암	1717	1620	8	17	36	477	1179
중랑	4358	4227	13	40	57	966	3282
중부	2672	2532	4	13	38	680	1937
혜화	2364	2615	2	12	40	394	1916

- 2008년

구분	발생	검거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계	68950	59789	137	603	1459	18699	48052
강남	2488	2280	2	19	86	460	1921
강동	2638	2667	4	38	52	579	1965
강북	2141	2094	5	23	44	436	1633
강서	3166	2605	11	26	57	817	2255
관악	3513	2653	7	23	79	1094	2310
광진	3291	2295	2	38	64	1347	1840
구로	3038	2599	16	42	54	770	2156
금천	2447	2050	2	17	48	693	1687
남대문	1300	1167	0	5	29	432	834
노원	2679	2445	2	18	54	615	1990
도봉	2121	1524	5	14	44	766	1292
동작	2120	1731	6	16	42	632	1424
동대문	2616	2485	6	20	39	473	2078
마포	2264	2101	7	12	52	464	1729
방배	697	651	0	6	16	183	492
서부	1233	1099	2	7	22	286	916
서초	1943	1669	0	21	56	488	1378
서대문	2623	2052	6	27	64	886	1640
성동	2088	1775	1	23	41	713	1310
성북	1409	1259	4	14	35	414	942
송파	3394	2925	6	28	90	844	2426
수서	2228	1628	2	21	53	823	1329
양천	2386	1946	7	27	40	691	1621
영등포	3391	3004	11	26	70	736	2548
용산	1677	1531	5	13	35	451	1173
은평	1602	1304	3	11	26	454	1108
종로	1279	1061	2	8	47	376	846
종암	1052	931	4	16	19	294	719
중랑	2979	2974	4	22	40	707	2206
중부	1743	1584	4	14	36	470	1219
혜화	1403	1415	1	8	25	304	1065

※ 자료 : 경찰청

(3) 서울시내 조직폭력배 개입 범죄 심각!

■ **지난 3년간 범죄개입으로 입건된 서울 지역 조폭 2416명!**

■ **갈취폭력 위주에서 최근 범죄 다양화, 2008년은 사행성 불법영업(30명), 경매·입찰개입(40명), 탈세·사채업(15명), 부동산투기개입(17명)으로 적발된 조폭 다수!**

(2008년 10월 13일)

- 김소남 의원(한나라당·행정안전위원회)은 10월 13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에서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08년 기준 경찰의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는 221개 조직 5,413명으로 3년 전에 비해 약 600명 가량 증가했다.
- 이 가운데 2008년 서울지역 조직폭력배는 504명이다. 그러나 관리대상에 오르지 않은 신흥조직이나 기존 조직의 하위 조직원까지 포함하면 조폭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조직폭력배 현황>

연도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5년	조직수	213	23	24	16	13			6	26	22	10	21	15	15	8	11	3
	구성원	4,826	417	283	376	274			203	649	307	236	394	461	494	322	296	114
'06년	조직수	213	22	24	12	13			6	27	22	10	23	15	15	9	12	3
	구성원	5,075	470	346	317	275			202	782	295	246	389	480	474	373	294	132
'07년	조직수	222	23	24	12	13	9	9	6	29	23	10	16	15	6	10	14	3
	구성원	5,269	500	349	318	281	300	84	200	910	315	246	296	488	177	349	318	138
'08년	조직수	221	23	23	12	13	8	9	6	28	22	9	17	15	6	12	15	3
	구성원	5,413	504	365	315	285	304	103	200	899	339	256	293	493	187	406	326	138

※ 자료 : 경찰청

- 한편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3,968명이 범죄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으며, 이는 2006년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2008년은 7월말 기준 1,558명이 범죄로 경찰에 검거되었으며, 이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302명이 서울지역에서 검거되었다.

- 2008년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이전과 달리 조직폭력배 범죄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범죄 다양화는 서울지역에서 두드러진다.
- 단순 수치에서 서울과 유사한 경기지역의 경우, 유흥업소갈취가 188명, 서민상대 갈취 87명으로 전체 검거인원 302명의 87%에 해당하는 275명이 갈취폭력으로 입건된 데 비해,

서울지역은 유흥업소갈취 85명, 서민상대갈취 45명, 폭력행사대행 32명, 사행성불법영업 30명, 경매 및 입찰 개입 40명, 탈세 및 사채업 15명, 마약류불법유통 11명, 부동산투기 개입 17명, 기타 27명으로 검거 사유가 매우 다양하다.

이 중 ‘경매 및 입찰 개입’, ‘탈세 및 사채업’, ‘부동산투기개입’으로 단속된 것은 전국적으로도 서울시가 유일하다.

☞ 김소남 의원 : 조직폭력배는 대부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활동영역이 넓고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수단의 다양성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조직폭력배와 조직폭력배 범죄가 증가하고, 범죄의 종류가 다양화 됨에 따라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조직폭력배 단속과 검거의 주무기관인 경찰은 관리대상 폭력조직별 전담팀을 지정, 집중관리를 통해 조직재건, 재범 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조직폭력배 개입된 범죄 유형별 현황>

◦ '07년

구분 청별	계(명)	갈취폭력	청부폭력	보복세력다툼	무허가 유흥 업소운영 등	마약, 밀수	기 타
계	3,968	2,080	193	274	110	40	1,271
서울	839	631	23	34	9	6	136
부산	611	404	49	57		12	89
대구	254	130	6	10		3	105
인천	201	46	2	31	29	10	83
광주	49	4			2		43
대전	7						7
울산	47	7	5		3	2	30
경기	761	448	61	66			186
강원	114	44	1	3	13	2	51
충북	109	11	1		3	1	93
충남	119	51	25		2		41
전북	198	44	2	1	15	2	134
전남	157	15	11	33			98
경북	188	95	4	8	5		76
경남	249	144	3	1	29	1	71
제주	65	6		30		1	28

※ 광주·대전지방청은 '07.7.1 개청

◦ '08. 7월 말

구분	계	유형 업소 갈취	서민 상대 갈취	폭력 행사 대행	사행성 불법 영업등	변칙적 위장 사업	경매 및 입찰 개입등	탈세 및 사채업	마약류 불법 유통등	부동산 투기 개입	기타
계	1,558	565	286	160	77	8	40	15	26	17	364
서울	302	85	45	32	30		40	15	11	17	27
부산	184	124	4	39	2				4		11
대구	72	3	19	1					3		46
인천	81	22		14	18	8			5		14
광주	52	7	15								30
대전	46	1	7	1							37
울산	10	1	4						1		4
경기	302	188	87	1	1						25
강원	33	3	6		6						18
충북	32		13								19
충남	63	38	12						1		12
전북	106	12	46	3	1						44
전남	25			19	1						5
경북	97	30	4	48							15
경남	120	39	17	2	18				1		43
제주	33	12	7								14

※ 자료 : 경찰청

7. 경기도

(1) 기초생활수급자 단수조치 최근 3년간 32.2% 증가!

■ 생존권 위협하는 경기도의 직무유기 심각 (2008년 10월 14일)

-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고유가로 수돗물 가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경기도민 중 단수조치를 경험한 가구는 2007년 10,907가구에서 2008년 상반기 5,999가구로 전년대비 10% 증가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단수조치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 3년간 32.2% 증가하여 단수조치로 인한 서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나라 단수조치 가구는 총 128,959가구로 연도별로 보면 2005년 40,778가구에서 2006년 45,682가구, 2007년 42,499가구로 최근 3년 동안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형별로 보면 ‘수도요금 체납 및 미납’이 71,049가구로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파 등 시설파손 사고’는 43.5%(56,043가구), 기타 1.2%(1,576가구), 가뭄, 수질악화 등 0.2%(291가구), 기타 1.2%(1,576가구)순이다.
- 특히 ‘수도요금 체납 및 미납’으로 단수조치를 당한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42가구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 보면 2005년 71가구에서 2006년 77가구, 2007년 94가구로 최근 3년간 3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주목할 점은 동파 등 시설파손으로 인한 파손사고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지만 수도요금 체납, 미납과 가뭄, 수질악화로 인한 단수조치는 해마다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단수조치 현황>

(단위: 건수, 가구 수)

연도	유형별 단수·정수조치 현황					
	계	동파 등 시설 파손 사고	수도요금 체납·미납 등		가뭄, 수질 악화 등	기타
			총 처분건수	기초수급대상 가구		
계	128,959	56,043	71,049	242	291	1,576
2005년	40,778	18,971	21,181	71	56	570
2006년	45,682	20,961	24,111	77	88	522
2007년	42,499	16,111	25,757	94	147	484

- 한편 최근 3년간 ‘요금체납 및 미납’으로 인한 단수조치 가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4,859가구로 전체의 20.9%로 가장 많으며, 경남 12.5%(8,886가구), 인천 8.5%(6,055가구), 전남 5.9%(4,200가구), 충남 4.5%(3,201가구)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 단수조치 증가율은 강원이 262%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충남 76.7%, 경북

74.6%, 경기 49.5%순으로 나타났다.

〈요금체납 및 미납〉으로 인한 단수조치 가구현황〉

연도	2005	2006	2007	합계
합계	21,181(71)	24,111(77)	25,757(94)	71,049(242)
서울	1,288	492	778	1,858
부산	1,246	1,356	1,063	3,665
대구	1,041	519	529	2,089
인천	2,214(3)	2,231(3)	1,610(8)	6,055(14)
광주	250	132	622	1,004
대전	36	213	91	340
울산	1,360	1,338	1,394	4,092
경기	3,813(59)	5,345(64)	5,701(78)	14,859(201)
강원	963	1,364	3,487	5,814
충북	704	581	496	1,781
충남	739	1,156(2)	1,306(2)	3,201(4)
전북	2,703	3,043	2,190	7,936
전남	1,242	1,350	1,608	4,200
경북	882	1,147	1,540	3,569
경남	2,700(9)	3,844(8)	2,342(6)	8,886(23)
제주도	-	-	-	-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고 빈부 격차로 인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수도요금 체납 및 미납 등으로 단수 조치된 기초생활수급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며 “수돗물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인데 그 공급이 중단된다면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빈곤가구에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단수·단전조치에 대해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받은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보편적 공급의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2) 국무총리 특별지시 ‘쇠귀에 경 읽기’

■ 경기도청 1월~8월, 전력사용료 전년대비 9.8% 증가 (2008년 10월 14일)

-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초고유가 시대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에너지절약을 선도하여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제고할 있도록 에너지절약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는 2008년 7월 7일 특별지시로 초고유가 에너지절약에 대한 세부시행 방안을 발표하였다.
- 그러나 국정감사 경기도에 대한 김소남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의 질의에 따르면 경기도청은 국무총리 발표이후 에너지 사용량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한 2008년 <공공청사 전력사용현황>을 살펴보면 국무총리 특별지시가 발표된 2008년 7월 경기도청의 전기료는 52,646천원으로 전년대비(48,446천원) 8.7% 증가하였고 8월전기료는 71,932천원으로 전년대비(65,087천원)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경기도청의 1월부터 8월까지 전력사용료는 총 4억546만원으로 전년 3억6,926만원보다 9.8%로 증가하였으며 월별 증

가을을 살펴보면 1월 15.2%, 2월 8.5%, 3월 20.4%, 4월 0.3%, 5월 5.8%, 6월 7.9%, 7월 8.7%, 8월 1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절약운동을 추진하는 경기도에서 정작 공무원들이 에너지절약운동을 실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지난 2007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태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는 82.1점으로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태 점검결과>

우수(90점 이상)	보통(85점~89점)	미흡(84점 이하)
울산시, 부산시 강원도, 경남도 대구시, 서울시	대전시, 제주시, 광주시, 경북도 전북도, 전남도, 인천시	충남도, 경기도, 충북도

- 점검항목 총 19가지 중 경기도는 ‘에스코(Esco)활용’, ‘에너지 진단실시’, ‘승용차 요일제 준수’를 미이행 하였고 ‘경차 50%보유’는 30%밖에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고유가, 경기불황으로 국민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시민들한테는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독려하면서 정작 공무원들은 지키지 않는 모습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라고 말하며 “에너지 절약,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은 국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경기도가 솔선수범하여 에너지 절약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태 점검결과>

	에너지진단 원회차	에너지진단 원회차	에너지진단 원회차	에너지진단 원회차	에너지진단 원회차	에너지진단 원회차	에너지진단 원회차	에너지진단 원회차	에너지진단 원회차	ESCO 활용
서울시청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미이행
경기도청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미이행
전북도청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해당없음
광주시청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해당없음
전남도청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제주도청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대구시청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해당없음	이행	이행
경북도청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해당없음	이행	이행
부산시청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해당없음
울산시청	이행	부분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해당없음	이행	실시
경남도청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해당없음	이행	해당없음
인천시청	이행	부분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해당없음	부분이행	미이행
강원도청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충북도청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미이행
충남도청	이행	부분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미이행
대전시청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미이행	이행	이행	이행

	에너지진단 단 실시	경차50% 보유	경차5% 차설	승용차 제출 률	자주 전차 설치	자동 전분 거설	내부 교육 진행 률	외부 교육 참여	중·심 심실 명Off	중·심 심실 명Off	시류 시류 시류	점수
서울시청	이행	다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91.6
경기도청	미이행	라	이행	미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82.1
전북도청	해당없음	미이행	이행	미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88.2
광주시청	해당없음	나	이행	미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89.4
전남도청	해당없음	미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88.2
제주도청	이행	미이행	이행	미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89.5
대구시청	이행	가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95.0
경북도청	미이행	미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88.9
부산시청	해당없음	나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95.3
울산시청	미이행	나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98.3
경남도청	해당없음	나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95.0
인천시청	이행	마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87.8
강원도청	이행	가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95.3
충북도청	미이행	미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84.2
충남도청	미이행	가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82.1
대전시청	미이행	다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86.3

<공공청사 전력사용 현황>

(단위: 천원)

기 관 명	1월			2월			3월			4월		
	'07년	'08년	증감율	'07년	'08년	증감율	'07년	'08년	증감율	'07년	'08년	증감율
청와대	13,091	13,699	4.6%	13,068	15,108	15.6%	11,793	12,772	8.3%	12,342	11,682	-5.4%
광화문 정부청사	91,679	94,457	3.0%	90,359	91,845	1.6%	80,445	81,122	0.8%	84,294	74,719	-11.4%
과천정 부청사	136,783	136,679	-0.1%	147,534	136,509	-7.5%	123,122	127,905	3.9%	129,180	113,537	-12.1%
대전정 부청사	182,171	146,718	-19.5%	185,395	160,815	-13.3%	164,458	145,745	-11.4%	162,072	141,505	-12.7%
서울시 청	30,338	31,451	3.7%	30,277	29,570	-2.3%	26,944	25,560	-5.1%	27,289	24,247	-11.1%
인천시 청	43,407	50,416	16.1%	37,952	46,874	23.5%	40,155	40,719	1.4%	34,961	37,046	6.0%
경기도 청	46,471	53,515	15.2%	50,389	54,696	8.5%	42,249	50,862	20.4%	42,913	43,062	0.3%
충북도 청	26,444	29,386	11.1%	29,140	29,598	1.6%	23,826	27,437	15.2%	24,449	23,942	-2.1%
충남도 청	30,083	32,761	8.9%	26,941	29,141	8.2%	29,528	26,602	-9.9%	26,356	25,876	-1.8%
대전시 청	63,697	65,950	3.5%	55,270	59,537	7.7%	54,627	49,967	-8.5%	47,741	46,749	-2.1%
전북도 청	62,916	63,825	1.4%	54,267	57,379	5.7%	56,724	49,874	-12.1%	48,874	48,091	-1.6%
전남도 청	61,161	53,733	-12.1%	57,669	53,828	-6.7%	51,190	48,281	-5.7%	50,247	43,250	-13.9%
광주시 청	52,980	54,912	3.6%	46,305	48,185	4.1%	47,588	44,326	-6.9%	40,312	43,673	8.3%
경남도 청	35,948	37,844	5.3%	35,994	37,007	2.8%	32,640	34,025	4.2%	33,213	32,562	-2.0%
부산시 청	80,565	82,470	2.4%	70,683	74,145	4.9%	76,426	68,188	-10.8%	66,949	66,640	-0.5%
울산시 청	24,791	27,160	9.6%	21,483	23,876	11.1%	22,882	21,638	-5.4%	19,708	20,844	5.8%
대구광 역시청	18,770	19,724	5.1%	18,215	19,165	5.2%	16,720	16,709	-0.1%	16,266	16,003	-1.6%
경북도 청	32,378	36,889	13.9%	32,333	36,083	11.6%	30,180	31,591	4.7%	29,812	31,090	4.3%
강원도 청	26,125	33,756	29.2%	27,933	34,995	25.3%	23,705	32,129	35.5%	24,936	27,558	10.5%
제주도 청	19,373	20,794	7.3%	16,714	19,204	14.9%	17,402	16,782	-3.6%	14,501	15,522	7.0%

기 관 명	5월			6월			7월			8월		
	'07년	'08년	증감율	'07년	'08년	증감율	'07년	'08년	증감율	'07년	'08년	증감율
청와대	12,121	11,175	-7.8%	12,515	12,162	-2.8%	15,800	15,326	-3.0%	20,123	16,729	-16.9%
광화문정 부청사	75,754	68,247	-9.9%	78,695	75,078	-4.6%	106,494	94,743	-11.0%	128,525	102,190	-20.5%
과천정부 청사	115,506	102,610	-11.2%	115,443	100,878	-12.6%	153,628	130,301	-15.2%	193,944	176,396	-9.0%
대전정부 청사	154,570	135,794	-12.1%	172,061	146,206	-15.0%	222,888	218,785	-1.8%	283,805	240,402	-15.3%
서울특별 시청	25,919	22,952	-11.4%	28,787	29,707	3.2%	40,001	43,017	7.5%	46,045	42,708	-7.2%
인천광역 시청	35,109	36,700	4.5%	40,185	38,680	-3.7%	63,118	64,166	1.7%	71,596	60,344	-15.7%
경기도청	37,125	39,274	5.8%	36,583	39,476	7.9%	48,446	52,646	8.7%	65,087	71,932	10.5%
충북도청	21,934	21,735	-0.9%	21,370	21,807	2.0%	27,904	27,429	-1.7%	38,265	37,851	-1.1%
충남도청	26,720	26,235	-1.8%	29,326	27,229	-7.2%	43,835	45,519	3.8%	48,089	39,340	-18.2%
대전광역 시청	51,475	50,096	-2.7%	62,871	56,133	-10.7%	93,812	94,812	1.1%	100,474	84,231	-16.2%
전북도청	49,757	51,214	2.9%	61,557	55,641	-9.6%	90,870	87,522	-3.7%	93,133	76,712	-17.6%
전남도청	47,205	39,610	-16.1%	49,714	44,215	-11.1%	71,729	62,363	-13.1%	92,195	74,280	-19.4%
광주광역 시청	44,845	45,640	1.8%	51,134	46,980	-8.1%	77,155	75,572	-2.1%	85,780	66,060	-23.0%
경남도청	30,861	30,106	-2.4%	32,698	32,724	0.1%	43,816	47,466	8.3%	59,179	56,885	-3.9%
부산광역 시청	71,952	70,150	-2.5%	75,838	71,765	-5.4%	109,770	117,159	6.7%	121,433	105,708	-12.9%
울산광역 시청	20,022	21,010	4.9%	21,811	25,217	15.6%	33,307	43,471	30.5%	38,146	39,874	4.5%
대구광역 시청	14,616	14,359	-1.8%	15,759	15,556	-1.3%	22,292	24,405	9.5%	27,379	23,900	-12.7%
경북도청	28,177	29,207	3.7%	29,679	30,374	2.3%	43,214	43,808	1.4%	56,360	47,904	-15.0%
강원도청	21,955	24,977	13.8%	22,183	25,407	14.5%	27,901	29,126	4.4%	41,150	41,505	0.9%
제주도청	14,962	15,096	0.9%	15,183	14,538	-4.2%	23,955	23,735	-0.9%	28,946	21,874	-24.4%

(3) 경기도 행정서비스 전국에서 꼴찌!

■ 2008년 정보공개 운영실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경기도민 알권리 가장 침해 많이 당해!

(2008년 10월 14일)

-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정보공개 운영실태 만족도 조사에서 경기도가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고 지적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2008년 1월 전국 75개 시·군·구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를 위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살펴보면 총 20점 만점 중 부산광역시가 14.18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 13.82, 강원도 13.65, 대전 13.62, 서울 13.48, 대구 13.33 순이다.
- 한편 16개 광역자치단체 전체 평균은 13.11인 가운데 정보공개운영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11.87)로 밝혀졌으며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만족도를 나타낸 지역은 광주 12.38, 경남 12.38, 전남 12.53, 경북 12.70, 전남 13순이다.
- 조사내용을 보면 ‘정보공개 신청방법과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의 정도’,

‘정보공개를 청구한 기관에 청구한 정보가 존재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정도’,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친절성 및 성실성’, ‘담당공무원이 청구인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려고 노력한 정도’, ‘정보공개 신속성’, ‘업무처리 방식 및 절차의 합리성’, ‘제공된 정보와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와의 일치성’, ‘비공개(부분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비공개 사유의 명확성’, ‘정보공개 청구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평가하였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정보공개 만족도 순위〉

순위	기관명	만족도	순위	기관명	만족도
1	부산	14.18	9	인천	13.10
2	충북	13.82	10	전북	13.08
3	강원도	13.65	11	전남	13.00
4	대전	13.62	12	울산	12.85
5	서울	13.48	13	경북	12.70
6	대구	13.33	14	광주	12.38
7	제주	13.15	15	경남	12.38
8	충남	13.13	16	경기도	11.87

- 특히 경기도의 만족도 결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보공개 신청방법과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 13.47로 5위, ‘정보공개 청구한 기관에 청구한 정보의 존재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는지 여부’ 16위(11.20), ‘담당공무원의 친절성과 성실성’ 16위(11.87),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노력한 정도’ 16위(11.60), ‘정보공개의 신속성’ 14위(12.40), ‘업무처리방식 및 절차의 합리성’ 16위(11.60), ‘제공된 정보와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의 일치성’ 16위(10.96), ‘비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비공개 사유의 명확성’ 9위(12), ‘정보공개의 청구업무 처리전반에 대한 만족도’ 16위(11.73)로 나타났다.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행정정보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뿐만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 및 참여의식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기도는 비공개 사유 및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필요한 정보만 비공개로 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16개 시도별 정보공개 만족도조사 평가 결과>

문항(만족도 n=3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1. 정보공개 신청방법과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	13.20	13.60	13.60	13.07	12.53
2. 정보공개 청구한 기관에 청구한 정보의 존재여부를 쉽게 알수 있었는지 여부	13.33	14.53	13.20	13.07	12
3. 담당공무원은 친절성과 성실성	13.47	14.53	13.07	12.93	12.53
4.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려고 노력한 정도	13.20	14.27	13.47	15.53	12.80
5. 정보공개 신속성	13.87	14.27	13.47	13.33	12.13
6. 업무처리방식 및 절차의 합리성	13.87	14.27	13.33	12.93	12.40
7. 제공된 정보와 청구인이 원한 정보의 일치성	13.63	14.27	13.63	13.33	12.15
8. 비공개에 대한 법적근거 및 비공개 사유의 명확성	10.67	13.78	10.67	13.33	12
9. 정보공개 청구업무 처리전반 만족도	13.60	12	13.20	13.60	12.53
전체	13.48	14.40	13.33	13.10	12.38

문항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북
1. 정보공개 신청방법과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	13.33	13.20	13.47	14.13	13.87
2. 정보공개 청구한 기관에 청구한 정보의 존재여부를 쉽게 알수 있었는지 여부	13.60	12.53	11.20	13.33	13.47
3. 담당공무원은 친절성과 성실성	13.87	12.13	11.87	13.60	13.87
4.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려고 노력한 정도	13.87	12.67	11.60	13.73	13.60
5. 정보공개 신속성	13.60	13.07	12.40	13.47	13.40
6. 업무처리방식 및 절차의 합리성	13.07	12.93	11.60	13.20	13.47
7. 제공된 정보와 청구인이 원한 정보의 일치성	13.93	13.04	10.96	13.33	13.63
8. 비공개에 대한 법적근거 및 비공개 사유의 명확성	12	12	12.00	17.33	14.67

9. 정보공개 청구업무 처리전반 만족도	13.87	13.33	11.73	14	14.13
전체	13.62	13.33	11.87	13.65	13.82

문항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 정보공개 신청방법과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	12.93	13.47	13.60	13.07	13.07	12.93
2. 정보공개 청구한 기관에 청구한 정보의 존재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는지 여부	13.47	13.07	13.20	12.27	10.80	13.60
3. 담당공무원은 친절성과 성실성	13.33	13.33	13.20	12.27	12.00	13.20
4.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려고 노력한 정도	13.07	12.53	13.07	12.80	12.80	12.93
5. 정보공개에의 신속성	12.67	13.20	12.53	13.47	12.40	13.33
6. 업무처리방식 및 절차의 합리성	13.60	13.20	13.07	12.53	12.40	13.47
7. 제공된 정보와 청구인이 원한 정보의 일치성	13.19	13.19	12.30	12.30	13.33	13.04
8. 비공개에 대한 법적근거 및 비공개 사유의 명확성	13.33	14.67	13.33	13.33	8.00	10.67
9. 정보공개 청구업무 처리전반 만족도	12.80	12.53	12.93	12.80	12.80	12.93
전체	13.13	12.53	13	12.70	12.38	13.15

8. 경기지방경찰청

(1) 경찰대학 골프장은 환경감시 사각지대!

■ 맹독성 농약(엔도수판) 검출!

■ 2007년 농약 구입 예산 6,300만원, 사용량 580Kg,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 전국 골프장 평균치의 2.2배!

■ 경찰대 학생, 교내 골프장 과다 농약 사용 무방비 노출 위험
(2008년 10월 14일)

- 10월 14일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소남 의원(한나라당·행정안전위원회)의 질의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골프장이 관할 지자체로부터 연 2회 농약사용량 점검을 받고 있는데, 경찰대학 골프장만 대상에서 제외되어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07년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일반 골프장의 경우에는 ha (헥타르)당 평균 약 12.8Kg의 농약을 사용, 이 가운데 경기도내 골프장은 11.4Kg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2007년 경찰대학은 농약구입을 위해 예산 6,300만원을 집행했으며, 25만m² 부지에 약 580Kg의 농약을 살포했다. 이는 20kg짜리 쌀 포대 29개에 해당하는 양이다. 단위면적으로 환산하면 23.1Kg으로, 일반 골프장에 비해서 1.8배, 경기도내 골프장의 2배에 해당하는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 또한 경찰대학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2005년 골프장 토양에서는 ‘엔도술판’이라는 맹독성 농약성분이 검출되었고, 2007년과 2008년에는 중간독성을 지닌 농약성분 검출량과 빈도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칙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골프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 반기마다 골프장별로 농약사용량을 조사하고 농약잔류량을 검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경찰대학 체력단련장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농약사용 사각지대가 된 이유는 경찰대학 골프장의 정식명칭이 ‘체력단련장’으로 되어 있고, 그 소유권이 경찰대학이 아니라

‘경기지방경찰청’이라, 환경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파악이 어려웠던 점도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 한편 경찰대 체력단련장과 유사한 군부대 체력단련장은 2005년 환경부 국정감사를 계기로 측정 대상에 포함되어 일반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받고 있다.

☞ 김소남 의원 : 체력단련장의 국유재산관리청인 경기지방경찰청이 향후 경찰대학이 함께 환경부나 도청측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경찰대학 체력단련장도 농약사용량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체력단련장을 이용 학생들이 과도한 농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쓸 것.

<경찰대학 체력단련장 농약사용량>

출 수 (9홀)	면적(m ²)		총사용량(kg)		ha당 사용량(kg)		전국평균 사용량 (kg/ha)	
	총계	농약 사용 면적	농약사용 면적	실물량	성분량	실물량		성분량
2005년			26,747m ²	460.9	213.2	18.36	8.49	10.76
2006년	277,563m ²	250,816m ²	(미사용 지역은 수목림대)	470.7	200.0	18.75	7.96	12.04
2007년				579.9	251.0	23.1	10.0	12.8 (경기도내 : 11.2)

※ 자료 : 경찰청

<체력단련장 토양 검출 농약 성분>

연도	농약성분	사용량 (mg/kg)	비고
2005년	Endosulfan	0.0001	맹독성
2007년	Chlorpyrifos	0.011 (9홀) 0.027 (9홀)	보통독성
	Pendimethalin	0.066 (9홀)	저독성
2008년	Chlorpyrifos	0.03 (2홀) 0.02 (9홀)	보통독성
	Diazinon	0.02 (2홀) 0.02 (4홀)	보통독성
	Fenitrothion	0.01 (4홀)	보통독성

※ 자료 : 경찰청

(2) 도내 서바이벌 게임장, 모의총포 사각지대!

■ 게임용총의 68%는 불법개조한 “모의총포”, 법적 기준 맞게 제조·수입 후 ‘튜닝’ 거쳐 발사거리 늘려

**■ 전국 서바이벌 게임장 2/5는 경기도에
(2008년 10월 14일)**

- 레저스포츠의 일종인 ‘서바이벌 게임’장의 약 40%에 해당하는 58곳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 한편 10월 14일 경기도경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소남 의원 (한나라당·행정안전위원회)의 질의에 의하면, 현재 전국의 35만 서바이벌게임협회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임용 총 15만정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10만2000정²⁾은, 정상적으로 수입·제조한 뒤 소위 ‘튜닝’을 거쳐 성능을 향상 시킨 불법 모의총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개조를 전후로 총포의 발사거리는 기존 10미터에서 많게는 50미터까지 향상.

2) 한국서바이벌게임협회 자체 조사. (2007.12.)

- 최근 들어 서바이벌 게임이 새로운 레저스포츠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처럼 법적 기준을 넘어선 다수의 모의총포가 현장에서 사용된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 불과 2주전 광주에서 모의총포를 제작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팔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분석은 이런 모의총포는 인마살상이 가능한 파괴력이 있어서 사실상 실제 총기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 그러나 경찰청에서는 이런 불법개조 게임용총포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고 있지 않으며, 단속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년간 모의총포 단속현황은 15건에 불과한데, 이 가운데 게임용 총 단속실적 전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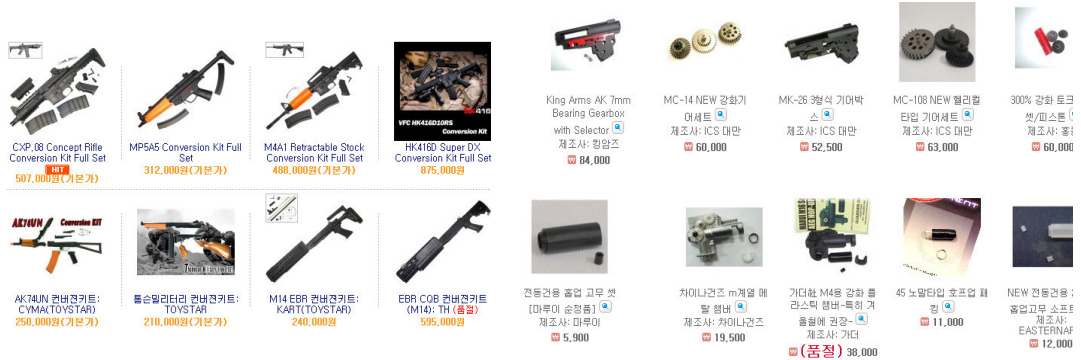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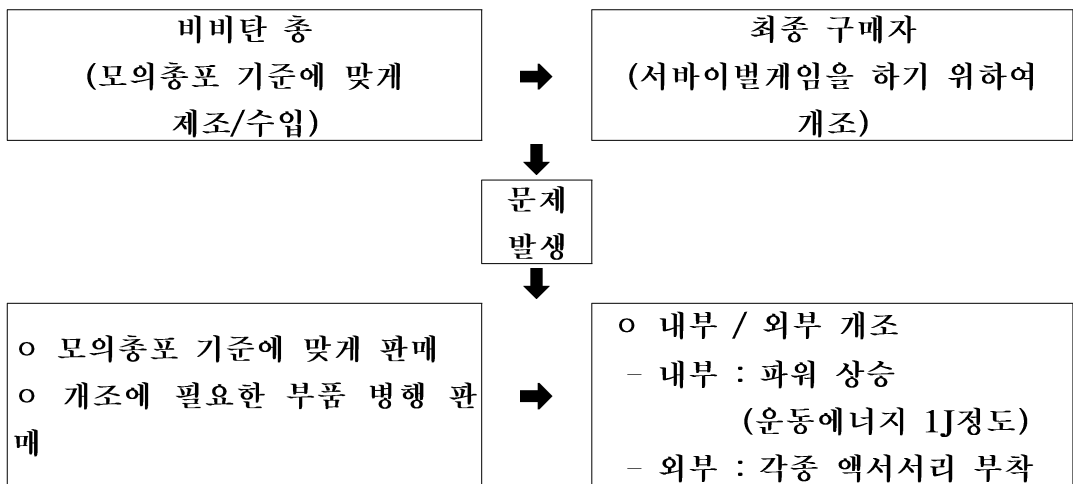
<연도별 모의총포 단속현황>

구분	' 05년	' 06년	' 07년	' 08. 7월
계(건)	6	2	5	2

- 현재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서바이벌게임용 총기를 판매하고 있다. 이런 총들은 실제로는 법적 기준에 맞게 수입·제조 한 후, 발사거리를 늘릴 수 있도록 튜닝 부품들을 별도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불법개조를 부추기고 있다.
- 한편, 외국은 우리나라의 게임용 총에 비해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70배까지 성능 차이가 나고, 심지어 미국, 대만, 홍콩은 게임용 모의총기 성능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나친 규제는 아닌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김소남 의원 : 경찰은 서바이벌게임장 모의총포 실태에 대해 파악해 보고, 국민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서바이벌게임용총에 대한 법적규제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서바이벌 게임용 모의총기 불법 개조>



(모의총포 기준에 맞게 판매)

(개조 관련 부품 병행 판매)

(3) 2007년 도내 부동산투기 범 3,358명, 전국의 45%!

■ 지난 3년간 부동산투기로 적발된 경기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도 7명! (2008년 10월 14일)

- 10월 14일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소남 의원(한나라당·행정안전위원회)의 질의에 따르면, 2005년부터 금년 7월말까지 3년7개월간 부동산투기로 경찰에 적발된 투기사범은 무려 29,380명으로 하루 평균 약 31명이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인원(법인포함)은 총 23,428명(80%)이다.
- 지역별 부동산투기사범 현황에서는 경기도가 3,358명(45%)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1,123명(15%), 부산 595명(8%), 인천(563) 순으로 나타났다.
- 경기지역의 경우 부동산투기사범이 전년 (3,906명)에 비해 절대적인 수에서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전국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40%에서 45%으로 오히려 5%가량 증가했다.
- 한편 전국 부동산투기사범의 죄명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이 12,056명(42%)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이 8,828명(30%), [주택법] 위반 3,553명(12%) 순이다.

- 이 가운데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이 2,078명(6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이 867명(26%), 주택법 위반 219명(7%)으로,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무허가 건축 또는 용도변경 행위를 한 투기꾼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도내 부동산 투기범 사례를 보면,

- '06. 9. 25부터 미분양으로 인한 회사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소재 ○○○ 아파트 분양권 56매를 떼다방 업체들에게 공급한 후, 세대당 평균 3,000만원상당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하는 등 아파트 공급 질서를 문란케 한 건설사 대표 등 72명 검거 ('08. 6월, 경기·수사과),
-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경기 광주시 퇴촌면 소재 임야 등 29,000여평 (시가30억)을 200평씩 분할 후, 박○○ 등 56명에게 “신도시 유치 가능, 전원 주택지”라고 현혹하여 평당 30~50만원씩 매매하는 방법으로 72억원을 받아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기획부동산 업자 및 불법거래자 58명 검거 ('07. 5월, 경기·광주서)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 한편 이들 투기범 가운데는 경기지역 경찰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 2005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1명,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1명, [주택법] 1명, 2007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2명, 2008년 [주택법] 위반 2명 등 총 7명의 도내 경찰관이 부동산투기로 적발된 바 있는데, 투기범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 내부까지 파고든 부동산 투기범

죄가 매우 심각하다고 하겠다.

☞ 김소남 의원 : “도내 부동산 투기요인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사범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경기지역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상시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국토해양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투기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등 정책적인 협조를 통해 투기사범을 근절해야 할 것.”

〈부동산투기사범 기소의견 송치 현황〉

구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주택법
	기소의견 송치인원	기소의견 송치인원	기소의견 송치인원	기소의견 송치인원	기소의견 송치인원
2005	3,070	2,674	736	507	754
2006	3,071	1,773	1,151	439	727
2007	2,517	1,672	117	342	694
2008 7월말	1,660	887	59	165	413

※ 범인을 포함.

<부동산투기사범 발생 및 검거현황>

- 2005년

구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 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 치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 의등기에관한법률			주택법		
	발생	검거	인원	발생	검거	인원	발생	검거	인원	발생	검거	인원	발생	검거	인원
계	2,537	2,453	4,094	2,085	2,063	3,062	342	324	718	295	268	709	640	618	998
서울	311	443	749	310	408	490	26	19	35	60	57	125	145	154	287
부산	367	337	429	144	151	222	5	5	19	14	17	55	32	42	71
대구	67	64	105	18	23	30	3	3	6	12	8	23	8	7	32
인천	135	123	191	133	172	241	11	8	13	33	12	93	36	38	104
울산	26	26	32	34	30	44	8	9	20	4	3	12	11	9	19
광주	27	27	51	22	26	32	0	0	0	5	7	15	18	19	31
대전	52	50	56	12	25	33	1	1	1	10	12	20	6	6	7
경기	1,428	1,229	2,302	1,093	922	1,541	152	146	305	76	71	146	215	194	255
강원	1	0	0	18	17	24	5	5	11	2	2	6	52	43	51
충북	3	6	11	23	25	34	20	21	65	5	5	11	6	6	19
충남	5	6	13	60	45	78	83	80	185	27	29	114	16	14	18
전북	0	0	0	30	32	53	1	1	3	10	10	21	7	6	11
전남	35	35	36	29	28	41	3	3	10	13	12	19	5	4	5
경북	7	10	12	69	67	85	17	15	28	10	12	35	29	27	32
경남	73	97	107	83	82	102	5	6	11	11	8	12	53	48	55
제주	0	0	0	7	10	12	2	2	6	3	3	2	1	1	1

- 2006년

구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주택법		
	발생	검거	인원	발생	검거	인원	발생	검거	인원	발생	검거	인원	발생	검거	인원
계	2,463	2,445	4,203	1,415	1,368	2,315	574	563	1,368	282	281	803	601	584	966
서울	311	462	783	269	290	367	24	24	73	63	60	144	111	115	180
부산	399	374	518	62	85	131	2	3	6	9	7	24	9	11	28
대구	50	50	69	30	32	58	0	1	2	9	7	13	3	4	4
인천	143	185	316	81	86	297	9	10	35	17	30	69	47	47	119
울산	19	19	21	74	45	54	7	9	18	11	13	38	2	3	4
광주	11	11	20	10	15	15	1	1	1	3	3	7	275	269	399
대전	35	36	38	14	8	9	43	10	60	3	5	11	26	20	25
경기	1,429	1,221	2,329	529	459	821	202	191	420	103	92	332	3	3	4
강원	0	0	0	32	29	39	3	2	5	9	8	22	29	25	49
충북	4	2	2	31	32	66	48	46	92	9	9	12	4	5	9
충남	4	7	8	42	47	95	209	243	599	15	12	66	4	5	6
전북	0	1	1	32	30	47	2	2	3	7	7	13	32	23	43
전남	26	27	31	29	28	33	6	6	6	8	10	20	23	23	52
경북	6	6	6	78	76	83	5	4	12	5	6	10	2	2	2
경남	26	43	58	101	104	198	5	5	26	9	9	15	16	16	22
제주	0	1	3	1	2	2	8	6	10	2	3	7	15	13	20

- 2007년

구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주택법		
	발생	검거	인원	발생	검거	인원	발생	검거	인원	발생	검거	인원	발생	검거	인원
계	2,090	2,058	3,337	1,298	1,260	2,220	103	97	208	283	250	629	653	629	1,042
서울	203	237	395	129	142	202	21	20	38	73	61	195	136	155	293
부산	297	275	370	86	88	121	3	4	4	31	20	48	19	22	52
대구	49	46	63	64	63	116	2	2	1	4	5	6	8	5	6
인천	100	104	139	44	52	140	1	1	2	6	9	27	146	136	255
울산	16	15	19	79	73	131	5	5	13	15	16	24	6	3	7
광주	34	35	43	24	25	28	0	0	0	2	2	7	9	11	15
대전	35	33	39	17	18	37	1	1	1	4	3	4	11	9	18
경기	1,230	1,167	2,078	470	424	867	20	17	37	82	77	157	186	162	219
강원	0	1	1	38	35	60	3	3	9	13	10	30	20	20	26
충북	1	1	1	27	26	41	3	4	11	6	5	9	4	4	5
충남	3	4	5	31	28	45	9	7	14	12	9	31	18	18	34
전북	0	1	1	48	47	70	3	3	5	2	1	5	14	13	20
전남	30	30	33	36	34	57	6	6	15	7	6	10	20	19	26
경북	22	25	25	86	82	107	7	7	18	9	8	43	42	38	41
경남	70	84	125	112	116	184	15	14	32	16	17	31	14	14	25
제주	0	0	0	7	7	14	4	3	8	1	1	2	0	0	0

- 2008. 7월 말

구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주택법		
	발생	검거	인원	발생	검거	인원	발생	검거	인원	발생	검거	인원	발생	검거	인원
계	271	264	422	823	803	1,231	65	61	145	179	168	363	400	388	547
서울	17	21	26	196	205	301	6	7	18	60	49	97	110	116	153
부산	38	40	51	34	34	47	1	0	1	8	8	15	20	22	29
대구	7	7	10	16	18	27	0	1	1	5	6	17	9	6	13
인천	11	10	15	24	48	72	4	3	7	4	7	19	71	41	79
울산	2	2	2	20	19	28	2	3	18	6	4	7	10	6	22
광주	5	4	9	31	32	37	0	0	0	1	3	24	6	6	9
대전	2	1	1	4	3	6	2	3	13	5	8	16	5	5	9
경기	171	164	288	310	249	428	15	13	31	47	44	85	118	136	162
강원	0	0	0	17	19	28	3	2	2	4	2	5	3	3	3
충북	0	0	0	19	18	26	4	4	8	7	6	14	8	7	7
충남	0	1	1	11	16	25	8	8	13	10	8	25	6	7	8
전북	0	0	0	20	20	27	2	2	5	5	6	12	13	13	19
전남	1	1	3	16	16	21	5	5	9	5	5	5	1	2	4
경북	0	0	0	28	29	46	6	3	4	3	3	3	16	14	26
경남	17	13	16	74	74	108	7	7	15	8	8	18	4	4	4
제주	0	0	0	3	3	4	0	0	0	1	1	1	0	0	0

9. 부산광역시

(1) 부산시민 혈세 낭비하는 부정수급가구 85% 급증

■ 부정수급가구에게 지급된 금액 ‘06년 2억5천만원 → ‘07년 5억7천만원 (2008년 10월 16일)

- 국정감사 부산광역시에 대한 김소남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의 질의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의 미흡한 급여관리 및 도덕적 해이로 인해 기초생활부정수급가구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광역시 기초생활수급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77,117가구로 2006년 73,587가구보다 4.8%(3,530가구) 증가하였으며 구·군별로 살펴보면 2007년 북구가 전체의 11.3%(8,716가구)로 가장 많으며 부산진구 11%(8,499가구), 해운대구 10.3%(7,968가구), 사하구 10.2%(7,864가구) 순이다.

<부산광역시 기초생활수급가구 현황>

(단위: 가구)

연도	2006년	2007년
계	73,587	77,117
중 구	1,505	1,516
서 구	3,735	3,916
동 구	4,443	4,612
영도구	4,795	5,233
부산진구	8,346	8,499
동래구	3,212	3,336
남 구	4,511	4,746
북 구	8,118	8,716
해운대구	7,309	7,968
사하구	7,934	7,864
금정구	4,518	4,577
강서구	1,405	1,392
연제구	3,384	3,729
수영구	2,438	2,727
사상구	6,020	6,361
기장군	1,914	1,925

- 한편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가구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7년 부정수급가구는 345가구로 2006년 190가구보다 85%(155가구) 증가하였으며 구·군별로 살펴보면 북구가 15.9%(55가구)로 가장 많으며, 부산진구 15%(52가구) 남구 13.9%(48가구), 영도구 12.5%(43가구) 순이다.
- 또한 부정수급가구에 지급된 금액을 살펴보면 2007년 총 5억7천만원으로 2006년 2억5천만원 보다 128.4% 증가하였다.

<부산광역시 부정생활수급가구 현황>

(단위: 가구, 천원)

구 분	2006년		2007년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계	190	250,034	345	570,958
중 구	4	15,425	2	1,235
서 구	8	10,758	15	22,127
동 구	9	9,164	18	28,677
영 도 구	13	1,662	43	157,105
부산진구	22	24,138	52	73,716
동래구	4	13,224	4	16,009
남 구	28	48,259	48	36,118
북 구	51	42,238	55	34,865
해운대구	7	7,618	10	18,980
사 하 구	17	23,111	14	15,554
금 정 구	4	6,471	26	42,102
강 서 구	6	2,217	6	4,280
연 제 구	5	6,264	9	32,706
수 영 구	9	15,570	13	28,553
사 상 구	2	20,798	16	16,554
기 장 군	1	3,117	14	42,377

- 한편 <부산광역시 탈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탈수급율은 9.6%(7,406가구)로 2006년 8.6%(6,363가구)보다 1% 증가하였으며 2007년 구·군별로 살펴보면 사하구가 20.1%로 가장 높고 기장군 16.8%, 동래구 13.6%, 부산진구 11%순이며 탈수급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영도구 4.5%로 나타났다.
- 특히 부산 영도구의 경우 2007년 기초생활수급가구가 2006년 대비 9.1% 증가하였고, 부정수급가구는 230.8% 증가하였으나 탈수급가구율은 2006년도에 5%에서 2007년도 4.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 탈수급가구 현황>

(단위: 가구)

연도	2006년		2007년	
	가구	비율(%)	가구	비율(%)
계	6,363	8.6	7,406	9.6
중 구	130	8.6	143	9.4
서 구	299	8.0	315	8.0
동 구	338	7.6	371	8.0
영도구	239	5.0	236	4.5
부산진구	974	11.7	939	11.0
동래구	184	5.7	453	13.6
남 구	405	9.0	403	8.5
북 구	655	8.1	461	5.3
해운대구	559	7.6	608	7.6
사하구	978	12.3	1,597	20.3
금정구	398	8.8	409	8.9
강서구	103	7.3	123	8.8
연제구	223	6.6	255	6.8
수영구	156	6.4	181	6.6
사상구	568	9.4	588	9.2
기장군	154	8.0	324	16.8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기초생활수급가구와 더불어 부정수급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 검증시스템 및 관리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며 “앞으로 부정수급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 자살사고 난 지하철역 스크린 도어 설치 5%

■ 자살사고 난 40개역 중 스크린도어 설치된 역 2개역에 불과 (2008년 10월 16일)

- 최근 연예인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자살문제가 우리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 부산광역시에 대한 김소남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의 질의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8년 6월까지 부산지하철에 발생한 자살사고는 총 74건으로 그 중 사망자 수는 49명, 부상자는 25명으로 나타났다.
- 2003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최근 6년간 부산지하철역 자살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자살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1호선 시청역으로 총 6건이 발생하였으며 서면역은 5건, 연산동, 동래, 토성동, 부산진, 남포동, 덕천, 사상, 서면(2호선)등 8개역은 3건 순이다.
- 한편 부산 지하철 자살사고는 총 94개 역 중 42.6%인 40개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하철역 중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은 23개 역으로 전체의 24.5%에 불과한 실정이다.
- 특히 자살사고가 발생한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은 5%(2개역)로 지하철 자살사고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2008년 초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1호선, 2호선 서면역은 자살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최근 부산광역시의 자살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자살사고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며 ”최근 우리사회에 만연하는 자살 악성바이러스가 조속히 근절될 수 있도록 스크린도어 설치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신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고 말했다.

<부산지하철역 자살사고 현황>

호선	역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6	합계	스크린도어 설치
	합계(사망자)	13(10)	18(12)	15(11)	12(5)	11(6)	5(5)	74(49)	
1호선	서면	1	2		1	1		5	●
	시청	2		3	1			6	
	연산동	1	1	1				3	
	교대앞	2						2	
	동래	1	2					3	
	토성동	1	1	1				3	
	부산진	1	1	1				3	
	좌천동	1						1	2
	중앙동		1			1			2
	남산동		1	1					2
	하단		1						1
	부산역		1						1
	양정			1		1			2
	서대신동			1					1
	두실			1					1
	온천장					1			1
	초량동					1	1		2
	노포동					1			1
	사하						1		1
	범일동						2		2
	남포동						2	1	3
	구서동						1		1
대터							1	1	
장전동							1	1	
2호선	금곡	1						1	
	덕천	1	1		1			3	
	광안	1			1			1	
	사상		2				1	3	
	대연		1					1	
	서면		1	1		1		3	●
	해운대		1					1	
	냉정		1					1	
	못골			1				1	
	동원			1				1	
	부암			1				1	
	감전			1				1	
	금련산				1			1	
	전포				1			1	
	시립미술관				2			2	
개금				1			1		

(3) 항만시설 과부족 지난해 25.9% 증가

(2008년 10월 16일)

-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 국정감사에 대한 김소남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의 질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만시설 과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해양부에서 제출한 <항만시설 과부족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우리나라 항만시설 52곳의 총 화물량은 1,093,480천톤, 시설소요는 759,703천톤이며 하역능력은 672,871천톤으로 86,862천톤의 과부족이 발생하였고 시설확보율은 88.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6년도와 비교해 보면 화물량은 5.5%, 시설소요는 7%, 하역능력은 4.9% 증가하였으나 과부족은 2006년보다 2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항만시설에 대한 과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항만시설 과부족현황〉

(단위 : 천톤, %)

구 분		2006	2007
총계	화 물 량	1,036,843	1,093,480
	시설소요	710,167	759,703
	하역능력	641,177	672,871
	과 부 족	△68,990	△86,832
	시설확보율	90.3	88.6

- 2007년 지역별 항만시설 확보율을 살펴보면, 시설확보율이 가장 낮은 항만시설은 경남 통영항으로 63.4%에 불과하며 부산항 68.8%, 충남 대산항 70%, 경북 포항항 78.2%순이다.

- 특히 동북아의 물류중심기지인 부산항의 경우 2007년 화물량이 총 243,565천톤, 시설소요 235,527천톤으로 전체 화물량의 22.3%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나 하역능력이 162,071천톤 밖에 안 되어 73,456천톤의 과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물류산업의 중심에는 부산항이 있지만 과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심각하다”며 “앞으로 부산항이 동북아의 물류중심 기지로서 세계적 물류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부산항을 아시아의 허브항만으로 집중 육성해야 하며 선진화된 항만운영방식을 적극 도입하는 등 항만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항만시설 과부족현황>

(단위 : 천톤, %)

구 분		2006	2007	
총계	화 물 량	1,036,843	1,093,480	
	시설소요	710,167	759,703	
	하역능력	641,177	672,871	
	과 부 족	△68,990	△86,832	
	시설확보율	90.3	88.6	
부산광역시	부산항	화 물 량	229,939	243,565
		시설소요	222,651	235,527
		하역능력	143,111	162,071
		과 부 족	△79,540	△73,456
		시설확보율	64.3	68.8
인천광역시	인천항	화 물 량	129,566	138,139
		시설소요	84,925	92,243
		하역능력	73,133	78,122
		과 부 족	△11,792	△14,121
		시설확보율	86.1	84.7
경기도	평택·당진항	화 물 량	44,235	48,093
		시설소요	23,964	26,944
		하역능력	16,708	21,930
		과 부 족	△7,256	△5,014
		시설확보율	69.7	81.4
충청남도	보령항	화 물 량	9,258	9,213
		시설소요	9,207	9,159
		하역능력	10,644	10,644
		과 부 족	1,437	1,485
		시설확보율	115.6	116.2
	대산항	화 물 량	52,649	53,516
		시설소요	11,792	13,781
		하역능력	9,072	9,644
		과 부 족	△2,720	△4,137
		시설확보율	76.9	70.0
	태안항	화 물 량	8,670	11,346
		시설소요	8,622	11,284
		하역능력	10,886	10,886
		과 부 족	2,264	△398
		시설확보율	126.3	96.5

(단위 : 천톤, %)

구 분		2006	2007	
전라북도	군산항	화물량	17,502	17,686
		시설소요	15,366	15,646
		하역능력	17,628	17,628
		과부족	2,262	1,982
		시설확보율	114.7	112.7
	장항항	화물량	1,245	1,384
		시설소요	1,241	1,374
		하역능력	1,626	1,626
		과부족	385	252
		시설확보율	131.0	118.3
전라남도	목포항	화물량	8,979	14,203
		시설소요	8,045	13,285
		하역능력	12,675	12,675
		과부족	4,630	△1,610
		시설확보율	157.6	95.4
	완도항	화물량	234	608
		시설소요	216	590
		하역능력	464	464
		과부족	248	△126
	여수항	시설확보율	214.8	78.7
		화물량	2,789	8,344
		시설소요	900	1,327
		하역능력	3,038	3,038
		과부족	2,138	1,711
	광양항	시설확보율	337.6	229.0
		화물량	195,069	198,189
		시설소요	111,118	109,137
		하역능력	138,483	138,483
과부족		27,365	29,346	
경상남도	삼천포항	시설확보율	124.6	126.8
		화물량	19,818	20,644
		시설소요	19,687	20,522
		하역능력	19,392	19,392
		과부족	△295	△1,130
통영항	시설확보율	98.5	94.5	
	화물량	226	228	
	시설소요	152	160	
	하역능력	101	101	
	과부족	△51	△59	
마산항	시설확보율	66.4	63.4	
	화물량	11,907	13,193	
	시설소요	10,254	11,519	
	하역능력	19,668	21,120	
	과부족	9,414	9,601	
		시설확보율	191.8	183.3

구 분		2006	2007	
경상남도	진해항	화물량	744	850
		시설소요	700	836
		하역능력	2,661	2,661
		과부족	1,961	1,825
		시설확보율	380.1	318.0
	장승포항	화물량	-	-
		시설소요	-	-
		하역능력	33	33
		과부족	33	33
		시설확보율	-	-
	고현항	화물량	2,032	2,494
		시설소요	1,968	2,442
		하역능력	2,419	2,419
		과부족	451	△23
		시설확보율	122.9	99.1
옥포항	화물량	1,635	1,642	
	시설소요	1,590	1,590	
	하역능력	1,400	1,400	
	과부족	△190	△190	
	시설확보율	88.1	88.1	
울산광역시	울산항	화물량	165,717	168,652
		시설소요	51,311	56,819
		하역능력	52,035	52,035
		과부족	724	△4,784
		시설확보율	101.4	91.6
경상북도	포항항	화물량	54,971	61,875
		시설소요	54,204	61,096
		하역능력	47,291	47,790
		과부족	△6,913	△13,306
		시설확보율	87.2	78.2
강원도	동해항	화물량	21,354	22,168
		시설소요	20,773	21,662
		하역능력	30,072	30,072
		과부족	9,299	8,410
		시설확보율	144.8	138.8
	삼척항	화물량	6,417	6,801
		시설소요	6,396	6,779
		하역능력	8,694	8,694
		과부족	2,298	1,915
		시설확보율	135.9	128.3

구 분		2006	2007	
강원도	목호향	화물량	1,738	2,236
		시설소요	1,549	2,058
		하역능력	6,030	6,030
		과부족	4,481	3,972
		시설확보율	389.3	293.0
	옥계향	화물량	6,131	6,463
		시설소요	5,874	6,193
		하역능력	10,145	10,145
		과부족	4,271	3,952
		시설확보율	172.7	163.8
	속초향	화물량	185	253
		시설소요	172	238
		하역능력	579	579
		과부족	407	341
		시설확보율	336.6	243.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향	화물량	2,214	2,071
		시설소요	1,402	1,317
		하역능력	2,616	2,616
		과부족	1,214	1,299
		시설확보율	186.5	198.7
	서귀포향	화물량	481	328
		시설소요	416	287
		하역능력	573	573
		과부족	157	286
		시설확보율	137.7	199.8
기타	화물량	41,138	39,295	
	시설소요	35,673	35,888	
	하역능력	-	-	
	과부족	△35,673	△35,888	
	시설확보율			

10. 부산지방 경찰청

(1) 지난 2년간 부산지역 보이스 피싱 피해액 75억6천만원, 검거율은 19%에 그쳐! (2008년 10월 16일)

- 김소남 의원(한나라당·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에 의하면, 최근 2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940억원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1억3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 부산지역에서도 지난 2년간 75억6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검거율이 19%에 그쳤다.
전국 검거율이 65%라는 점과 비교했을 때 범인 검거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하겠다.
- 한편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례에는,

- '08. 5. 28. 13:00경, SK텔레콤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과납한 통신요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속여, L〇〇 명의 계좌로 2,194,758원을 이체받아 편취.

- '08. 5. 26. 13:00경,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 “피해자 카드로 물건이 구입되었는데 명의가 도용되었다면 조치해주겠다”고 속여 길〇〇 등 명의의 7개 계좌로 37,780,172원을 이체받아 편취.

- '08. 5. 21. 17:08경,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사칭, “당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한 범인을 검거했으며, 명의도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속여 Y〇〇 명의 계좌로 2,210,902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 보이스피싱은 사후 단속보다 예방이 중요한 범죄이다. 피해자가 이미 돈을 잃은 상황에서 범인을 잡았다 한들 피해보전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은 노인이나, 지방 주민, 서민 등 힘없는 사람들이 많아, 예방책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 김소남 의원 :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본연의 임무 중 하나라는 자세로 보이스피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부산지역 경찰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해야 할 것.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통신업체들도 보이스피싱 차단 노력에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단순히 국제전화 표시에 그치지 않고 발신지를 실시간 추적해 보이스피싱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임.”

<지역별 보이스 피싱 현황>

구분	발생건수	피해액	검거건수	검거인원	검거율(%)
계	9,463 건	939.6 억원	6,131 건	5,188 명	64.8
서울	2,047 건	204.6 억원	1,369 건	745 명	66.9
부산	921 건	75.6 억원	178 건	521 명	19.3
대구	129 건	18.1 억원	85 건	170 명	65.9
인천	1,131 건	89.6 억원	399 건	489 명	35.3
울산	373 건	30.7 억원	177 건	100 명	47.5
광주	72 건	10.2 억원	56 건	78 명	77.8
대전	281 건	30 억원	110 건	139 명	39.1
경기	1,570 건	181.2 억원	1,878 건	1,586 명	119.6
강원	167 건	17.7 억원	326 건	280 명	195.2
충북	586 건	55.2 억원	171 건	66 명	29.2
충남	361 건	37.5 억원	433 건	136 명	119.9
전북	147 건	16.3 억원	98 건	95 명	66.7
전남	325 건	33.3 억원	210 건	223 명	64.6
경북	549 건	59.9 억원	213 건	297 명	38.8
경남	510 건	45.4 억원	384 건	215 명	75.3
제주	294 건	34.3 억원	44 건	48 명	15.0

* 06. 6월 ~ '08. 7월말

(2) 부산진구, 부산시내 강력범죄 최다지역, 2008년 3,180건 발생!

-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 부산지역 5대범죄 24,060건 발생, 13%는 부산진구에서!
- 살인=해운대구(10건), 강도=부산진구(70건), 강간=부산진/해운대구(각75건), 절도=남구(1057건), 폭력=부산진구(1994건)!
- 부산 북구, 범죄 검거율 64%로 최하위!
(2008년 10월 16일)

- 금년 들어 부산시내 14개 경찰서 가운데 강력범죄가 가장 많은 곳은 부산진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 김소남 의원(한나라당·행정안전위원회)의 10월 16일 부산시경 국정감사 질의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8월말까지 부산진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5대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건수는 3,180건으로 부산지역 경찰서 중 최다였다.

- 관할인구가 부산진서(40만명)보다 많은 해운대서(50만명)와 남부서(42만명)의 5대범죄 건수는 각각 2,777건과 2,432건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부산진서가 범죄발생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진서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강간사건은 2005년 62건, 2006년 96건, 2007년 130건, 2008년 8월 75건으로, 4년째 부동의 1위이며, 범죄 건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 부산진서는 이 외에도 살인 6건(4위), 강도 70건(1위), 절도가 1,035건(2위), 폭력이 1,994건(1위)으로, 2년 연속 강력사건 최대 발생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 한편 2008년 범죄 검거율에서 부산지역은 전국 평균 검거율 75.4%보다 5%나 높은 80.8%로 높은 검거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내 각 서별로는 큰 차이를 보여, 검거율이 가장 높은 사상구(97.4%)와 가장 낮은 북구(64.3%)는 무려 33.1%p 차이를 보인다.
- 부산지역 전체 강력범죄는 2005년 30,254건, 2006년 32,214건, 2007년 33,278건, 2008년 8월말 24,06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 김소남 의원 : 부산시내에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지역별로 검거율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증폭. 또한 범죄별 우범지역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경찰의 범죄 예방활동이 미흡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어 아닌지

우려스럽다.

향후 부산시내 각 경찰서별로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통한 강력범죄 소탕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 각 서별 5대범죄 현황>

- 2007년

(단위: 건,%)

구분	발생	검거	검거율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계	33,278	27,313	82.1	84	355	598	12,806	19,435
부산진	4,338	4,144	95.5	11	69	130	1,426	2,702
해운대	3,978	3,148	79.1	15	46	85	1,457	2,375
연제	3,117	2,131	68.4	5	23	40	1,375	1,674
남부	2,635	2,401	91.1	8	25	44	926	1,632
사하	2,955	2,084	70.5	6	19	39	1,286	1,605
북부	2,645	1,867	70.6	3	24	52	1,043	1,523
동래	2,201	2,149	97.6	3	29	36	626	1,507
사상	2,075	2,096	101	16	29	38	651	1,341
금정	2,257	1,935	85.7	8	23	40	954	1,232
동부	1,955	1,338	68.4	1	14	28	787	1,125
중부	1,701	1,239	72.8	3	16	24	754	904
영도	1,411	1,150	81.5		16	19	562	814
서부	1,478	1,082	73.2	2	12	15	708	741
강서	531	394	74.2	3	10	8	251	259
지방청	1	155	15500					1

- 2008년

(단위: 건,%)

구분	발생	검거	검거율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계	24,060	19,442	80.8	62	317	459	9,606	13,616
부산진	3,180	2,742	86.2	6	70	75	1,035	1,994
해운대	2,777	2,224	80.1	10	39	75	998	1,655
남부	2,432	2,153	88.5	7	63	33	1,057	1,272
사하	2,031	1,380	67.9	4	16	23	951	1,037
북부	1,947	1,251	64.3	5	13	35	796	1,098
연제	1,906	1,542	80.9	7	16	37	642	1,204
금정	1,884	1,431	76	3	19	27	925	910
사상	1,757	1,711	97.4	3	28	40	672	1,014
동래	1,515	1,430	94.4	5	12	37	398	1,063
중부	1,183	791	66.9	1	9	22	565	586
동부	1,151	843	73.2	2	17	18	506	608
서부	1,024	792	77.3	4	9	12	518	481
영도	919	777	84.5	2	3	21	353	540
강서	354	244	68.9	3	3	4	190	154
지방청		131						

※ 자료 : 경찰청

(3) 2008년 10월, PIFF·롯데자 이언츠·부산불꽃축제에 동원된 경찰 8,500명, 90%는 전의 경!

- 17·18일 개최되는 ‘제4회 부산불꽃축
제’ , 부산지역 기동대 총동원령!
- 4년간 불꽃축제 동원경력 1만5천여명!
- 동원경력 90%는 전의경
- 한편 기동대 감사결과 부산지방경찰청
은 전의경에 대한 관심과 관리감독이 소
홀한 것으로 드러나...
(2008년 10월 16일)

- 김소남의원 (한나라당·행정안전위원회)의 10월 16일 부산지
방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에 의하면, 올해 10월 부산지역 혼
잡경비에 동원된 경력이 8,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 금년 10월은 보름동안 대규모 행사 3개가 한꺼번에 개최됨

에 따라 부산시내 혼잡경비 수요가 급증했다고 하겠다.

행사별로는,

- 10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열린 ‘부산국제영화제(PIFF)’ 경비를 위해 경찰 163명과 26개 중대 등 총 2,763명이 동원,
- 10월 8일과 9일 양일간 롯데자이언츠와 삼성라이온즈 간 준플레이오프전에서 6중대 총 600여명 동원,
-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4회 부산불꽃축제’에는 경찰관 864명과 42개 중대 총 5,064명이 동원될 예정이다. 특히 4회를 맞는 부산불꽃축제는 매년 100만명 이상의 관중이 운집, 금년에도 전야제와 본행사를 합쳐 경찰 추산 150만명의 관중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규모 행사로, 지난 4회를 거치며 동원된 경력만도 약 1만5천명에 달한다.

- 한편 김소남 의원은 이런 혼잡경비를 위한 대규모 경력 동원이 치안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즉, 시내 전역에 걸쳐 방범 활동을 담당하던 전의경이 이번 주말 광안리 인근으로 총동원된다는 것은, 광안리 외 다른 지역의 치안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이런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해 경찰은 대규모 행사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경비대책을 마련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행사 주최측의 자체질서 안전요원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혼잡경비에 동원되는 경력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경찰력과 민간경비 인력이 조화되어 공동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혼잡경비에 있어 민간과 경찰의 협력이 균형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대규모로 참석하는 행사에 있어 혼잡경비에 대한 업무를 경찰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의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경찰력 동원은 불가피하다고 김소남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부산시경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 주말 불꽃축제에서도 동원될 경찰력이 행사 주최측인 부산시의 자체 질서유지 인력(3,075명)보다 약 2,000명 가량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이 같은 혼잡경비를 위한 동원경력의 대부분은 치안보조 업무를 맡고 있는 전의경들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산지역에서 이 달 동원되는 8,500명 경력의 90%에 해당하는 7,400명이 전의경이다.

- 그러나 금년 5월 부산청이 실시한 ‘기동대 등 외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실상 집회시위나 일반 혼잡경비의 일선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전의경들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관심과 배려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부산지역 전의경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그들에 대한 현실적 처우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동 감사에서는,

- 전의경 봉급·휴가비·전역비 지연 지급, 우유 보급에 대한 소원수리 건의사항 조치결과 미흡, 전의경 부대 청사내 철재 등이 잘 부식되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세면장 옷걸이 부식

상태로 사용, 부식업체로부터 부식 반입 시 검수자의 형식적 관리, 부식보관 창고를 반지하에 두어 위생관리 소홀, 전의경 격려금으로 위성안테나 구입, 취사장 식기세척기를 수리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방치, 취사장 위생관리 형식적 점검, 청사 내 자체사고 위협지역 조치 미흡, 전의경 신상면담관리 소홀, 전의경 자체사고 방지대책 업무소홀, 상시약품 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표1> 부산불꽃축제 연도별 경찰관 및 전의경 동원 현황

구 분	계	경찰관	전의경	축제기간, 관중
2005년	경찰329명 32개중대	329명	32개중대	11.16 100만명
2006년	경찰376명 21개중대	376명	21개중대	11.10 100만명
2007년	경찰577명 31개중대	577명	31개중대	10.19-20 전야제 : 30만명 본행사 : 115만명
2008년	경찰864명 42개중대	864명	42개중대	10.17-18 전야제 : 40만명 본행사 : 110만명

<표2> 사직구장 경력동원 현황

구 분	계	수익성 행사명	동원경력	
2007년	4월 10일	2중	2중	
	4월 11일	1중	2007프로야구개막전	1중
	4월 12일	1중		1중
	4월 20일	1중		1중
	4월 21일	1중	프로야구 롯데 : 현대	1중
	4월 22일	1중		1중
	5월 01일	1중		프로야구롯데 : 기아
	5월 05일	1중	프로야구 롯데 : 삼성	1중
	5월 06일	1중		1중
	5월 18일	1중	프로야구 롯데 : 한화	1중
	5월 19일	1중		1중
	5월 20일	1중		1중
	7월 16일	2중1소	프로야구전야콘서트	2중1소
	7월 17일	1중	프로야구올스타전	1중
2008년	4월 1일	1중	프로야구개막전	1중
	10월 08일	3중	준플레이 오프전	3중
	10월 09일	3중		3중

<표3> 부산국제영화제 연도별 경찰관 및 전의경 동원 현황

구 분	계	경찰관	전의경	비 고
2006년	경찰108명 6개중대	108명	6개중대	10.12 ~ 10.20<9일간> 전야제 : 22명, 1중 관중 2,000 개막식 : 30명, 2중 관중 7,000 폐막식 : 30명, 2중 관중 5,000 스타로드 : 26명, 1중 관중 2,000
2007년	경찰163명 10개중대	163명	10개중대	10. 4 ~ 10.12<9일간> 전야제 : 22명, 1중 관중 2,000 개막식 : 56명, 3중1소 관중 7,000 폐막식 : 56명, 3중1소 관중 5,000 스타로드 : 29명, 2중1소 관중 2,000
2008년	경찰163명 10개중대	163명	10개중대	10. 2 ~ 10.10<9일간> 전야제 : 26명, 1중1소 관중 2,000 개막식 : 53명, 3중1소 관중 10,000 폐막식 : 53명, 3중1소 관중 6,500 스타로드 : 31명, 2중 관중 4,000

※ 자료 : 부산지방경찰청

<표4> 부산지방경찰청 기동대 등 외청 자체감사 결과

(감사기간 : 2008. 5. 28 ~ 6. 3)

연번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1	○ 지출증거서류 작성 소홀	○ 관련자 주의조치
2	○ 전·의경 봉급 지연 지급	○ 관련자 주의조치
3	○ 소원수리 건의사항 조치결과 미흡	○ 관련자 주의조치
4	○ 부대 청사관리 미흡	○ 관련자 시정조치
5	○ 부식검수관리 소홀	○ 관련자 시정조치
6	○ 격려금(위로금) 목적외 사용 및 집행 소홀	○ 관련자 주의조치
7	○ 인사기록카드 정리 상태 소홀	○ 관련자 주의조치
8	○ 비밀관리기록부 정리 미흡	○ 관련자 주의조치
9	○ 사용가능 고가장비 수리않고 방치	○ 관련자 시정조치
10	○ 위생관리업무 소홀(형식적 점검)	○ 관련자 위생소독 등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 및 시정조치
11	○ 정부구매카드 미사용	○ 관련자 주의조치
12	○ 전·의경 휴가비 및 전역비 지급지연	○ 관련자 주의조치
13	○ 대원 신상관리부 정리상태 미흡	○ 관련자 시정조치
14	○ 청사내 자체사고 위험지역 적극 조치 미흡	○ 관련자 주의조치
15	○ 전·의경 급식비 과다 집행	○ 관련자 주의조치
16	○ 취사대원 결격자 조치 미흡	○ 관련자 주의조치

17	○ 경찰작전부대 사격훈련 미실시	○ 관련자 시정조치
18	○ 국고금 단수계산 위배	○ 관련자 주의조치
19	○ 금연구역내 흡연장소 지정, 공동사용	○ 관련자 주의조치
20	○ 전의경 신상면담관리 소홀	○ 관련자 시정조치
21	○ 전의경 급대어품지급카드 관리 미흡	○ 관련자 특별교양
22	○ 전의경 자체사고 방지대책 업무소홀	○ 관련자 특별교양 및 주의조치
23	○ 부식보관 창고관리 소홀	○ 관련자 시정조치
24	○ 상시약품 관리 소홀	○ 관련자 시정조치

※ 자료 : 부산지방경찰청

11. 울산광역시

(1) 울산지역, 결식아동 82.2% 증가

(2008년 10월 17일)

- 최근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김소남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울산지역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거르는 결식아동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울산광역시 결식아동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결식아동은 2004년 3,850명에서 2005년 5,333명, 2006년 6,391명, 2007년 6,421명, 2008년 6월 현재 5,82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결식아동은 전년대비 8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2008년 6월 현재 시·군·구별 결식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울산 남구가 33.9%(1,981명)로 가장 많으며 울주군 23.6%(1,381명), 동구 21.9%(1,284명), 중구 12.2%(714명)순이다.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경기침체로 빈곤층이 증가하면서 결식아동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충분한 영양공급으로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노인,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4 ~ 2008년 6월 결식아동 현황>

연도별	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2004년	3,850명	351	1,839	340	555	765
2005년	5,333명	911	1,884	785	866	887
2006년	6,391명	911	1,883	1,060	1,035	1,502
2007년	6,421명	668	2,118	1,444	531	1,660
2008년 6월 현재	5,851명	714	1,981	1,284	491	1,381

(2) 울산시, 관광 해외 마케팅 사업 평가 꼴찌

(2008년 10월 17일)

- 최근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김소남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2008년 2월 발표한 관광 해외마케팅사업 심의 평가 결과에서 16개 시도 가운데 울산시가 57.1점으로 꼴찌를 기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 정부는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해외관광, 홍보, 마케팅 계획사업을 선정하여 관광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16개 시도 관광 해외마케팅사업 심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전북이 82.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남 79.4점, 부산 78.1점, 경북 76.9점 순인 반면 가장 낮게 평가된 지역은 울산 57.1점, 경기 65.2점, 대전 65.9점 순이다.
- 특히 울산시의 경우 실제 2007년 6월 동남아 인센티브 관계자 초청 팸투어로 2천500백만원 지원받았으나 <지자체 해외 홍보 마케팅 사업평가>에서는 계획, 집행, 성과 단계에서 모두 C+를 받았다.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최근 마케팅 활동의 효과성 제고를 통한 외국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홍보 활동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며 ”앞으로 울산 지역도 기존의 공업화된 도시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나 영남지역 등 주변의 도시와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타 지역과 차별되는 상품 개발 및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2008년 관광 해외마케팅사업 심의평가 결과>

구분	계획심사									실적 평가			총점
	사업계획					효과추정		가산점		재정 자립 도	추진 실적	가산 점 ③	
	(1)	(2)	(3)	(4)	(5)	(1)	(2)	①	②				
전북	4.0	17.5	8.5	3.9	3.7	8.0	11.7	3.0	2.0	4.7	12.3	3.0	82.3
전남	4.3	15.3	8.4	4.1	3.6	8.0	11.5	5.0	2.0	5.0	12.3	0.0	79.4
부산	4.4	15.6	8.7	4.0	3.4	8.5	12.5	3.0	0.0	1.8	13.1	3.0	78.1
경북	4.1	15.6	8.0	4.2	3.5	8.4	12.8	5.0	0.0	4.4	10.9	0.0	76.9
대구	4.3	17.1	8.2	3.9	3.8	7.5	11.5	3.0	2.0	1.9	12.0	0.0	75.1
강원	4.2	16.0	7.8	4.4	3.4	8.0	11.2	3.0	0.0	4.2	12.5	0.0	74.7
인천	4.0	16.0	7.6	4.0	3.4	7.8	10.9	3.0	2.0	1.0	11.5	3.0	74.2
광주	3.5	13.1	6.9	3.5	3.3	6.9	10.4	5.0	2.0	2.5	9.8	3.0	70.0
경남	3.6	13.5	7.1	3.6	3.5	7.6	10.4	3.0	2.0	3.6	11.5	0.0	69.3
충북	3.6	14.5	7.5	3.7	3.5	7.5	10.4	3.0	0.0	3.9	10.9	0.0	68.5
충남	3.6	13.1	6.5	3.7	3.6	7.6	10.4	3.0	0.0	3.7	10.6	0.0	66.0
대전	3.6	13.1	6.0	3.2	3.4	7.6	9.0	3.0	2.0	1.6	10.4	3.0	65.9
경기	3.7	14.9	7.3	3.2	3.2	7.6	9.8	3.0	0.0	1.3	11.2	0.0	65.2
울산	3.0	12.4	5.8	2.7	3.7	6.9	9.0	0.0	2.0	1.5	10.1	0.0	57.1

(3)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15위 (2008년 10월 17일)

- 최근 저출산·고령사회가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김소남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2008년 2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평가결과에서 울산시가 16개 시도 가운데 78점으로 15위를 기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총 140점 중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재정투자 및 홍보의 적절성 25점, 추진체계 확립 및 시행계획의 적절성 10점, 저출산·고령화 정책성과 및 성과 달성도 80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수행전반 환경평가에 25점이 반영되었다.
- 세부적인 평가 결과를 보면 부산광역시가 104.5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101.5점, 서울특별시 98.5점, 충북 94점 순으로 높았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 75점, 울산광역시 78점, 대전광역시 80점 순이다.
- 특히 울산광역시의 경우 ‘저출산 성과’가 40점 만점에 24점으로 13위, 고령화성과는 6위(25점), 정책환경은 16위(12점), 과정 15위(7점), 투입 12위(10점)를 기록하였다.
- 내용별로 보면 ‘초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 이용률’이 전국 평균치인 41.8%에 비해 울산지역은 31%를 나타냈으며 ‘노인사회활동 참가율’은 전국평균치 12.9%임에 비해 2.5%, ‘노인교통사망률’은 전국 평균치

0.38%임에 비해 0.26%, ‘생활체육참여율’은 전국평균치 39.8%임에 비해 27.1%, ‘노인생활시설 설치율’은 전국평균치 1.37%비해 0.96%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최근 저출산·고령화의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울산광역시도 저조한 평가를 받은 것은 지역 특수성을 살린 우수사업이 미흡하고 정책추진 의지와 사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면에서 정책마인드가 미흡하기 때문이다.“며 ”저출산·고령사회 문제가 전체 인구의 감소,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노인부양 등 사회복지비용 급증, 경제성장률 저하, 국가지속가능성 훼손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족 구성원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앞장 서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결과>

연번	지자체 명	총점 (140점)	투입 (25점)	과정 (10점)	저출산 성과 (40점)	고령화 성과 (40점)	정책 환경 (25점)
1	서울특별시	98.5	16	8	31	24.5	19
2	부산광역시	104.5	18	10	29	22.5	25
3	대구광역시	91.5	16	10	27	23.5	15
4	인천광역시	94	17.5	7	26	28.5	15
5	광주광역시	90	16	8	25	17	24
6	대전광역시	80	9	7	21	23	20
7	울산광역시	78	10	7	24	25	12
8	경기	94.5	17	7	25.5	30	15
9	강원	94.5	8	10	32	20.5	24
10	충북	96	11	8	26	28	23
11	충남	83	6	7	28.5	18.5	23
12	전북	95.5	12	8	27.5	26	22
13	전남	101.5	14	10	23.5	30	24
14	경북	89	11	10	28.5	19.5	20
15	경남	87	19	8	22	22	16
16	제주	75	5	5	24.5	22.5	18

<저출산고령사회 성과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각 5점)
투 입 (25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재정투자의 적절성	A1) 저출산 정책 재정 비율, 증감률
		A2) 고령사회 정책 재정 비율, 증감률
		A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재정 중 자체사업재정 비율, 증감률
		A4) 전체 교육청 특별회계 재정 대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재정 비율, 증감률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홍보의 적절성	A5) 홍보사업 재정 및 실시건수
과 정 (10점)	추진체계 확립	B1)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부서 설치
	시행계획 작성의 적절성	B2) 시행계획의 지역특성·의견수렴 여부, 자체사업 발굴 정도, 전체 계획의 구체성 및 달성도
	정책평가 및 환류	B3)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 시행계획 반영여부*
저출산 고령화 성 과 (80점)	저출산 정책 성과	C1) 합계출산율
	저출산 정책 사업기획 및 추진	C2) 저출산 관련 시행계획 달성수준
	저출산 정책 성과 달성도	C3) 육아지원시설 확충률
		C4)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아동 비율
		C5) 취약보육 실시율
		C6) 초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이용률
		C7) 아동·청소년보호·육성 프로그램 이용 증감률
		C8) 주출산여성의 취업률, 증감률
		C9) 가족친화기업인증신청 증감률★
	고령사회 정책 성과	C10) 중·고령인력의 취업률·증감률
		C11) 노인사회활동 참가율
	고령사회 정책 사업기획 및 추진	C12) 고령사회관련 시행계획의 달성수준
	고령사회 정책 성과달성도	C13) 연령표준화 사망률
		C14) 노인교통사고 사망률
		C15) 생활체육 참여율 ※통계 미생산시 동호인클럽참여율
		C16) 노인생활시설 설치율
		C17) 노인이용시설 이용률
정책 환경 (25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수행 전반 환경 평가	D1) 평가미반영 우수사업 관찰
		D2) 관계공무원의 정책 마인드
		D3) 현장평가협조

12. 울산지방경찰청

(1) 울산지역, 인구 10만명당 5대범죄 발생 최고, 5대 범죄 검거율 전국 최하위!

■ 울산남구 강력범죄 최다발생 지역, 2008년 3,329건 발생, 검거는 56% (2008년 10월 17일)

- 경찰청은 2007 주요정책부문 정부업무평가에서 대부분의 과제가 당초 설정한 목표를 충실히 달성했으나, ‘지역경찰의 범죄대응역량 강화’ 등 4개 과제에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지역경찰의 범죄대응역량 강화’ 과제에 따른 목표 달성도의 지표는 ‘인구 10만명당 5대범죄 발생건수’이다.
- 한편 김소남 의원(한나라당·행정안전위원회)의 10월 17일 울

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에 따르면, 울산지역의 인구 10만명당 5대범죄 발생건수는 2006년 1,074명에서 2007년 1,530명으로 456명이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최하위를 기록, 울산지역경찰의 범죄대응역량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 범죄대응역량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은 것은 다름 아닌 울산경찰의 낮은 5대범죄 검거율 때문이다.

- 울산지역 2007년 5대범죄 검거율은 49.5%로 전국 평균인 74%의 2/3수준에 그쳐 울산지역 민생치안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겠다.

금년은 8월말 기준 63%로 검거율이 소폭 상승했으나, 전국적인 검거율 75.4%와는 11%p이상 차이를 보인다.

- 시내 각 서별로는 중부서 72%(2,478건발생·1779검거), 울주서 71%(1,402건발생·990건 검거), 남부서 56%(3,329건발생·1,875건 검거), 동부서 54%(1,728 건발생·931건 검거) 순이었다.

- 한편 남부서의 경우, 중부서에 비해 관할인구가 1만8천명 가량 적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발생은 851건 많고 검거율은 16%p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김소남 의원 : 향후 울산시내 각 경찰서별로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112신고 즉응체제 확립으로 현장검거체제를 강화하는 등 범죄 예방과 단속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인구10만명당 5대범죄 발생율>

	'04년	'05년	'06년	'07년
전국	946.22	1010.60	1010.56	1074.98
서울	1197.49	1121.53	1032.33	1070.74
부산	882.68	843.65	906.44	944.00
대구	869.77	1012.65	1052.89	1032.77
인천	1082.77	1292.99	1274.34	1140.66
광주	1170.90	1447.68	1431.79	1522.70
대전	726.89	700.87	854.66	974.88
울산	897.29	1067.84	1073.69	1530.25
경기	860.45	1056.91	1042.62	1081.72
강원	902.36	922.29	958.30	1086.68
충북	776.77	808.86	951.83	1199.07
충남	599.14	665.74	796.92	1000.12
전북	690.44	823.59	851.96	852.38
전남	964.79	1063.48	1041.14	1096.67
경북	834.16	848.98	845.35	1025.46
경남	893.32	826.24	828.39	948.50
제주	1624.49	1678.34	1709.75	1436.82

<각 서별 5대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구분	계	검거율	관할인구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중부서	발생건수	2,478	71.8	360,399 명	4	28	37	1,073	1,336
	검거건수	1,779			4	21	28	552	1,174
남부서	발생건수	3,329	56.3	342,675 명	8	27	61	1,452	1,781
	검거건수	1,875			7	19	50	310	1,489
동부서	발생건수	1,728	53.9	213,660 명	4	12	23	995	694
	검거건수	932			3	5	16	279	629
울주서	발생건수	1,403	70.6	183,261 명	1	9	9	587	797
	검거건수	990			2	6	12	279	691

<지역별 5대범죄 검거율>

2007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07년 112신고 10분 이내 도착률
서울	107,380	94,226	87.75%	99.69%
부산	33,282	27,318	82.08%	99.74%
대구	25,517	20,864	81.77%	99.86%
인천	29,844	21,956	73.57%	99.84%
광주	22,025	12,997	59.01%	98.36%
대전	14,503	9,007	62.10%	99.54%
울산	16,532	8,189	49.53%	97.34%
경기	119,480	78,538	65.73%	99.47%
강원	15,987	13,443	84.09%	98.41%
충북	17,795	10,779	60.57%	99.46%
충남	19,372	11,290	58.28%	98.35%
전북	15,099	12,760	84.51%	99.38%
전남	19,819	14,782	74.58%	99.03%
경북	27,022	18,178	67.27%	98.62%
경남	29,649	25,386	85.62%	99.91%
제주	7,836	5,991	76.45%	99.67%
기타	942	556	59.02%	-

(2) 울산 경찰관, 16개 지방청 중 사격 실력 꼴찌!

■ **일선 경찰관 14%는 사격낙제자!**

■ **60점 미만 사격낙제자 229명, 30점 미만도 11명, 최저점 13점!**

(2008년 10월 17일)

- 10월 17일 울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소남 의원(한나라당·행정안전위원회)의 질의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치안 현장에 주로 투입되는 경위급 이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격훈련에서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사격실력이 전국 1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례 사격점수가 60점 미만이면 낙제자로 분류되어 교육기관 사격훈련 과정에 우선 입교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 울산청 사격낙제자는 전체 사격 대상 경찰관의 약 14%에 해당하는 229명이었다.
- 지난해 상·하반기에 실시된 정례 사격에서도 낙제자는 각각 248명(15.5%)과 251명(14.8%)에 이른다.

<2008년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정례사격점수>

점수	90이상	89~80	79~70	69~60	59점 이하 (낙제)	계
경찰관수(명)	277	448	425	291	229	1,670
비율 (%)	16.6	26.8	25.4	17.4	13.7	100.0

※ 자료 : 경찰청

- 개인별 점수는 13점부터 98점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합계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찰관들도 11명인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들은 대부분 과녁도 제대로 맞히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또한 경찰 계급별로는 경장 78점, 순경 76점, 경위·경사 74
점 순으로 계급별로도 실력차이를 보이는데, 이런 계급간 차
이는 전국적으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 한편 2003년 이후 올 8월까지 경찰은 범인 검거를 위해
314회에 걸쳐 총기를 발사했으며, 이 중 범인·피의자를 놓친
경우는 38번(12.1%)에 이른다.
- 검거 대상자가 총을 맞고 사망(3건)하거나 중상을 입은 사례
(4건)도 있어, 경찰관 사격실력 향상을 위한 경찰의 자발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 김소남 의원 : 사격시험 60점 미만 일선 경찰관들이 시내
전체 경찰관의 14%에 해당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하겠다.
일선에서 민생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사격실력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08년 상반기 정례사격 실시 결과>

지방청	사격대상경찰관	평균점수
서울지방경찰청	20,030	82
부산지방경찰청	5,139	78
대구지방경찰청	3,856	77
인천지방경찰청	4,152	78
광주지방경찰청	2,158	80
대전지방경찰청	2,105	78
울산지방경찰청	1,670	75
경기지방경찰청	9,549	77
강원지방경찰청	2,979	79
충북지방경찰청	1,449	80
충남지방경찰청	3,329	78
전북지방경찰청	3,227	81
전남지방경찰청	4,093	80
경북지방경찰청	4,185	78
경남지방경찰청	4,388	81
제주지방경찰청	1,292	79

※ 자료 : 경찰청

<경찰관의 총기사용 내역>

연도	총기 사용건수	검거인원		부상정도			
		검거	미검	피해없음	경상	중상	사망
2003	95	84	11	90	5	0	0
2004	66	59	7	57	6	2	1
2005	47	40	7	43	2	1	1
2006	50	39	11	46	4	0	0
2007	35	35	0	33	2	0	1
2008.7 .	21	19	2	19	1	1	0
계	314	276 (87.9%)	38 (12.1%)	288	20	4	3

※ 자료 : 경찰청

※ 정례사격 방법

- 38구경 권총으로 15m 거리의 표적을 향해 쏘는 방식.
- 성적은,
 - ▶ 5분간 10발을 쏘 지름 50cm 과녁을 맞추는 '완사'(1발 1~10점, 최고 100점)
 - ▶ 1분간 20발을 쏘 허벅다리 모양의 표적을 맞추는 '속사'(1발 2~5점에 가중치 2를 곱함, 최고 200점) 점수를 합산한 뒤 3으로 나눈 값.

13. 대구광역시

(1) 가장 더러운 공기를 마시는

지역 : 대구서구(2), 대구수성구, 인천동구, 서울관악구

가장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지역: 전북정읍, 강원강릉, 제주서귀포, 대전중구, 서울양천구

(2008년 10월 20일)

- 국정감사 대구광역시에 대한 김소남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의 질의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평균농도순위 결과 대구광역시의 대기오염물질의 평균 농도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7년 12월 환경부에서 제출한 <지역별 환경보건수준 평가체계 구축방안>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지난 5년간 시·군·구 대기오염 물질 아황산가스(SO₂), 이산화질소(NO₂),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 오존(O₃)의 평균농도를 조사하였다.

- 우선 <아황산가스(SO₂) 평균농도가 가장 높은 상위 10% 지역>을 살펴보면, '인천 동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울산 울주군, 인천 남구, 전남 여수시, 부산 중구, 인천 중구 순이다.

<2002년~2006년 아황산가스(SO₂) 상위 10% 지역 현황>

순 위	아황산가스(SO ₂) 상위 10%
1	인천동구
2	울산 울주군
3	인천 남구
4	전남 여수시
5	부산 중구
6	인천 중구
7	울산 중구
8	부산 사하구
9	울산 남구
10	경기 시흥시
11	부산 영도구
12	대구 달서구

- 또한 <이산화질소(NO₂)의 평균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관악구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 영등포구, 서울 강남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서초구순이다.

<2002년~2006년 이산화질소(NO₂) 상위 10% 지역현황>

순 위	이산화질소(NO ₂) 상위10%
1	서울 관악구
2	서울 영등포구
3	서울 강남구
3	서울 동대문구
5	서울 서대문구
6	서울 서초구
7	서울 중랑구
8	서울 마포구
9	서울 용산구
10	경기 광명시
11	서울 중구
12	인천 계양구

- <일산화탄소(CO)의 평균농도가 가장 높은 상위 10% 지역>을 살펴보면, 대구 서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기 의왕시, 서울 동대문구, 대전 서구 순이다.

<2002년~2006년 일산화탄소(CO) 상위 10% 지역현황>

순 위	일산화탄소 상위10%
1	대구 서구
2	경북 김천시
3	경북 안동시
3	경기 의왕시
5	서울 동대문구
6	대전 서구
7	대구 중구
8	대구 달서구
9	경기 구리시
10	경기 시흥시
11	경기 과천시
12	경북 구미시

- <미세먼지(PM10) 평균농도가 가장 높은 상위 10% 지역>을 살펴보면 대전 중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 강남구, 경기 김포시, 서울 중구, 경기 이천시, 경기 포천시 순이었다.

<2002년~2006년 미세먼지(PM10) 상위 10% 지역현황>

순 위	미세먼지(PM10) 상위10%
1	대구 서구
2	서울 강남구
3	경기 김포시
3	서울 중구
5	경기 이천시
6	경기 포천시
7	부산 사하구
8	경기 시흥시
9	서울 동대문구
10	서울 영등포구
11	서울 광진구
12	대구 중구

- <오존(O₃)의 평균농도가 가장 높은 상위 10% 지역>을 살펴보면, 대구 수성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충남 당진군, 전남 목포시, 제주 서귀포시, 인천 중구, 전남 영암군 순이다.

<2002년~2006년 오존(O₃) 상위 10% 현황>

순 위	오존(O ₃) 상위10%
1	대구 수성구
2	충남 당진군
3	전남 목포시
3	제주 서귀포시
5	인천 중구
6	전남 영암군
7	인천 연수군
8	제주 제주시
9	경남 진해시
10	부산 영도구
11	부산 수영구
12	경남 광양시

- 한편 <아황산가스(SO₂) 평균농도가 가장 낮은 하위 10% 지역>을 살펴보면, 전북 정읍시가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전북 남원시, 경남 양산시, 부산 금정구 순이었다.

<2002년~2006년 아황산가스(SO₂) 하위 10% 지역현황>

순 위	아황산가스(SO ₂) 하위 10%
1	전북 정읍시
2	전북 남원시
3	경남 양산시
4	부산 금정구
5	제주 제주시
6	강원 동해시
7	서울 성북구
8	경기 이천시
9	전북 익산시
10	제주 서귀포시
11	인천 강화군
12	경기 화성시

- <이산화질소(NO₂)의 평균농도가 가장 낮은 하위 10% 지역>을 살펴보면, 강원 강릉시가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전북 정읍시, 부산 기장군, 전남 목포시, 전북 군산시 순이었다.

<2002년~2006년 이산화질소(NO₂) 하위 10% 지역현황>

순 위	이산화질소(NO ₂) 하위10%
1	강원 강릉시
2	전북 정읍시
3	부산 기장군
3	전남 목포시
5	전북 군산시
6	충북 충주시
7	강원 춘천시
8	전남 영암군
9	충남 당진군
10	전북 남원시
11	인천 중구
12	제주 서귀포시

- <일산화탄소(CO)의 평균농도가 가장 낮은 하위 10% 지역>을 살펴보면, 제주 서귀포시가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경남 진해시, 경기 화성시, 부산 중구, 서울 도봉구 순이었다.

<2002년~2006년 일산화탄소(CO) 하위 10% 지역현황>

순 위	일산화탄소 하위10%
1	제주 서귀포시
2	경남 진해시
3	경기 화성시
3	부산 중구
5	서울 도봉구
6	울산 동구
7	부산 동래구
8	전북 정읍시
9	충남 당진군
10	충북 단양군
11	울산 북구
12	부산 수영구

- <미세먼지(PM10) 평균농도가 가장 낮은 하위 10% 지역>을 살펴보면 대전 중구가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제주 제주시, 광주 서구, 전북 남원시, 대구 달성군 순이었다.

<2002년~2006년 미세먼지(PM10) 하위 10% 지역현황>

순 위	미세먼지(PM10) 하위10%
1	대전 중구
2	제주 제주시
3	광주 서구
3	전북 남원시
5	대구 달성군
6	전남 광양시
7	인천 강화군
8	경남 양산시
9	울산 동구
10	전남 순천시
11	제주 서귀포시
12	광주 동구

- <오존(O₃)의 평균농도가 가장 낮은 하위 10%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양천구가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 양천구, 서울 동작구, 서울 강북구 순이다.

<2002년~2006년 오존(O₃) 하위 10% 현황>

순 위	오존(O ₃) 하위10%
1	서울 양천구
2	서울 동작구
3	서울 강북구
3	서울 영등포구
5	서울 송파구
6	서울 용산구
7	서울 서초구
8	서울 동대문구
9	서울 구로구
10	서울 성북구
11	서울 서대문구
12	서울 성동구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최근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WHO에서는 아시아 도시지역에서 대기오염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매년 150만명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은 지역여건, 인구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기 오염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환경보건 수준 파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차별화된 능동적·적극적인 환경보건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 대구광역시 여성정책

‘빵집’

(2008년 10월 20일)

- 최근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 대구광역시에 대한 김소남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의 질의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부에서 제출한 <지방자치단체별 경제활동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상반기 대구광역시의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은 47.5%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으며 연도별로 보면 2004년 50.2%에서 2006년 49.8%, 2007년 48.9%, 2008년 6월 현재 47.5%로 매년 감소하였다.
-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2007년 16개 시도 <국정시책 합동평가>를 보면 대구광역시는 여성복지정책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영향평가 ‘미흡’, 가정성폭력근절 및 피해보호 ‘미흡’, 성매매방지정책 추진실적 평가, 취약계층여성의 자립지원, 보육서비스 확대, 여성인력활성화 정책은 ‘보통’으로 여성복지 정책 중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정책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국정시책 합동 평가 중 ‘여성복지정책’ 평가>

분 야 명	시 책 명	평가결과
4.여성복지 (다등급)	4-1. 성별영향평가 추진	미흡
	4-2.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보통
	4-3. 취약계층여성의 자립지원	보통
	4-4. 가정성폭력근절 및 피해자보호	미흡
	4-5. 보육서비스 확대	보통
	성매매방지정책 추진실적 평가	보통

- 대구광역시의 여성복지정책 평가는 2006년도에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합동평가 부진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서 여성인력 개발 활성화 등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받은 평가라 그동안 대구광역시의 여성정책이 실효성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대구광역시의 여성정책이 저조한 평가를 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시장의 선거공약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과는 달리 여성인력 활성화를 위한 공약이 부재하기 때문이다.”며 “시장은 여성 경제활동의 참여가 사회의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극복과 대구광역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한 좋은 대안임을 깨닫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여성복지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3년~2008년 6월 지방자치단체별 여성 경제활동 현황>

(단위 : %)

지 역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 6월
전국	계	61.5	62.1	62	61.9	61.8	62.5
	남자	74.7	75	74.6	74.1	74	74.3
	여자	49	49.9	50.1	50.3	50.2	51.2
서울	계	62.1	63	63.3	63	62.9	62.5
	남자	74.8	75.1	75.3	74.7	74.7	74.1
	여자	50	51.6	52	51.9	51.7	51.5

지역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 6월
부산	계	57.5	58	58.3	58.3	58.2	58.3
	남자	70.7	71	70.6	70.6	69.7	69.8
	여자	45.4	46.1	46.9	47.1	47.5	47.6
대구	계	60.4	61.3	61	60.1	59.3	58.9
	남자	72.5	73.2	71.9	70.9	70.4	71
	여자	49.1	50.2	50.8	49.8	48.9	47.5
인천	계	61.8	61.9	61.5	61.8	62	61.6
	남자	76.8	76	76.2	76.1	75.6	74.6
	여자	47.3	48.3	47.1	47.9	48.8	49
광주	계	57.5	57.9	58.6	57.9	58.8	59.3
	남자	69.8	69.3	69.4	68.4	69.6	70.6
	여자	46.3	47.5	48.5	48.2	48.7	48.8
대전	계	59.7	59.7	58.6	58.9	59.4	60.3
	남자	72.9	73.1	71.1	71.2	71.6	73.4
	여자	47.1	47	46.6	47.1	47.6	47.6
울산	계	60.8	61.5	60.7	59.3	60.5	62.4
	남자	79.5	78.8	77.8	76.5	77.1	76.8
	여자	42	44.2	43.5	41.9	43.6	47.9
경기	계	61.8	62.7	62.6	62.6	62.1	63.2
	남자	77.2	77.3	76.9	76.2	75.4	75.9
	여자	46.8	48.5	48.7	49.3	49.2	50.8
강원	계	58.3	59.1	58.5	59	58.7	61.6
	남자	70.2	70.3	70	69.9	70.2	71.8
	여자	47.4	48.7	47.8	48.7	47.9	52
충북	계	59.4	59.9	59.4	59.3	59.9	62.6
	남자	72.6	72.6	71.1	70.1	71.4	73.3
	여자	47	48	48.4	49	48.9	52.3
충남	계	63.7	64.6	64.4	65.3	66	66.6
	남자	76.7	77.9	76.9	77.1	77.6	77.3
	여자	51.5	52.1	52.6	54.2	55	56.1
전북	계	59	58.5	58.8	59.5	60.3	62.1
	남자	71.1	71.1	70.5	70.1	71.2	72.3
	여자	47.9	47.1	48.1	49.8	50.3	52.6
전남	계	65.3	64.8	65.1	64.4	64.7	65.3
	남자	75.8	75.7	76.2	75.6	75.4	74.8
	여자	55.7	54.9	55	54.2	54.9	56.4
경북	계	65.1	65.5	65.2	65	64.2	65.5
	남자	75.7	76.1	76.3	76.4	76	77.3
	여자	55.2	55.8	55	54.3	53.2	54.3
경남	계	62.5	62.9	62.1	61.8	62	63.4

지 역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 6월
	남자	74.7	76	74.4	73.7	74.6	74.7
	여자	51.3	50.7	50.8	50.6	50.1	52.6
제주	계	70.5	69.7	70	70	69.2	69.5
	남자	79.3	77.5	76.9	77	75.5	77.9
	여자	62.5	62.4	63.6	63.5	63.3	61.6

14. 대구지방경찰청

(1) 10월 21일 경찰의날, 표창 받는 경찰관 10,515명!

- 대구지방경찰청장 및 대구시 경찰서장 들 표창 남발 1위, 금년은 7월말에 연간 표창상한선 초과
- 김소남 의원, “표창남발은 포상 권위 떨어뜨리고 영예성 저하시켜”
(2008년 10월 20일)

- 내일(10월 21일)은 제 63회 경찰의 날로, 금년 경찰의날 표창 대상 경찰관은 전국적으로 10,515명이다.
- 한편, 김소남 의원(한나라당·행정안전위원회)의 10월 20일 대구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에 따르면, 경찰청장을 포함한 전국 각급 경찰관서장이 포상 상한선을 초과하여 무더기로 표창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청은 ‘경찰표창규칙’과 ‘경찰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표창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 총량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침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은 매년 정원의 15%이내, 경찰서는 35% 이내에서 포상인원을 책정하여 포상하도록 하고 있다.
- 한편 ‘2007년도 전국 기관장 포상수여현황’ 분석결과, 16개 지방경찰청장의 전년대비 총량제 준수율은 06년 138.57%에서 07년 126.95%로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총량제 준수율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대구(205.63%), 충북(295.65%), 경북(174.89%), 울산지방청(163.70%)은 2년 연속 총량제 초과상위를 기록했다.
- 경찰서장 표창도 전년대비 총량제 준수율이 138.95%에서 126.56%로 향상되었으나, 대구지방청 관할 경찰서는 126.23%에서 160.20%로 전년대비 준수율이 악화되었다.
부산(146.18%)과 경남(146.03%), 경기(142.07%) 지방청도 전년에 이어 07년에도 초과 상위.
- 총량제 초과 경찰서 1위는 여주경찰서(230.4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순 수치상 정원의 80%가 표창을 받았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동대와 전경대의 경우 지휘관의 표창 총량제 준수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여 상반기에 이미 연간 총량을 모두 수여하고도 하반기에 추가 수여한 경우가 많았으며, 학교 및 부속기관은 재임유공 표창 수여 등으로 총량제 초과율이 높았다.
- 08년 상반기 전국 기관장 표창 수여현황 분석결과는 대체적

으로 양호하나, 대구청 (100.7%)은 '08년도의 7월말 기준으로도 연간 표창 상한선을 이미 초과했다.

- 경찰서 단위에서는 영광서 (118.18%), 창녕서(116.5%), 진해서(115.5%), 고령서103.2%), 경남청(102.6%), 달서서 (101.2%) 순으로 초과율이 높았다.
- 한편 지난 3년간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경찰관은 서울 용산 경찰서 소속 정 모 경위로 3년간 총 33건의 표창을 수여, 평균적으로 매월 1건 표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김소남 의원 : 경찰청이 표창의 남발을 방지하고 포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경찰 포상업무 지침을 제정했으나 표창이 남발될 경우, 포상의 영예성이 저하되고 포상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다고 하겠다.

향후 관례적인 연공서열이나 나눠먹기식 포상과 관리유공이나 업무유공 등 일회성 포상을 지양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충실한 경찰관을 적극 발굴·포상하는 실질적 포상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

또한 소속기관장은 연간 총량을 100% 초과 수여한 기관장에 대하여 향후 표창 수여 자제 및 총량제 준수 등 엄중 경고조치할 것.

<제 63회 경찰의날 표창 수여 대상 경찰관 현황>

(단위 :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대전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찰청장	계
지방청장	902	169	142	108	32	385	52	59	82	68	104	118	174	342	164	16	2,288	
경찰서장	1,125	401	243	221	103	772	91	138	209	142	280	337	395	368	429	56		

※ 자료 : 16개 지방경찰청 및 경찰청 자료 취합

□ 지방청 현황(총량 : 정원의 15%)

(단위 :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정원	24,325	7,760	4,730	4,590	1,875	13,645	3,761	2,915	3,760	4,533	5,036	5,815	5,604	1,396
연간총량	3,649	1,164	710	689	281	2,047	564	437	564	680	755	872	841	209
발행수	3,573	1,763	1,460	918	460	2,289	556	855	582	811	1,194	1,525	1,204	300
비율 (%)	97.92	151.46	205.63	133.24	163.70	111.82	98.58	195.65	103.19	119.26	158.15	174.89	143.16	143.00

※ '07. 7. 1. 개칭된 광주 · 대전지방청은 제외

□ 경찰서 현황(총량 : 정원의 35%)

(단위 :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정원	19,827	6,952	4,257	3,905	2,276	1,948	1,611	12,676	3,350	2,587	3,318	4,024	4,606	5,243	5,048	1,235
연간총량	6,939	2,433	1,490	1,248	797	682	564	4,371	1,173	905	1,161	1,408	1,612	1,835	1,767	337
발행수	7,896	3,581	2,387	1,773	705	793	618	6,384	1,285	1,184	1,314	1,637	1,965	2,252	2,598	337
비율 (%)	113.79	147.18	160.20	142.07	88.46	116.28	109.57	146.05	109.55	130.83	113.18	116.26	121.90	122.72	147.03	99.11

□ 총량제 초과 상위 경찰서

(단위 : 명)

구분	여주	안성	구리	부천 중부	서대문	수원 남부	구례	영동	성서	북부	달서	수원 중부	부산 남부	대구 서부	영덕	완도
정원	198	246	287	563	639	449	126	162	461	415	400	455	692	455	134	170
연간 총량	69	87	100	197	224	157	44	57	161	145	140	159	242	159	47	60
발행 수	159	181	199	385	430	298	82	106	298	268	258	287	436	285	84	106
비율 (%)	230.43	208.05	199.00	195.43	191.96	189.81	186.36	185.96	185.09	184.83	184.29	180.50	180.17	179.25	178.72	176.67

□ 총량제 초과 기동대 · 전경대

(단위 : 명)

구분	인천 201 전경대	충북 707 전경대	경기 120 전경대	경기 807 전경대	전남 716 전경대	인천 공항 경찰대	제주 125 전경대	경기 609 전경대	전남 501 전경대	전남 810 전경대	제주 122 전경대	제주 128 전경대	충북5 03전경 대	경남 509 전경대
정원	13	16	14	14	15	111	18	14	15	15	16	16	16	14
연간 총량	5	6	5	5	5	39	6	5	5	5	6	6	6	5
발행수	13	15	12	12	11	80	12	10	10	10	11	10	11	8
비율 (%)	260	250	240	240	220	205.13	202	200	200	200	196	190	183.33	160

□ 부속기관 현황(총량 : 정원의 15%)

(단위 : 명)

구분	중앙경찰학교	면허관리단	종합학교	경찰대학	수사연수원
정 원	154	358	146	240	30
연간 총량	23	54	22	36	5
발행수	79	157	50	78	9
비율(%)	343.48	290.74	227.27	216.67	180.00

<2008년 7월말 기준, 발급율 초과 경찰관서 현황>

(단위 : 명,%)

발급율을 초과한 상위 5개 경찰관서장	경찰 정원	발급 상한선	실제 발급수	기준대비 발급율
안성경찰서장	241	84	209	247.8
과천경찰서장	313	110	260	237.3
수원중부경찰서장	525	184	389	211.7
군포경찰서장	349	122	252	206.3
대구청장	4,730	710	1,460	205.8

※ 자료 : 경찰청

(2) 대구시내 유사 사행성게임기 운영 청소년게임장 19곳!

■ 전체 게임기 약 600대, 40%는 달서구에!

■ 김소남 의원,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
발생 우려!

(2008년 10월 20일)

- 김소남 의원(한나라당·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지난 5년간 대구경찰은 5,608개의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하였으며, 구속된 고용주 및 종업원은 총 384명에 달한다.
- 이는 하루에 약 3.3개의 게임장이 적발되어 영업 중지처분 등을 받았다는 뜻으로, 불법 사행성게임 근절을 위한 경찰의 노력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김 의원은 평가했다.
- 한편 2008년 1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일반 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게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정보 표시장치’를 부착해야 하는데, 해당 장치가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연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동 장치가 상용화되기 전까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 운영은 사실상 불가하다.

- 그러나 최근 대구지역 내 일부 악덕 게임장 업주들이 전체이용 등급게임장의 허점을 악용해, 청소년이용 등급 게임기 가운데 문구, 악세사리, 골프공 등이 나오는 경품게임기를 게임위의 심의내용과 다르게 기존의 사행성 게임기처럼 개·변조, 사실상 유사 사행성 게임기나 다름 없이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받은 경품을 업주와 유착된 전당포나 환전소를 통해 현금으로 불법 환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래에는 단속을 피해 킥서비스를 이용한 이동식 환전소를 운영, 불법 환전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경품을 현금으로 바꾸는 등 수법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 이런 편법 운영으로 금년 대구지역 경찰에 의해 단속된 업소는 전부 54개소.
지역별로는 서구가 12개소로 가장 많으며, 중구·동구·북구가 각각 7개소임.
- 또한 이런 불법 환전이나 개·변조 행위가 경찰에 직접적으로 단속되지는 않았으나, 경품게임기를 설치하여 사실상 유사 사행성 게임장처럼 운영하고 있는 업소는 19개소에 달한다.
- 또한 해당 게임으로는 ‘또로로’, ‘에어2008’, ‘피싱파이터’, ‘팡팡베틀’, ‘시티워’, ‘팡팡주니어’, ‘해충대박멸’, ‘플라워’, ‘태평양전쟁’, ‘어드벤처’, ‘늑대와춤을’ 등 총 11종이 있으며, 이들 프로그램이 설치된 게임기는 총 590개에 달한다.
- 이 중 가장 많은 게임기는 ‘또로로’(120)로, 전체의 20%에 달

한다.

- 한편, 유사 사행성게임기 설치 업소가 가장 많은 지역은 달서구로, 총 6개소에 전체 게임기의 40%에 달하는 200대가 현재 구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 김소남 의원 : 유사 사행성 게임기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며, 이를 방지할 경우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 발생이 우려된다.

법의 맹점을 이용한 유사 사행성게임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체이용등급 게임에 있어 경품 가격의 상한선(5000원미만)만 정할 게 아니라, 경품 제공이 가능한 게임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지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인다.

또한 향후 대구경찰청이 게임물 등급 위원회, 환경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하고, 유사 사행성게임기가 많이 설치된 지역들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펼쳐는 등, ‘사행성 게임 제로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참고> 각종 경품게임기(좌) 및 ‘또로로’ 게임화면(우)

<대구지역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현황>

(단위:업소)

구분	위반 유형별						
	계	도박사행	개·변조	무등록 미신고	등급미필	경품취급 기준위반	기타
2004	542	56	95	229	21	53	88
2005	520	51	98	58	63	160	90
2006	2,539	1,189	384	8	37	179	742
2007	768	486	60	62	30	36	94
2008. 1-8월	1,239	810	30	192	92	7	108

<대구지역 불법 사행성게임장 조치결과>

(단위 : 명)

구분	조치별(명)			행정처분의뢰
	구속	불구속	즉심	
2004	5	537		542
2005	15	452		520
2006	238	3,591	683	1,687
2007	39	688	33	265
2008. 1-8월	32	1,590	4	253

※ 단속대상 : 업주 및 종업원

<전체이용가 게임장중 사행성 우려(경품제공)게임 영업현황 및 프로그램현황, 게임위 심의와 다르게 운영하여 경찰에 단속된 업소 현황>

- 2008년 9월말 기준

'08년 9월 현재 운영중인 업소 (사행성 게임으로 변질우려 있으나, 경찰에 불법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업소)				'08년 1월~9월 중 개·변조,환전 등으로 적발된 업소(현재 폐업)
지역	개소	프로그램명	게임기 대수	1-9월(개정법시행이후) 단속현황
중부	0	-		7
동부	5	또로로	80	7
		에어2008	40	
서부	3	피싱파이터	40	12
		팡팡배틀	40	
남부	0	-		5
북부	1	시티워	40	7
수성	0	-		2
달서	6	팡팡주니어	40	5
		팡팡배틀	40	
		해충대박멸	40	
		또로로	40	
		플라워	40	
성서	1	태평양전쟁	40	6
달성	3	어드벤처	70	3
		늑대와춤	40	
계	19	11종	590대	54 개소

※ 자료 : 대구지방경찰청, 김소남의원실 재구성

※ '시티워'와 '늑대와춤'은 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참고로 게임위에서 취소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업체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 최종 판결 때까지는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15. 강원도

(1) 텅빈 지방공항 예산낭비 심각

(2008년 10월 21일)

- 최근 지방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의 발이 끊기면서 지방공항의 적자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 강원도에 대한 김소남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의 질의에 따르면 양양공항의 공항수송 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8년 상반기 우리나라 15개 공항수송능력 대비 수송실적을 살펴보면 평균 운항회수는 13%, 여객 수송율은 32%, 화물수송율은 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항별 운항회수실적을 보면 ‘인천공항’은 240천회 중 106천회로 44%의 수송실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제주공항 34%, 김포공항 23% 순이다.
- 그러나 평균 운항회수실적이 10% 미만인 공항은 대구공항(4%), 광주공항(4%), 청주공항(1%), 사천공항(1%), 포항공항(1%), 군산공항(0.3%), 무안공항(0.2%), 여수공항(5%), 울산공항(8%), 원주공항

(0.3%), 양양공항(0.2%) 등 총 11곳으로 나타났다.

- 또한 여객수송률을 보면, 인천공항은 총 3,000만명 중 1,548만명을 수송하여 52%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반면 10%미만으로 여객을 수송하는 공항은 포항공항(3.6%), 양양공항(0.3%)등 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화물수송율을 보면, 인천공항은 총 270만톤 중 151만톤을 수송하여 56%로 가장 많았으며 10%미만으로 화물을 수송하는 공항은 김포공항 (6%) 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상반기 수송능력 및 수송실적 현황>

구분	운항회수(천회)			여객(만명)			화물(만톤)		
	실적(A)	능력(B)	A/B(%)	실적(A)	능력(B)	A/B(%)	실적(A)	능력(B)	A/B(%)
인천	106	240	44	1,548	3,000	52	151	270	56
김포	53	226	23	716	3,441	21	8	144	6
*김해	29	200	15	381	1,435	27	5	26	19
제주	48	143	34	626	924	68	8	33	24
*대구	5	140	4	57	371	15	0.8	1.7	47
*광주	5	140	4	72	294	24	0.8	5.5	15
*청주	1	140	1	55	315	17	0.6	3.8	16
*사천	1	165	1	10	101	10	0.01	-	-
*포항	1	100	1	14	385	3.6	0.04	-	-
*군산	0.4	140	0.3	6	44	14	0.1	-	-
무안	1	60	0.2	8	30	27	0.1	-	-
여수	3	60	5	34	272	13	0.1	-	-
울산	5	60	8	60	241	25	0.2	-	-
*원주	0.3	115	0.3	4	25	16	0.03	-	-
양양	0.1	43	0.2	0.8	317	0.3	0.01	-	-
합계	258.8	1,972	13	3,591.8	11,195	32	174.79	484	36

- 특히 양양공항은 설악 및 금강산 등 영동권 관광자원을 활용한 외국관광객 유치 및 지역 균형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비 3,567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에 개항하였으며 강원도 관광의 항공관문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공항이다.

- 그러나 양양공항의 수송능력을 보면, 운항회수 실적은 2002년 7%에서 2003년 6%, 2006년 2%에서 2008년 6월 0.2%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여객수송 능력은 2002년 7%에서 2004년 3%, 2006년 2%, 2007년 1%, 2008년 상반기 0.3%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양양공항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결과를 보면 양양공항은 총 42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 전국에서 누적적자가 가장 심한 공항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양양공항은 장기적으로 설악 및 금강산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통기반시설이다.” 며 “앞으로 저비용 항공사 유치를 통한 노선을 신설하는 등 양양공항의 수송능력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07년 상반기 공항수송능력 및 수송실적>

구분	운항회수(천회)			여객(만명)			화물(만톤)		
	실적(A)	능력(B)	A/B(%)	실적(A)	능력(B)	A/B(%)	실적(A)	능력(B)	A/B(%)
인천	211	240	88	3,122	3,000	104	303	270	112
김포	100	226	44	1,381	3,441	40	25	144	17
*김해	58	200	29	740	1,435	52	13	26	50
제주	93	143	65	1,230	924	133	29	33	88
*대구	11	140	8	118	371	32	2	1.7	117
*광주	13	140	9	154	294	52	2.3	5.5	42
*청주	9	140	6	103	315	33	1.4	3.8	37
*사천	2	165	1	21	101	21	0.1	-	-
*포항	3	100	3	30	385	8	0.1	-	-
*군산	1	140	1	13	44	30	0.2	-	-
*목포	0.4	60	1	1.4	30	5	0.01	-	-
여수	6	60	10	66	272	24	0.3	-	-
울산	9	60	15	121	241	50	0.5	-	-
*원주	0.7	115	0.1	8	25	32	0.05	-	-
양양	0.9	43	2	4	317	1	0.02	-	-
합계	518	1,972	26	7,112.4	11,195	64	376.98	484	78

<2006년 공항수송능력 및 수송실적>

구분	운항회수(천회)			여객(만명)			화물(만톤)		
	실적(A)	능력(B)	A/B(%)	실적(A)	능력(B)	A/B(%)	실적(A)	능력(B)	A/B(%)
인천	182	240	76	2,819	3,000	94	234	270	87
김포	95	226	42	1,377	3,441	40	27	144	19
*김해	53	200	27	707	1,435	49	14	26	54
제주	79	143	55	1,211	924	131	32	33	98
*대구	11	140	8	119	371	32	2	1.7	118
*광주	14	140	10	163	294	55	2.4	5.5	44
*청주	9	140	6	100	315	32	1.4	3.8	37
*사천	2	165	1	22	101	22	0.2	-	-
*포항	4	100	4	35	385	9	0.1	-	-
*군산	1	140	1	16	44	36	0.2	-	-
*목포	0.48	60	1	2	30	7	0.01	-	-
여수	6	60	10	60	272	22	0.2	1.6	13
울산	10	60	17	120	241	50	0.4	-	-
*원주	0.7	115	1	8	25	32	0.05	-	-
양양	1	43	2	5	317	2	0.02	-	-
평균	468	1,972	24	6,764	11,195	60	314	485	65

<2005년 공항수송능력 및 수송실적>

구분	운항회수(천회)			여객(만명)			화물(만톤)		
	실적(A)	능력(B)	A/B(%)	실적(A)	능력(B)	A/B(%)	실적(A)	능력(B)	A/B(%)
인천	161	240	67	2,605	3,000	87	215	270	80
김포	95	226	42	1,345	3,441	39	27	144	19
*김해	51	200	26	705	1,435	49	15	26	58
제주	74	143	52	1,135	924	123	32	33	98
*대구	12	140	9	124	371	33	2	1.7	118
*광주	14	140	10	164	294	56	2	5.5	36
*청주	7	140	5	86	315	27	1.4	3.8	37
*사천	3	165	2	32	101	32	0.2	-	-
*포항	5	100	5	45	385	12	0.2	-	-
*군산	1	140	1	16	44	36	0.2	-	-
*목포	0.5	60	1	2	30	7	0.007	-	-
여수	7	60	12	62	272	23	0.2	1.6	13
울산	11	60	18	122	241	51	0.4	-	-
*원주	0.7	115	1	8	25	32	0.05	-	-
양양	0.7	43	2	6	317	2	0.02	-	-
평균	443	1,972	22	6,457	11,195	58	296	485	61

<2004년 공항수송능력 및 수송실적>

구분	운항회수(천회)			여객(만명)			화물(만톤)		
	실적(A)	능력(B)	A/B(%)	실적(A)	능력(B)	A/B(%)	실적(A)	능력(B)	A/B(%)
인천	150	240	63	2,408	3,000	80	213	270	79
김포	106	226	47	1,484	3,441	43	30	144	21
*김해	52	200	26	767	1,435	53	18	26	69
제주	76	143	53	1,110	924	120	33	33	100
*대구	15	140	11	157	371	42	2	1.7	118
*광주	15	140	11	188	294	64	3	5.5	55
*청주	7	140	5	82	315	26	2	3.8	53
*사천	5	165	3	45	101	45	0.2	-	-
*포항	7	100	7	66	385	17	0.2	-	-
*군산	1	140	1	13	44	30	0.2	-	-
*목포	0.7	60	1	4	30	13	0.0	-	-
여수	6.4	60	11	50	27	185	0.2	-	-
울산	13	60	22	138	241	57	1	-	-
*원주	1	115	1	10	25	40	0.1	-	-
양양	2	43	5	11	317	3	0.04	-	-
합계	457.1	1,972	23	6,533	10,950	60	302.96	484	63

<2003년 공항수송능력 및 수송실적>

구분	운항회수(천회)			여객(만명)			화물(만톤)		
	실적(A)	능력(B)	A/B(%)	실적(A)	능력(B)	A/B(%)	실적(A)	능력(B)	A/B(%)
인천	130	240	54	1,979	3,000	66	215	270	80
김포	126	226	56	1,688	3,441	48	29	144	20
*김해	59	200	30	878	1,435	61	19	26	73
제주	77	143	54	1,080	924	117	34	33	103
*대구	21	140	15	223	371	60	2	1.7	117
*광주	16	140	11	208	294	70	3	5.5	55
*청주	6	140	4	76	315	24	2	3.8	53
*사천	6	165	4	52	101	51	0.3	-	-
*포항	8	100	8	65	385	17	0.2	-	-
*군산	1.4	140	1	15	44	34	0.2	-	-
*목포	1.8	60	3	12	30	40	0.04	-	-
여수	7	60	12	51	27	188	0.2	-	-
울산	14	60	23	140	241	58	0.5	-	-
*원주	0.7	115	0.1	6	25	24	0.04	-	-
양양	2.6	43	6	20	317	6	0.09	-	-
합계	476.5	1,972	24	6,493	10,950	59	305.57	484	63

<2002년 공항수송능력 및 수송실적>

구분	운항회수(천회)			여객(만명)			화물(만톤)		
	실적(A)	능력(B)	A/B(%)	실적(A)	능력(B)	A/B(%)	실적(A)	능력(B)	A/B(%)
인천	126	240	53	2,092	3,000	70	202	270	75
김포	128	226	57	1,709	3,441	50	30	144	21
*김해	60	200	30	917	1,435	64	20	26	77
제주	67	143	47	994	924	107	34	33	103
*대구	20	140	14	227	371	61	2	1.7	118
*광주	14	140	10	213	294	72	3	5.5	55
*청주	4	140		63	315	20	2	3.8	53
*사천	6	165	3	55	101	54	0.3	-	-
*포항	8	100	8	70	385	18	0.2	-	-
*군산	2	140	1	15	44	34	0.2	-	-
*목포	3	60	5	17	30	57	0.05	-	-
여수	7	60	12	54	27	225	0.2	-	-
울산	13	60	22	138	241	57	0.5	-	-
*원주	1	115	1	3	25	12	0.01	-	-
양양	3	43	7	22	317	7	0.1	-	-
합계	462	1,972	23	6,589	10,950	60	294.56	484	61

(2) 불법광고물 최근 3년간 2.4배 증가 (2008년 10월 21일)

- 강원도 국정감사에서 김소남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강원도의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이 2005년 6건에서 2006년 13건, 2007년 16건으로 최근 3년간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은 총 2, 217건으로 연도별로 보면 2005년 426건에서 2006년 748건, 2007년 1,043건으로 최근 3년간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최근 3년간 <지역별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서울이 717건으로 전체의 3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 27.5%, 부산 8.7%, 경남 6% 순이며 최근 3년 동안 불법광고물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남으로 20.6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의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1,001,837건에서, 2006년 963,936건로 감소하다가 2007년 2,339,600건으로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3년 동안 불법광고물은 13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7년도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을 살펴보면 불법광고물은 총 2,339,600건 중 고정광고물은 2,622건, 유동광고물 2,336,978건이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단지가 전체의 85.2%(1,994,115건)로 가장 많으며 벽보11.4%(265,588건), 현수막 2.7%(64,121건)순이다.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최근 도시의 경관을 해치는 불법 불법광고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다.”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강화하고 관리·단속을 철저히 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단위 : 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05	158	35	9	37	6	-	-	108	6	2	10	6	35	6	3	0	426
'06	260	64	24	36	21	-	-	181	13	14	20	5	25	6	68	5	748
'07	299	94	34	45	14	16	69	320	16	6	15	5	22	14	62	5	1,043
합계	717	193	67	118	41	16	69	609	35	22	45	16	82	26	133	10	2,217

<2007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단위 : 건)

구 분		강
총 계		2,339,600
고정광고물	계	2,622
	가로형 간판	487
	세로형 간판	36
	돌출간판	503
	옥상간판	13
	지주이용간판	1,268

	공공시설물이용 간판	10
	창문이용 광고물	243
	기타 (공연,선전탑,아취,교통수단)	62
유동광고물	계	2,336,978
	현 수 막	64,121
	노상입간판	4,291
	벽 보	265,588
	전 단	1,994,115
	기 타	8,863

(3) 강원지역 결식아동 최근 6년간 20배 증가 (2008년 10월 21일)

- 국정감사 강원도에 대한 김소남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의 질의에 따르면 강원지역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거르는 결식아동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원지역 결식아동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결식아동은 2003년 1,109명에서 2005년 7,762명, 2007년 11,347명, 2008년 상반기 11,285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6년 동안 약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2008년 6월 현재 강원지역 <시·군·구별 결식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춘천시 23.4%(2,637명)로 가장 많으며 강릉시 14%(1,584명), 원주시 13.1%(1,479명), 속초시 7.4%(840명)순이다.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경기침체로 빈곤층이 증가하면서 결식아동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충분한 영양공급으로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노인,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3년~2008년 6월 현재 강원도 결식아동 현황>

시군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계	1,109	4,276	7,762	11,093	11,347	11,285
춘천시	64	534	1,439	2,508	2,631	2,637
원주시	140	598	1,467	1,497	1,554	1,479
강릉시	105	481	937	1,304	1,353	1,584
동해시	38	126	181	373	351	405
태백시	113	273	245	368	375	432
속초시	91	261	598	792	802	840
삼척시	60	216	315	391	393	436
홍천군	71	275	307	366	374	323
횡성군	141	399	394	723	738	648
영월군	49	157	227	299	381	215
평창군	17	86	107	148	137	144
정선군	52	178	233	338	341	330
철원군	7	102	382	361	385	363
화천군	38	106	210	279	285	237
양구군	14	74	151	264	212	210
인제군	20	69	195	358	363	315
고성군	42	235	197	368	354	349
양양군	47	106	177	356	318	338

16. 강원지방경찰청

(1) 강원랜드 강력범죄 연간 45% 증가, 2007년 188건 발생!

■ 카지노칩·지폐 위조적발, 총 38억원! (2008년 10월 21일)

- 강원랜드는 최근 4년간 전국 16곳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체보다 1.5배 많은 3조2천억원을 벌어들였고 입장객도 775만명으로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김소남 의원(한나라당·행정안전위원회)의 10월 21일 강원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에 따르면, 강원랜드 카지노 설립 전후로 정선지역 범죄 평균발생빈도가 23% 증가하는 등 각종 범죄발생률이 높아져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실제로 강원지방경찰청이 김소남 의원에게 제출한 ‘강원랜드

관련 5대범죄 현황’에 따르면 2007년 강원랜드 5대범죄는 188건으로, 전년에 비해 45%가량 증가했다.

특히 작년에는 처음으로 살인과 강간 범죄가 발생했고, 폭력(82), 절도(104)도 급증하였다.

사례로는,

- '07. 2. 11. 03:00경 강원랜드 카지노 4층 현관에서, 술취한 피의자가 애인이 피해자와 게임하는 등 사귀는 것으로 오인하고 과도로 얼굴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 '07. 3. 27. 23:50경 강원랜드호텔 17층 스위트룸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술을 사가지고 오라고 유인하여 총 4회 강간하고, 같은 해 4. 2. 07:00경 정선 사복읍 소재 신호전 당사 기숙사내에서 피의자는 피해자가 문을 늦게 열어 주었다는 이유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음.
- 한편 강력범죄 이외에 카지노칩이나 위조지폐 적발로 단속된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08. 1. 13, 중국 광저우성 소재 태성프라스틱 칩 제조공장 에서 강원랜드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 100만원권 3,703개 (37억300만원), 위조, 국내에 들여와 '08. 1. 24일 카지노 에서 위조된 칩 54개를 환전한 2명을 검거, 관련자 등을 수사하여 칩 위조단 11명을 검거(구속 9, 불구속 2).
- 피의자 이○○(54,남)은 '08. 9. 11. 21:59경 정선군 사복읍 사복리 강원랜드에서 위조된 100만원권 위조 칩 3매를 10만원권 칩 30매로 교환하여 게임을 한 후, 다시 위조된 100만원권 칩 3매로 교환 후, 환전소에 위조된 100만원권 칩 3매를 제시한 것을 검거(불구속).

- 피의자 오○○(40,남)은 '08. 6월경 강원랜드 카지노 블랙잭 테이블에서 게임을 하던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10만원권 칩을 받아 보관다가 같은 해 9. 24. 03:00경 카지노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해 칩 5개를 환전소에 제시한 것을 검거(불구속).

- 피의자 유○○(54,남)은 '07. 7. 24, 경기 오산시 자신의 원룸에서 복합기를 이용하여 만원권 지폐를 663매 위조 후, '07. 7. 28. 12:30경 강원랜드 카지노에 위조한 만원권 지폐 300매를 소지하고 들어가 200매를 사용한 피의자 검거(구속)한 사례가 있다.

☞ 김소남 의원 :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에 유치한 강원랜드가 범죄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경찰이 강원랜드와 지속적인 협조체제 구축하고, 취약지구 순찰강화, 불법사채업·유홍接客업소 등 이권 개입 폭력배, 성매매 업소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

<강원랜드와 관련된 5대범죄 발생, 검거, 조치 결과>

구분 기간	총계					살인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건)	검거 (건)	검거 인원			발생 (건)	검거 (건)	검거 인원			발생 (건)	검거 (건)	검거 인원			발생 (건)	검거 (건)	검거 인원			발생 (건)	검거 (건)	검거 인원		
			총계	구속	불구속			총계	구속	불구속			총계	구속	불구속			총계	구속	불구속			총계	구속	불구속
'05	131	78	83	6	77																				
'06	130	72	101	1	100																				
'07	188	136	174	8	166	1	1	1	1		1	1	3		3	104	65	68	7	61	82	69	102		102
'08. 6.30	91	65	90	3	87											50	32	34	3	31	41	33	56		56

※ '05~'08. 6월까지 5대범죄 중 강도 발생 건수 없음

(2) 강원도내 민간보유 석궁 5 정중 1정은 행방불명!

■ 개인소지총기 점검률 전국 최하위!

(2008년 10월 21일)

- 작년 버지니아 총기사건에서 보았듯, 총기는 한 번의 사용으로 강력한 인명 피해를 줄 수 있어 관리와 단속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 한편 김소남 의원(한나라당·행정안전위원회)의 10월 21일 강원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에 의하면, 도내 민간소지총기 점검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은 2007년 공기총, 공기권총, 마취총, 전자총격기, 석궁 등 대부분의 총기류에 대한 일체점검을 벌였으며, 전국적인 점검률이 98.46%이다.
그러나 강원지역의 점검률은 95.17%로 지방청 가운데 최하위였다.
점검대상 8,172정중 7,777정이 확인되었으나, 395정에 해당하는 총기는 행방이 묘연한 실정이다.

- 한편, 총기 종류별로는 5.5mm산탄총과 석궁의 점검률이 특히 낮았으며, 5.5mm산탄총은 대상 480정 가운데 424정이 점검되었고, 석궁은 대상 70정중 57정만이 점검되는데 그쳤다.

- 작년 초 김 모 교수의 석궁 테러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석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그릇된 사용이 가져오는 인적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해 준 사례이다.

그러나 도내개인 소지 석궁 5정중 1정꼴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실종된 석궁으로 인한 잠재된 안전사고에 도민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하겠다.

- 한편 지난 3년간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격장 안전점검에 있어서도 강원도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8건)의 시정요구를 받아, 도내 총기관리가 부실하다는 점이 문제된 바 있다.

☞ 김소남 의원 : 강원청에서는 미점검 총기류에 대한 별도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총기 관리 류로 인한 도민의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2007년 개인소지총기 일제점검 결과>

(단위 : 정)

구 분	계	단탄공기총		산탄공기총		공기 권총	마취총	전자 총격기	석궁	
		4.5mm	5.0mm	5.5mm	6.4mm					
계	점검대상	129,768	10,351	70,791	3,983	10,335	4,070	1,660	27,350	1,228
	점검	127,768	10,212	69,974	3,861	10,085	4,032	1,623	26,798	1,183
	점검율(%)	98.46	98.66	98.85	96.94	97.58	99.07	97.77	97.98	96.34
서울	점검대상	15,518	2,097	2955	166	802	642	52	8641	163
	점검	15,432	2088	2945	165	794	641	50	8592	157
	점검율(%)	99.45	99.57	99.66	99.40	99.00	99.84	96.15	99.43	96.32
부산	점검대상	2,974	255	1279	217	74	79	8	1032	30
	점검	2,917	253	1274	216	74	79	8	985	28
	점검율(%)	98.08	99.22	99.61	99.54	100.00	100.00	100.00	95.45	93.33
대구	점검대상	4,935	457	2030	79	288	197	20	1825	39
	점검	4,913	457	2025	79	287	197	20	1809	39
	점검율(%)	99.55	100.00	99.75	100.00	99.65	100.00	100.00	99.12	100.00
인천	점검대상	6,374	784	2402	185	664	299	25	1935	80
	점검	6,326	782	2381	183	662	299	25	1915	79
	점검율(%)	99.25	99.74	99.13	98.92	99.70	100.00	100.00	98.97	98.75
울산	점검대상	2,009	141	1091	41	110	185	38	385	18
	점검	1,971	138	1074	39	106	184	38	374	18
	점검율(%)	98.11	97.87	98.44	95.12	96.36	99.46	100.00	97.14	100.00
경기	점검대상	24,036	2403	11524	529	2875	701	263	5387	354
	점검	23,630	2363	11374	519	2824	695	257	5255	343
	점검율(%)	98.31	98.34	98.70	98.11	98.23	99.14	97.72	97.55	96.89
강원	점검대상	8,172	441	4986	480	1168	312	186	529	70
	점검	7,777	421	4837	424	1080	298	168	492	57
	점검율(%)	95.17	95.46	97.01	88.33	92.47	95.51	90.32	93.01	81.43
충북	점검대상	8,266	548	5330	447	874	136	157	694	80
	점검	8,116	530	5268	436	841	136	153	672	80
	점검율(%)	98.19	96.72	98.84	97.54	96.22	100.00	97.45	96.83	100.00
충남	점검대상	16,372	946	10682	476	1333	368	178	2289	100
	점검	16,155	929	10573	467	1299	363	177	2253	94
	점검율(%)	98.67	98.20	98.98	98.11	97.45	98.64	99.44	98.43	94.00
전북	점검대상	7,754	353	5372	180	696	155	87	863	48
	점검	7,711	351	5353	180	691	153	87	848	48
	점검율(%)	99.45	99.43	99.65	100.00	99.28	98.71	100.00	98.26	100.00
전남	점검대상	11,496	463	8275	248	415	279	283	1451	82
	점검	11,194	455	8123	235	398	275	277	1352	79
	점검율(%)	97.37	98.27	98.16	94.76	95.90	98.57	97.88	93.18	96.34
경북	점검대상	12,605	764	8988	391	817	168	268	1138	71
	점검	12,591	763	8979	391	817	168	268	1134	71
	점검율(%)	99.89	99.87	99.90	100.00	100.00	100.00	100.00	99.65	100.00
경남	점검대상	7,932	592	5039	468	198	413	81	1057	84
	점검	7,739	577	4942	453	191	410	81	1003	82
	점검율(%)	97.57	97.47	98.08	96.79	96.46	99.27	100.00	94.89	97.62
제주	점검대상	1,325	107	838	76	21	136	14	124	9
	점검	1,296	105	826	74	21	134	14	114	8
	점검율(%)	97.81	98.13	98.57	97.37	100.00	98.53	100.00	91.94	88.89

'07
년

<사격장 일체점검 결과('05년 이후)>

연 번	기 간	대 상	점검결과	
1	' 05. 6. 16 ~ 6. 22	사격장 6개소	충북	시정 1
			전남	시정 1
2	' 06. 5. 1 ~ 5. 12	사격장 68개소	서울	시정 8
			부산	시정 1
			대구	시정 1
			인천	시정 1
			울산	시정 1
			경기	시정 1
			강원	시정 8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시정 1
			경북	시정 1
			경남	-
제주	시정 2			
계	시정 25			
3	' 06. 10. 21 ~ 10. 22	사격장 17개소	-	
4	' 06. 12. 31 ~ ' 07. 1. 4	사격장 22개소	-	
5	' 07. 4. 19 ~ 4. 26	사격장 96개소	경기	시정 3
			울산	시정 1

※ 자료 : 경찰청

(3) 강원도내 해수욕장은 폭력 사건 우범지역!

■ 지난 4년간 도내 여름 피서지 범죄의 72%는 폭력범! (2008년 10월 21일)

- 김소남 의원(한나라당·행정안전위원회)의 10월 21일 강원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매년 강원도를 찾는 피서객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4년간 강원도를 찾은 피서객은 약 1억7천만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강원도 피서객 현황>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피서객수	40,890,639명	37,003,383명	43,321,471명	50,563,412명

※ 자료 : 강원도청

- 피서객 증가에 따라 강원청에서는 도내 관광객이 몰리는 해수욕장을 포함한 강원지역 주요 유원지에서 한시적으로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하고 있다.
- 한편 여름 경찰관서에서 집계된 ‘도내 피서지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도내 주요 피서지에서 발생한 범죄는

173건, 총 289명에 달한다.

- 연도별로는 2005년 64건(110명), 2006년 44건(100명), 2007년 30건(48명), 2008년 35건(31명)으로 건수와 범죄자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 범죄별로는 폭력범(207명), 절도범(17명), 강간범(10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간은 강릉서 관할(6명), 폭력은 속초서 관할지역(115)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연도별 피서지 범죄 발생 현황>

연도	계		강간		절도		폭력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2005년	64	110	3	3	8	10	37	81	16	16
2006년	44	100	2	3	3	4	26	74	13	19
2007년	30	48	3	4	1	2	16	32	10	10
2008년	35	31	0	0	9	1	16	20	10	10
계	173	289	8	10	21	17	95	207	49	55

※ 자료 : 강원지방경찰청

- 특히 도내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폭력범은 전체 피서지 폭력범 289명 중 72%에 해당하는 207명이다.
또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5명은 속초서 관할인 낙산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원지역 해수욕장 못지않게 여름 피서지로 유명한 부산지역은 이와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부산 경찰은 해수욕장 일대에 경찰특공대와 광역수사대 등으로 구성된 민생침해 전담반을 투입해 여름철 마다 해수욕장

을 맴돌며 피서객을 괴롭혀 온 조직폭력배와 갈취배, 질서문란 사범 등을 집중단속한 결과, 금년 폭력사범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비교해 보았을 때, 도내 피서지 폭력범죄 예방을 위해 강원 경찰의 노력이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 김소남 의원 : 여름 피서지 범죄가 감소하고 있으나, 특정 범죄의 비율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이고, 피서지 범죄 예방을 위해 앞으로 자치단체 등과 함께 합동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강원도를 찾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람.

<주요 해수욕장 5대범죄 발생현황>

(건/명)

2005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계	40/81			1/1	5/6	34/74
경포해수욕장	4/10			1/1	1/1	2/8
망상해수욕장	3/7				1/1	2/6
낙산해수욕장	33/64				3/4	30/60
2006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계	20/67			2/3	2/2	16/62
경포해수욕장	6/18			2/3		4/15
망상해수욕장	5/23				1/1	4/22
낙산해수욕장	9/26				1/1	8/25
2007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계	14/29			2/2	1/2	11/25
경포해수욕장	5/5			2/2		3/3
망상해수욕장						
낙산해수욕장	9/24				1/2	8/22
2008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계	14/20				1/1	13/19
경포해수욕장	4/7				1/1	3/6
망상해수욕장	2/5					2/5
낙산해수욕장	8/8					8/8

※ 본 자료는 주요 피서지 여름경찰관서 운영기간 중 발생한 범죄이며 수기통계임.

<2008년 여름경찰관서 운영 현황 (총 18개소)>

여름 경찰서 (3)	○ 강릉 경포
	○ 동해 망상
	○ 속초 낙산
여름 치안 센터 (15)	○ 강릉(3) : 주문진·정동진·해수욕장, 소금강유원지
	○ 속초(2) : 속초·하조대·해수욕장
	○ 삼척(2) : 삼척·맹방·해수욕장
	○ 홍천(2) : 밤별·팔봉유원지
	○ 고성(3) : 화진포·송지호·삼포·해수욕장
	○ 철원(2) : 직탕·순담유원지
	○ 화천(1) : 광덕유원지

※ 자료 : 강원지방경찰청

17.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20만 m² 부동산 25년째 미활용

■ 여의도 면적의 1/7 해당, 현재까지 재산세로 납부한 비용만 20억원 이상 (2008년 10월 23일)

- 김소남 의원(한나라당·행정안전위원회)의 10월 23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질의에 의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유휴부지가 1,173,642m²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7이자 서울숲 넓이에 해당하는 면적.
- 공단은 구 총무처로부터 85만m²에 해당하는 공원부지 및 도로부지를 승계받았다.
또한 이외에도 제주도와 강원도 일대의 잡종지와 임야를 직접 매입한 바 있다.
그러나 공단이 취득한 이 부지들은 개발이 어렵거나 개발활용도가 낮아 25년이 되도록 미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지난 25년간 토지취득으로 인한 재산세로만 20억2,429만8천원을 납부했다.

- 한 예로 지난 1984년 공단은 공무원휴양시설 건립을 위하여 강원도 설악산 일대에 318,114m² 토지 (잡종지, 임야)를 취득했다.

그러나 이 토지는 국립공원이 위치한 상수원보호구역 일대라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공무원 휴양시설 건립 목적으로 해당 부지를 취득하여 아직까지 목적에 맞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2007년부터 올해초까지는 이 부지에 ‘공무원은퇴자 전원휴양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다가 현재 중단했다.

☞ 김소남 의원 :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국유재산인 미활용 토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단의 미활용 부동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행정재산이 아니므로 국가에 인계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자산운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공단은 미활용 부지들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며, 특히 직접 매입한 부지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그 취득 목적에 맞는 활용방법을 찾도록 해야 할 것.

아울러 공단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런 유휴재산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미활용 부지 활용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

<공단 보유 미활용부지 지방세 납부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서울 신림동	제주 색달동	대전 갈마·월평	강원 속초·양양	도로부지
개 요	- '83.1 취득 - 514,867㎡	- '94.4 취득 - 15,398㎡	- '83.1취득 - 225,236㎡	- '84.10취득 -318,114㎡	- '83.1 취득 - 110,767㎡
1995	2,646	22,917	130,512	70,049	지방세 비과세 대상 (지방세법 제 186조)
1996	6,335	23,799	42,410	71,680	
1997	6,255	25,417	51,069	77,357	
1998	6,556	33,989	68,015	112,564	
1999	5,746	30,527	58,479	99,161	
2000	4,706	33,134	60,779	107,296	
2001	4,303	34,772	59,668	97,997	
2002	3,904	32,089	57,066	75,114	
2003	3,987	35,300	54,936	79,497	
2004	4,552	39,777	56,947	74,015	
2005	4,206	8,015	11,557	11,006	
2006	4,840	9,990	14,140	12,741	
2007	5,631	9,678	12,068	12,673	
2008	6,550	10,509	12,226	13,146	
계	70,217	349,913	689,872	914,296	

※ 공단 보유토지에 대한 지방세는 '95년부터 부과됨
('95년 이전에는 과세면제 대상이었음)

(2) 2003년 이후 공무원연금 과오지급액 약 1,100억원, 83억원은 미환수! (2008년 10월 23일)

- 김소남 의원(한나라당·행정안전위원회)의 10월 23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질의에 의하면 2003년 이후 2008년 9월말까지 과오지급된 연금은 총 109,491,410,640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01,187,210,880원이 환수되었으나 아직 8,304,199,760원은 미환수 되었다.
-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공단의 연금 과오지급으로 인한 소위 ‘환수채권’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형벌 등에 의한 급여환수’, ‘공무원의 파면·해임 후 복직’, ‘종결·승계 등 신고지연’, ‘정지기관 신고지연’, ‘급여종류 변경’, ‘소득심사정지관련 환수액’, ‘기여금반환 과지급’ 등이다.
- 한편 환수채권의 연도별 발생현황은 2003년 142억, 2004년 116억, 2005년 179억, 2006년 126억, 2007년 304억, 2008년 228억원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 2007년에는 2006년 금액기준 2.4배에 해당하는 과오지급이 발생했다.

- 세부적으로는 ‘형벌등에 의한 급여환수’ 16억원, ‘파면·해임 후 복직’ 56억원, ‘종결·승계등 신고지연’ 4억원, ‘정지기관 신고지연’ 3억원, ‘급여종류변경’ 215억원, ‘기타’ 11억원임. 특히, 2005년 공무원 노조활동으로 파면·해임되었던 공무원들이 복직함에 따라 ‘파면·해임 후 복직’ 사유에 해당하는 환수채권이 2배 이상 증가했으나, 미회수액은 3억5천만원에 달한다.
- 또한 ‘법관·검사보수에관한규칙’이 2007년 10월 29, 11월 3일 확정되어 그 이전에 퇴직한 법관과 검사들 퇴직금 재산정에 따른 환수채권이 110억원 가량 증가하여 연간 과오지급 총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 한편 2007년 기준 연금 과오지급 건수가 많았던 직종은 지방일반직(191건, 69억원), 법관검사(186건, 111억원), 교육직(134건, 44억원) 순이다.

☞ 김소남 의원 : 행안부는 내년 공무원연금 국고보전액을 올해 1조2천억원보다 60퍼센트 이상 늘어난 2조원500억원 신청.

보전금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공단은 국민들의 혈세가 새는 것을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오지급분 환수를 위해 재산보유 및 직장취업 사실 조회를 철저히 하고, 발견시에는 선가압류·후고지하여 채권 면탈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환수대상자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채권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도록 할 것이다.

〈환수채권 연도별 발생·회수 현황〉

(단위: 원)

연도	환수채권 발생사유	회수대상액	회수액(원금)	미회수액
2003	형벌등에의한 급여환수	3,175,000,000	1,451,000,000	1,724,000,000
	파면,해임후 복직	3,608,000,000	3,822,000,000	-214,000,000
	기타	7,418,000,000	7,016,000,000	402,000,000
	소 계	14,201,000,000	12,289,000,000	1,912,000,000
2004	형벌등에의한 급여환수	3,079,960,350	1,780,171,800	1,299,788,550
	파면,해임후 복직	1,673,990,910	1,891,152,350	-217,161,440
	종결,승계등 신고지연	455,124,200	427,616,690	27,507,510
	정지기관 신고지연	160,202,860	171,710,530	-11,507,670
	급여종류변경	5,930,057,550	5,888,119,630	41,937,920
	기타	293,676,690	252,224,080	41,452,610
	소 계	11,593,012,560	10,410,995,080	1,182,017,480
2005	형벌등에의한 급여환수	3,755,086,590	1,922,171,110	1,832,915,480
	파면,해임후 복직	4,287,998,950	2,644,037,250	1,643,961,700
	종결,승계등 신고지연	277,753,310	243,850,880	33,902,430
	정지기관 신고지연	341,667,720	305,748,810	35,918,910
	소득심사정지관련 환수액	170,589,750	14,118,830	156,470,920
	급여종류변경	8,724,260,870	8,823,472,750	-99,211,880
	기타	306,281,280	243,657,590	62,623,690
	소 계	17,863,638,470	14,197,057,220	3,666,581,250
2006	형벌등에의한 급여환수	1,315,570,060	1,827,491,220	-511,921,160
	파면,해임후 복직	2,618,648,700	3,121,503,280	-502,854,580
	종결,승계등 신고지연	301,286,470	248,226,870	53,059,600
	정지기관 신고지연	96,648,990	140,855,840	-44,206,850
	기여금반환 과지급	1,397,110	1,397,110	0
	급여종류변경	7,871,270,040	7,874,696,170	-3,426,130
	기타	362,989,630	420,340,680	-57,351,050
	소 계	12,567,811,000	13,634,511,170	-1,066,700,170
2007	형벌등에의한 급여환수	1,592,973,910	1,035,375,870	557,598,040
	파면,해임후 복직	5,624,456,150	5,272,415,660	352,040,490
	종결,승계등 신고지연	408,429,030	396,855,700	11,573,330
	정지기관 신고지연	262,672,510	218,145,060	44,527,450
	급여종류변경	21,474,418,330	21,389,060,360	85,357,970
	기타	1,065,625,850	1,029,533,900	36,091,950
	소 계	30,428,575,780	29,341,386,550	1,087,189,230
2008 9.30.	형벌등에의한 급여환수	1,027,795,000	1,104,605,800	-76,810,800
	파면,해임후 복직	1,138,913,860	1,981,762,800	-842,848,940
	종결,승계등 신고지연	462,588,980	495,833,270	-33,244,290
	정지기관 신고지연	109,697,340	134,201,260	-24,503,920
	소득심사정지관련 환수액	818,080	818,080	0

	급여종류변경	18,942,154,220	16,665,666,750	2,276,487,470
	기타	1,155,405,350	931,372,900	224,032,450
	소 계	22,837,372,830	21,314,260,860	1,523,111,970
	계	109,491,410,640	101,187,210,880	8,304,199,760

※ 금액은 발생당시 원금기준임

<연도별 환수채권 발생 직종별 3위 및 발생사유>

(단위 : 원)

연도	순위	직종	발생사유	건수	금액	
2007	1위	지방 일반 직	급여종류변경	40	2,061,485,840	
			정지기관 신고지연	6	29,614,210	
			종결, 승계등 신고지연	46	80,920,530	
			파면, 해임후 복직	86	4,275,016,550	
			형벌등에의한 급여환수	9	330,207,840	
			기타	4	100,490,690	
	2위	법관 검사	급여종류변경	178	10,976,922,820	
			정지기관신고지연	7	52,049,710	
			형벌등에의한급여환수	1	43,596,950	
	3위	교육 직	급여종류변경	40	3,705,013,700	
			정지기관 신고지연	5	59,053,390	
			종결, 승계등 신고지연	73	175,000,570	
			파면, 해임후 복직	2	114,456,560	
			형벌등에의한 급여환수	4	92,633,610	
			기타	10	273,981,930	
	2008	1위	교육 직	급여종류변경	87	8,478,517,690
				정지기관 신고지연	5	24,401,970
				종결, 승계등 신고지연	49	165,270,340
파면, 해임후 복직				3	216,151,970	
형벌등에의한 급여환수				1	1,448,180	
기타				4	131,981,000	
2위		지방 일반 직	급여종류변경	29	1,240,565,580	
			정지기관신고지연	4	8,934,850	
			종결, 승계등 신고지연	28	23,255,490	
			파면, 해임후 복직	8	483,244,290	
			형벌등에의한 급여환수	6	132,009,810	
			기타	5	159,747,840	
3위		국가	급여종류변경	15	868,288,590	

	일반 직	정지기관 신고지연	4	16,079,610
		종결,승계등 신고지연	19	78,639,510
		파면,해임후 복직	2	19,156,430
		형벌등에의한 급여환수	6	362,539,820
		기타	22	350,331,240

※ 자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8. 도로교통공단

(1) 교통안전분담금, 계좌오류 난 환급금 6억1,500만원!

- 신청했으나 환급금 받지못한 신청자들, 도로교통공단에 전화하면 지금이라도 환급가능!
- 오류 정정 안될 경우 미환급금 전액 공단 수입처리
- 환급오류 1억원(약 24,000건)은 환급 신청인의 동행 타계좌에 일괄입금처리, 금융위원회 “금융실 명법 위반”
(2008년 10월 23일)

-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이 시행되었으나, 김소남의원(한나라당·행정안전위원회)의 10월 23일 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 질의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미환

급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미환급금은 ‘환급오류’가 발생한 6억1500만원으로, 환급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 되었으나 입금시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비용을 의미한다. 환급오류액은 정정되지 않을 경우 2011년 전액 공단의 잡수입으로 처리된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007년 11월 1일, 계좌번호 오류가 생긴 신청건들에 대해 환급신청인의 ‘동행 활성계좌’를 찾아 일괄입금 해줄 것을 은행에 요청하여, 가능하다는 회답을 받은 일부 은행에 24,000건 총 1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리하였다.
- 그러나 김소남 의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질의 결과, 이런 입금행위가 ‘간접적’으로 공단에 신청자의 금융거래사실을 알려준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실명법에 위배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 이에 따르면 공단과 이런 의뢰를 받아 업무를 처리해준 해당 은행은 엄밀히 말해 위법한 방법으로 금융업무를 처리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괄 입금 처리 한 사람과 아닌 사람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단의 업무처리가 정상적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김 의원은 지적. 아직도 환급오류가 발생한 신청자가 요청해 올 경우 환급이 가능하나, 공단은 현재 환급정정을 위한 아무런 업무도 하지 않고있으며, 추가 환급 대책도 없다.

☞ 김소남 의원 : 아직까지도 미환급인 4억700만원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서, 예를 들자면 홈페이지, TV·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야한다고 주장.

환급오류 정정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바, 경찰청장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서면으로 제출할 것.

<교통안전분담금 환급현황>

	건	액	비고
환급대상	3,300만건	1,267억원	~2001
환급현황	1,700만건	686억원	2002.1.1. ~2006.12.31
환급오류	16만2,000	6억1,500만원	
환급오류정정	5만3,000건	2억1,000만원	2007.1.1. ~2008.5.30.
추가환급대상	10만9,000건	4억700만원	~2011.12.31

(2) 도로교통공단, 46억 국민 혈세로 주식출자, 감사원 “지분 전액 매각” 지시! (2008년 10월 23일)

- 경찰청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은 매년 국고에서 운영예산을 보조 받고 있으며, 07년 기준 국고 출연금은 776억원에 달한다.
- 한편 김소남의원(한나라당·행정안전위원회)의 10월 23일 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 질의에 의하면, 지난 참여정부 초(2004.7.27.) 공단에서는 주식회사 YTN과 “YTN 지상파 DMB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46억이라는 자금을 출자해서 서울·수도권 지역 DMB사업에 참여 했다가, 감사원 감사로 발각되어 전액 매각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사업 참여 당시, 설령 막대한 기대 수익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공단이 자체수입이 충분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상황은 다르겠지만, 연간 700억이 넘는 출연금을 지원받는 정부산하기관이 46억이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가지고 엄청난 리스크를 수반하는 주식에 투자 한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
- 공단의 자체수입 증대가 확실시되어 투자했다지만, 2003년 출자 당시 5000원 이던 YTN DMB 주식은 현재 한 주당

2,500원으로 폭락했다.

즉, 현재 시점에서 지분을 매각할 경우 출자액의 절반인 23 억원을 손해 본다는 이야기.

- 또한 설령 DMB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어서 추진했다고 했을 경우에도,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방송(TBS)에서는 별도 출자 없이 주식회사 서울방송(SBS)과 채널 사용계약을 체결 해서 DMB교통방송을 실시했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 조사만 철저히 했으면, 공단이 굳이 출자를 하지 않았어도 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입장이다.
- 결론적으로 공단은 사업 타당성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분 출자했다가 수익도 보지 못하고 지분을 매각해야 되는 위기. 이에 따라 금년 지난 8월 4일 이사회에서 YTN DMB 출자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으나, 매수 희망자가 없음.

☞ 김소남 의원 : 사업 타당성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공단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 세금으로 주식투자를 해서, 공단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상황에 놓였음.

혈세 낭비가 더 큰 문제라고 하겠다.

이사장은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경찰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최대한 손실이 없는 선에서 지분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II

2008년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2008년 국정감사 관련 언론기사

번호	제 목	언론사	작성일
1	폭염진료 환자 4년 새 59% 증가	K B S 뉴 스	2008.08.05
2	“폭염 진료환자 최근 4년간 59% 증가”	m b n 뉴 스	2008.08.05
3	신도림교대역은 성폭력 ‘우범지대’	매 일 경 제	2008.09.20
4	신도림 교대역은 성폭력 ‘우범지대’	뉴 데 일 리 뉴 스	2008.09.21
5	‘종로 3가역’은 폭력 ‘우범지대’ ... 최다 범죄 발생	제 주 투 데 이	2008.09.21
6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오토바이 사망자 수는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계 일 보	2008.09.21
7	신도림교대역 성폭력 가장 ‘빈번’	동 아 일 보	2008.09.21
8	종로3가역에서 범죄 많이 발생	M B C 뉴 스	2008.09.21
9	신도림교대역은 성폭력 ‘우범지대’	연 합 뉴 스	2008.09.21
10	신도림교대역‘더듬이 소굴’..성폭력‘우범지대’	소비자가만드는신문	2008.09.21
11	‘종로 3가역’은 폭력 ‘우범지대’... 최다 범죄 발생	노 컷 뉴 스	2008.09.21
12	“신도림교대역 주변 성추행 조심”	서 울 경 제	2008.09.21
13	신도림교대역은 성폭력 ‘우범지대’	아 시 아 투 데 이	2008.09.21
14	신도림교대역선 ‘늑대’ 조심	세 계 일 보	2008.09.21
15	지하철 ‘여전히 더듬는다’	스 포 츠 칸	2008.09.21
16	신도림교대역 성폭행 가장 ‘빈번’	뉴 시 스	2008.09.21
17	서울지하철역 ‘범죄 천국’ 언제까지...	한 국 일 보	2008.09.22
18	[수도권 이모저모] 종로3가역 ‘우범지대’ 外	M B C T V	2008.09.22
19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 속 오토바이사고 사망자 폭증	세 계 일 보	2008.09.22
20	차없는 날에도 오토바이는 달린다?	메 디 칼 투 데 이	2008.09.22
21	차없는 날에도 오토바이는 달린다?	마 이 테 일 리	2008.09.22
22	오토바이사고, 일반 사망률 2배 ... 하루 2명이상 사망	뉴 시 스	2008.09.22
23	오토바이사고, 일반 사망률 2배 ... 하루 2명이상 사망	굿 데 이 스포 츠	2008.09.22
24	신도림교대역 성폭력 가장 ‘빈번’	굿 데 이 스포 츠	2008.09.22
25	신도림교대역선 성추행, 종로 3가선 폭력 주의를	포 커 스 신 문 사	2008.09.22
26	오토바이사고, 일반 사망률 2배	K B N 대 한 방 송	2008.09.22
27	여성 승객은 신도림-교대역서 ‘주의’	스 포 츠 한 국	2008.09.22
28	“경찰 헬기교체 뚜렷한 이유없이 보류”	매 일 경 제	2008.09.22
29	“오토바이 사고 사망, 일반 교통사고의 2배”	보 안 뉴 스	2008.09.22
30	서울지하철역 ‘범죄 천국’ 언제까지...	스 포 츠 한 국	2008.09.22
31	오토바이 교통사고 심각 수준	대 구 신 문	2008.09.22
32	“경찰 헬기교체 뚜렷한 이유없이 보류”	동 아 일 보	2008.09.22
33	신도림교대역 성폭력 가장 ‘빈번’	동 아 일 보	2008.09.22
34	오토바이사고 사망자 수 ‘가속’	시 민 일 보	2008.09.23
35	신도림교대역 성폭력 ‘빈번’	시 민 일 보	2008.09.23
36	“오토바이 사고 사망, 일반 교통사고의 2배”	보 안 뉴 스	2008.09.23
37	<신도림교대역은 성폭력 ‘우범지대’>	코 나 스	2008.09.25
38	김소남 “행정정보 비공개율 해마다 증가”	매 일 경 제	2008.09.28
39	‘이번 역은 성추행 역입니다’	e 조 은 뉴 스	2008.09.29
40	“행정정보 비공개율 해마다 증가”	K B S 뉴 스	2008.09.29

번호	제 목	언론사	작성일
41	공공기관 정보공개 5년전보다 후퇴했다	세 계 일 보	2008.09.29
42	김소남 “행정정보 비공개율 해마다 증가”	연 합 뉴 스	2008.09.29
43	한국 정보공개제도 ‘후진국 형’	기 자 협 회 보	2008.10.01
44	치한들은 주로 환승역을 노린다-지하철 범죄 실상	일 간 연 예 스포츠	2008.10.01
45	김소남 “등록대부업체 절반, 불법자행”	매 일 경 제	2008.10.02
46	대부업체 44.7%가 불법 사각지대	이 데 일 리	2008.10.02
47	공공기관이 ‘찢어진 국기’계양	헤럴드 생생뉴스	2008.10.02
48	걱정되는 일선 경관 사격 실력	중 앙 일 보	2008.10.03
49	대부업체 44.7%가 불법 사각지대	노 컷 뉴 스	2008.10.03
50	김소남 “등록대부업체 절반, 불법자행”	연 합 뉴 스	2008.10.03
51	공무원 민간 업체 근무 휴직제도 ... 정보유출 악용 가능성	경 향 신 문	2008.10.03
52	“공문서 위변조사범 4년간 79.8% 증가”	매 일 경 제	2008.10.03
53	폭언으로 상환독촉, 부적절 대부업광고 등 수법 다양	민 중 의 소 리	2008.10.03
54	등록된 대부업체도 불법행위 심각	민 중 의 소 리	2008.10.03
55	김소남 “등록대부업체 절반, 불법 자행”	K B S 뉴 스	2008.10.03
56	공문서 위변조 사범...최근 4년간 79.8% 증가	C N B N E W S	2008.10.04
57	김소남 “‘가짜’ 단속 카메라 10대중 1대”	매 일 경 제	2008.10.04
58	경기 성폭행 1천 439건... 매년 증가	매 일 경 제	2008.10.04
59	공문서 위변조 사범 최근 4년간 79.8% 증가해	노 동 일 보	2008.10.04
60	대부업체 44.7%, 59개소 불법행위로 사각지대	노 동 일 보	2008.10.04
61	“공문서 위변조사범 4년간 79.8% 증가”	아 시 아 투 데 이	2008.10.04
62	올들어 5대강력범죄 발생 부천중부뿔 최다	한 국 일 보	2008.10.04
63	“공문서 위변조사범 4년간 79.8% 증가”	연 합 뉴 스	2008.10.04
64	공문서 위변조 사범, 4년새 80% 증가	노 컷 뉴 스	2008.10.04
65	공문서 위변조사범 4년간 80% 증가	파 이 낸 셜 뉴 스	2008.10.04
66	공문서 위변조 사범 ... 최근 4년간 79.8% 증가	뉴 시 스	2008.10.04
67	공문서 위변조 사범 ... 최근 4년간 79.8% 증가	씨 앤 비 뉴 스	2008.10.04
68	“단속카메라 10대중 1대는 가짜”	M B C 뉴 스	2008.10.05
69	김소남 “개표중 투표지 분류기 160대 멈춰”	매 일 경 제	2008.10.05
70	경기지역 성폭행 1439건... 작년보다 182건 늘어	전국매일 인터넷신문	2008.10.05
71	김소남 “개표중 투표지분류기 160대 멈춰”	프 리 존 뉴 스	2008.10.05
72	전남, 가짜 단속카메라 24%... 전국 최다	투 데 이 코 리 아	2008.10.05
73	단속카메라 10대 중 1대는 ‘가짜’	체 주 투 데 이	2008.10.05
74	“단속 카메라 10대 중 1대 가짜”	K B S 뉴 스	2008.10.05
75	구속줄고 ‘숨방망이’ 처벌만	중 부 매 일	2008.10.05
76	가짜 단속카메라 10대중 1대... 전남이 가장 많아	B B S 불교방송	2008.10.05
77	김소남 “‘가짜’ 단속 카메라 10대중 1대”	동 아 일 보	2008.10.05
78	“단속 카메라 10대 중 1대 가짜”	K B S 뉴 스	2008.10.05
79	경기 성폭행 1천 439건 .. 매년 증가	연 합 뉴 스	2008.10.05
80	김소남 “‘가짜’ 단속카메라 10대중 1대”	연 합 뉴 스	2008.10.05
81	가짜 단속카메라 10대중 1대 .. 전남이 가장 많아	B B S 뉴 스	2008.10.05

번호	제 목	언론사	작성일
82	“교통단속 카메라 10대 1대 가짜”	세 계 일 보	2008.10.05
83	가짜 단속카메라 10대 중 1대 풀	노 컷 뉴 스	2008.10.05
84	가짜 교통 단속 카메라 10대 중 1대	Y T N	2008.10.05
85	경기도 성폭행 사건 매년 증가 ... 올 들어 1439건 발생	쿠 키 뉴 스	2008.10.05
86	“교통단속 카메라 10대중 1대 가짜”	헤럴드 생생뉴스	2008.10.05
87	중앙선관위, 유공자 해외연수 포상휴가로 둔갑 ... 편법성 외유	뉴 시 스	2008.10.05
88	김소남의원 “불법 대부등으로 금융사각지대 놓인 서민 구하라”	파 이 낸 셜 뉴 스	2008.10.05
89	경기지역 성폭행 사건 매년 증가	국 민 일 보	2008.10.05
90	김소남 “가짜’ 단속 카메라 10대중 1대”	오 토 타 임 즈	2008.10.06
91	김소남 “개표중 투표지 분류기 160대 멈춰”	연 합 뉴 스	2008.10.06
92	<국감> 18대총선 선거법 위반 352건, 과태료 9억 3천만원	뉴 시 스	2008.10.06
93	김소남 “개표중 투표지분류기 160대 멈춰”	프 리 존 뉴 스	2008.10.06
94	18대총선 선거법위반 352건, 과태료 9억 3천만원	씨 앤 비 뉴 스	2008.10.06
95	경기지역 성폭행 해마다 증가 추세	아 시 아 투 데 이	2008.10.06
96	18대 총선, 선거법 위반 과태료 9억 3000만원 ... ‘금품 수수’최다	고 뉴 스	2008.10.06
97	[단독] 경찰, 3년간 정보화기기 1001대 분실 ... 예산 3억원 낭비	쿠 키 뉴 스	2008.10.06
98	정보화 장비 3년간 1001대 분실 ... 경찰, 변상신규 구입비로 예산 3억원 낭비	국 민 일 보	2008.10.06
99	전남, 18대총선 선거법 위반 포상 14건, 5,700만원 최고	투 데 이 코 리 아	2008.10.06
100	18대 총선, 선거법 위반 과태료 9억 3000만원... 금품 수수’ 최다	고 뉴 스	2008.10.06
101	김소남 “의사가 보험공단 개인정보 빼냈다”	아 이 뉴 스 2 4	2008.10.06
102	김소남 “고용 확대 위한 DB사업, 지역 격차는 심화”	아 이 뉴 스 2 4	2008.10.06
103	환율 45원 뛰고 주가 60p 빠져	S B S 뉴 스	2008.10.06
104	지방공사 임원들은 연 20억 성과급 ‘돈잔치’	오 마 이 뉴 스	2008.10.06
105	행안위, 개인정보 ‘관리 허술’ 질타	매 일 경 제	2008.10.06
106	한 대도 없었던 가짜 단속카메라, 도내 2~3곳 운용	경 남 도 민 일 보	2008.10.06
107	경기지역 성폭행 8월현재 1439건 발생	경 기 신 문	2008.10.06
108	경기도 공문서 위조 사범 전국 2위	경 기 신 문	2008.10.06
109	전북경찰 5대강력범발생 최하위	전 라 일 보	2008.10.06
110	천안, 5대 강력범죄 검거율 너무 낮다	중 도 일 보	2008.10.06
111	‘뛰는’ 경찰 위에 ‘나는’ 도둑	충 북 일 보	2008.10.06
112	경기지역 성폭행 사건 매년 증가	경인방송 sunnyFM	2008.10.06
113	공문서 위변조 사범 증가세	강 원 일 보	2008.10.07
114	[광주/전남] 무늬만 단속카메라	동 아 일 보	2008.10.07
115	[국감] 경찰이 잃어버린 정보화 장비 1001대	아 시 아 경 제	2008.10.07
116	최근 3년 지자체 공무원 부정부패 범죄 급증	노 컷 뉴 스	2008.10.07
117	[국감] “공무원 범죄 80% 급증 ... 고위직 가장 많아”	아 시 아 경 제	2008.10.07
118	[국감] “62개 법률, 과거부처 명칭 그대로 사용”	아 시 아 경 제	2008.10.07
119	지자체 공무원 범죄 ... 최근 3년간 79% 증가	조세일보 전문지	2008.10.07
120	김소남 “고용확대 위한 DB사업, 지역 격차는 심화”	아이뉴스24IT/과학	2008.10.07
121	장관 연봉 1억 1259만원 ... 일반 공무원 보다 2배 이상 올라	오 마 이 뉴 스	2008.1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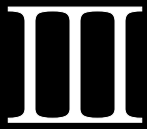
번호	제 목	언론사	작성일
122	농어촌 가구 인터넷사용료 없어 PC 환수당해	노컷뉴스	2008.10.07
123	고소득 도시 울산의 '그늘'	부산일보	2008.10.07
124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 개인정보 보유 기관 20배 ↑ '관리는 엉망'	문화일보	2008.10.07
125	<국감초점> 행안위, 개인정보 '관리 허술' 질타	연합뉴스	2008.10.07
126	"지방공무원 범죄 최근 3년간 79% 급증"	파이낸셜뉴스	2008.10.07
127	<국감쟁점> 행안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쓴소리	뉴스시스	2008.10.07
128	"23개 주요 공공기관 사이버테러 습격 당했다"	보안뉴스IT/과학	2008.10.07
129	행정정보데이터 베이스 구축사업 고용 지역편중 심해	노컷뉴스	2008.10.07
130	"농어촌, 인터넷사용료 없어 PC 환수당해"	보안뉴스IT/과학	2008.10.07
131	공공기관 개인정보 2년간 18만건 유출	경향신문	2008.10.07
132	[단독] 폐기 직전 무인단속기 정기 검사로 4년간 20억 낭비	쿠키뉴스	2008.10.07
133	폐기 직전 무인단속장비가 정기검사...경찰청·교통공단, 4년간 20억 낭비	국민일보	2008.10.07
134	"농어촌, 인터넷사용료 없어 PC 환수당해"	보안뉴스	2008.10.07
135	[광주/전남] 무너만 단속카메라	동아일보	2008.10.07
136	김소남 "10년간 자살자 2배이상 증가"	동아일보	2008.10.07
137	가짜 단속카메라는 철거해야	교통신문	2008.10.07
138	철도범 2명 중 1명은 거리 활보 중	제민일보	2008.10.07
139	제주경찰, 철도범 검거 '반타작'수준	이슈제주	2008.10.07
140	[국감] "공무원 범죄 80% 급증 ... 고위직 가장 많아"	광남일보	2008.10.07
141	[국감] 경찰이 잃어버린 정보화 장비 1001대	광남일보	2008.10.07
142	뽕뽕 뚫린 공공기관 사이버 보안	뉴스한국	2008.10.07
143	18대총선 곳곳이 '씩은내'	서울일보	2008.10.07
144	도내 18대총선 패태료 2289만원	강원도민일보	2008.10.07
145	제주지역 5대 범죄 하루 25건	한라일보	2008.10.07
134	"물리적 망분리사업 재검토해야"	디지털타임스 IT/과학	2008.10.08
135	김소남 "10년간 자살자 2배이상 증가"	연합뉴스	2008.10.08
136	"10년간 자살자 2배 이상 증가"	m b n	2008.10.08
137	'자살' 10년새 40% 증가 ... 전북·광주 최대	노컷뉴스	2008.10.08
138	1998~2007년 자살 9만 5천여명 ... 10년새 2배 증가	데일리뉴스	2008.10.08
139	<국감> 서울시, '균형발전추진평가' 16개 광역 시도 중 15위	뉴스시스	2008.10.08
140	"서울시 뉴타운이 강남-강북 불균형 키워"	노컷뉴스	2008.10.08
141	부천 성폭행사건 도내 '최다'	부천포커스	2008.10.08
142	도내 10년간 자살 증가율 전국 최고, 최근에도 끊이지 않아	전북중앙신문	2008.10.08
143	시 정보공개 미미 시교육청은 최하	인천일보	2008.10.08
144	부처 이름 바뀐지가 언젠데...	한국일보	2008.10.08
145	"10년간 자살자 2배 이상 증가"	매일경제	2008.10.08
146	경기도서 부천 오정·원미구 강력사건 최다	매일경제	2008.10.08
147	전북, '균형발전추진평가' 16개 광역 시도 중 4위	전북중앙신문	2008.10.08
148	정부 균형발전 추진 평가	기호일보	2008.10.08
149	1998~2007년 자살 9만 5천여명...10년새 2배 증가	데일리뉴스	2008.10.08
150	<국감> 서울시, '균형발전추진평가' 16개 광역 시도 중 15위	굿데이스포츠	2008.10.08

번호	제 목	언론사	작성일
151	지자체 공무원 범죄 3년간 79% 증가	경 기 신 문	2008.10.08
152	“10년 사이 자살자 2배 이상 증가”	K B S 뉴 스	2008.10.08
153	김소남 “지진시 건축물 83.7% 붕괴 우려”	동 아 일 보	2008.10.09
154	[국감] 위조화폐 발생건수는 증가, 검거율은 불과 5%	아 시 아 경 제	2008.10.09
155	<국감> 위조지폐 발생 건수 증가 ... 경찰 검거율은 저조	뉴 시 스	2008.10.09
156	위조지폐 발생 건수 증가 ... 검거율은 저조	고 뉴 스	2008.10.09
157	‘못 믿을’ 음주측정 ... 채혈측정 요구사례 증가	고 뉴 스	2008.10.09
158	경기도서 부천 오정.원미구 강력사건 최다	연 합 뉴 스	2008.10.09
159	음주측정, 부는 것보다 채혈이 피의자에 ‘유리’	헤 럴 드 생 생 뉴 스	2008.10.09
160	정부, 조직개편 전 기존 명칭 그대로 사용	노 컷 뉴 스	2008.10.09
161	부천 오정구, 경기도내 강력범죄 가장 많아	노 컷 뉴 스	2008.10.09
162	음주측정 부는 것보다 채혈이 피의자에 ‘유리’	헤 럴 드 생 생 뉴 스	2008.10.09
163	음주운전 측정이 불신으로 국고낭비 심각	뉴 시 스	2008.10.09
164	김소남 “국가며려시험장 운전자가 범규 더 위반”	매 일 경 제	2008.10.09
165	경기도내 강력사건, 부천 중부경찰서 ‘최다’	S B S 뉴 스	2008.10.09
166	벼락 맞을 확률 매년 증가... 대책은?	프 리 존 뉴 스	2008.10.09
167	<국감현장>음주운전 측정이 불신으로 국고낭비 심각	뉴 시 스	2008.10.09
168	균형발전정책 뉴타운 정착률 개선 성토	건 설 경 제	2008.10.09
169	10년간 자살자 2배증가...道 전국 최다	경 기 신 문	2008.10.09
170	낙뢰 사상자 최근 3년간 6배 증가	K B S 뉴 스	2008.10.10
171	3층 이상 건물 83.7%가 내진 설계 안돼	K B S 뉴 스	2008.10.10
172	건보 “개인정보 유출시 지위고하 막론하고 파면”	아 이 뉴 스 2 4	2008.10.10
173	경기도서 부천 오정. 원미구 강력사건 최다	중 부 일 보	2008.10.10
174	김소남 “지진시 건축물 83.7% 붕괴 우려”	동 아 일 보	2008.10.10
175	‘벼락 맞을 확률’ 해마다 증가	고 뉴 스	2008.10.10
176	김소남 “지진시 건축물 83.7% 붕괴 우려”	연 합 뉴 스	2008.10.10
177	벼락 맞을 확률 매년 증가 ... 대책은?	프 리 존 뉴 스	2008.10.10
178	“지진시 건축물 83.7% 붕괴 우려”	Y T N	2008.10.10
179	내진설계 건축물 고작 16.3%	파 이 낸 설 뉴 스	2008.10.10
180	언제 벼락맞을지 몰라? “낙뢰 사상자 4년새 3배 급증”	노 컷 뉴 스	2008.10.10
181	이색주장! “벼락맞을 확률 매년 증가, 대책세워야”	데 일 리 안	2008.10.10
182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 ‘난연 판넬’ 상당수 가짜 ... 화재 취약	문 화 일 보	2008.10.10
183	[국감 단신] 명예훼손죄 징역형 0.9% 그쳐 외	세 계 일 보	2008.10.10
184	[2008 국정감사] 3층이상 건물 80% 지진취약	서 울 신 문	2008.10.11
185	서울 조직폭력배 개입 점쳐 ‘급증’	마 이 데 일 리	2008.10.12
186	경남 위조지폐 범행 매년 증가	경 남 일 보	2008.10.12
187	의료계 구직난 해소 투데이 JOB오픈	메 디 컬 투 데 이	2008.10.12
188	서울 관악구 범죄 최다지역, 구로구 살인 오명	전국매일 인터넷신문	2008.10.12
189	“서울시 우범지역 1위는 관악구...5대 범죄 최다 발생”	파 이 낸 설 뉴 스	2008.10.12
190	서울지역 강력범죄 최다발생 ‘관악구’	마 이 데 일 리	2008.10.12
191	관악구, 강력범죄 ‘천국’...“CCTV설치 등 대책 마련해야”	조 선 일 보	2008.10.12

번호	제 목	언론사	작성일
192	벼락맞을 확률 4년간 3배이상 증가	경 남 매 일	2008.10.12
193	우리나라 지진나면 건물 84%붕괴	경 남 매 일	2008.10.12
194	경기지역 조직폭력배 3년간 39% 증가	중 부 일 보	2008.10.13
195	“112 허위신고 증가 경찰력 소모 심각”	매 일 경 제	2008.10.13
196	<국감> 112 허위신고 증가... “경찰 행정력 낭비 심각”	굿 데 이 스포 츠	2008.10.13
197	초등4년 ‘63빌딩 폭파’신고 등 허위신고 급증	헤 럴 드 생 생 뉴 스	2008.10.13
198	<국감> 112 허위신고 증가 ... “경찰 행정력 낭비 심각”	뉴 시 스	2008.10.13
199	서울 조직폭력배 개입 범죄 ‘급증’	메 디 쿨 투 데 이	2008.10.13
200	서울지역 강력범죄 최다발생 ‘관악구’	메 디 쿨 투 데 이	2008.10.13
201	112 허위신고 증가 “2005년 9534→2007년 1만 2155건”	마 이 테 일 리	2008.10.13
202	112 허위신고 증가 ‘2005년 9534→2007년 1만 2155건’	메 디 쿨 투 데 이	2008.10.13
203	“112 허위신고 증가 경찰력 소모 심각”	m b n	2008.10.13
204	<국감초점>관악구, 강력범죄 ‘천국’...“CCTV 설치 등 대책 마련해야”	뉴 시 스	2008.10.13
205	‘5無국감’ ... 이럴거면 하지말지 ...	문 화 일 보	2008.10.13
206	“서울시 우범지역 1위는 관악구 .. 5대 범죄 최다 발생”	파 이 낸 설 뉴 스	2008.10.13
207	수도요금 체납.미납 단수 급증	인 천 일 보	2008.10.14
208	경기도 기초수급 201가구 요금 못내 단수	매 일 경 제	2008.10.14
209	제목 : 국감, 총리 지시, 쇠귀에 경 읽기?...경기도청 전력사용량 급증	경인방송SunnyFM	2008.10.14
210	‘국민 기본권 침해’ 경기도 질타	시 민 일 보	2008.10.14
211	“기초생활수급자 단수조치 최근 3년간 32.2% 증가”	시 민 일 보	2008.10.14
212	경기지역 조직폭력배 3년간 39% 증가	중 부 일 보	2008.10.14
213	총리 지시, 쇠귀에 경 읽기?	K B N 대 한 방 송	2008.10.14
214	<국감>총리 지시, 쇠귀에 경 읽기?...경기도청 전력사용량 급증	뉴 시 스	2008.10.14
215	<국감> 경기지역 서민 단수조치 3년동안 32.2% 증가	뉴 시 스	2008.10.14
216	<국감> 경기도 정보공개 운영실태 전국 꼴찌	뉴 시 스	2008.10.14
217	경기도 기초수급 201 가구 요금 못내 단수	연 합 뉴 스	2008.10.14
218	경기도 기초수급 201 가구 요금 못내 단수	아 시 아 투 데 이	2008.10.14
219	“경찰대 골프장 농약사용량 점검 안받아”...일반 골프장 2배 사용	뉴 시 스	2008.10.14
220	경찰대학 골프장 잔디 ‘농약투성이’	경 기 신 문	2008.10.15
221	<국감현장> 행안위 “부산은 위기의 도시” 한목소리	M B C 뉴 스	2008.10.16
222	부산, 무인단속카메라 10대중 1대는 ‘모형’	중 앙 일 보	2008.10.16
223	[국감현장] 행안위 “부산은 위기의 도시” 한목소리	중 앙 일 보	2008.10.16
224	부산 무인단속카메라 10대중 1대 작동안해	부 산 방 송	2008.10.16
225	부산 경찰 11% 사격 낙제점	부 산 방 송	2008.10.16
226	무인단속카메라 10대중 1대 작동안해	C B S 방 송	2008.10.16
227	무인단속카메라 10대중 1대 작동안해	노 컷 뉴 스	2008.10.16
228	월 6천500만원 전화사기	전 북 도 민 일 보	2008.10.16
229	경남 위조지폐 범행 매년 증가	사 천 신 문	2008.10.16
230	전북도, 정보공개 만족도 전국 하위권	전 북 도 민 일 보	2008.10.16
231	직장인 10명중 4명 우울증세	전 북 도 민 일 보	2008.10.16
232	수정.백양터널 ‘혈세낭비’ 집중포화	부 산 일 보	2008.10.16

번호	제 목	언론사	작성일
233	경기 정보공개 만족도 '꼴찌'	세계일보	2008.10.16
234	행안위 "부산은 위기의 도시" 한목소리	국제신문	2008.10.16
235	부산, 무인단속카메라 10대중 1대는 '모형'	국제신문	2008.10.16
236	"부산은 제2의 도시아닌 위기의 도시" 한목소리	부산일보	2008.10.16
237	북부서 '범인검거' 부산 꼴찌	부산일보	2008.10.17
238	전화사기 2년새 16억원	전북도민일보	2008.10.17
239	과다채무기초부정수급 등 질타	전국매일	2008.10.17
240	강원도내 결식아동 6년간 10배 증가	강릉 M B C	2008.10.20
241	강원도내 결식아동 6년간 10배 증가	춘천 M B C	2008.10.20
242	대구경찰 3명중 1명꼴 표창 남발	대구 M B C	2008.10.20
243	대구시 여성정책 미흡	대구 M B C	2008.10.20
244	[국정감사]경찰수뇌부, 무더기 포상 남발하고 있다.	불교방송	2008.10.20
245	대구 서구지역의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농도 전국 최고	대구신문	2008.10.20
246	포상 남발하는 대구경찰, 표창 수여 상한선 초과율 전국 최고	대구신문	2008.10.20
247	경찰 표창 수여 신중해야 한다	충청매일	2008.10.20
248	대구 여성정책수준 '낙제점'	경북도민일보	2008.10.20
249	부산은 '위기의 도시' 대책 절실	시대일보	2008.10.20
250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16개 시도 중 7위 차지	강원일보	2008.10.20
251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부산, 지난해 85% 급증	부산일보	2008.10.20
252	김소남 의원 "대구시 여성정책 '빵점'"	영남일보	2008.10.20
253	국감...대구서구 미세먼지일산화탄소 전국1위 '불명예'	영남일보	2008.10.20
254	도내 결식아동 10배 증가	기독교방송	2008.10.21
255	서구 미세먼지일산화탄소 전국 1위	경북매일신문	2008.10.21
256	강릉춘천동해 대기 환경 '우수'	강원일보	2008.10.21
257	동구, 아황산가스 농도 '전국 최악'	경기일보	2008.10.21
258	서구, 대기오염 전국 최악	경북일보	2008.10.21
259	'보이스피싱' 사건 검거율 '부산 최하위권' 불명예	부산일보	2008.10.21
260	대구 청장 서장 포상 남발 관련 규정 200%이상 초과	대구일보	2008.10.21
261	대구 서구지역 '전국 1위'	대구신문	2008.10.21
262	전국서 가장 더러운 공기 마시는 곳	경북도민일보	2008.10.21
263	[사설]경찰 표창 수여 신중해야 한다	충청매일	2008.10.21
264	충북지방경찰청 표창 남발	충청매일	2008.10.21
265	[뉴스광장]부산지역 기초생활급여 부정 수급 급증	부산 K B S	2008.10.21
266	미세먼지일산화탄소 농도 대구 서구 전국 최고	영남일보	2008.10.21
267	대구지방청, 일선 경찰서장 포상 남발	대구일보	2008.10.21
268	도내 결식아동 급증 추세	강원민방	2008.10.22
269	강원지방경찰청 국감 범죄검거율 하락 추궁	강원일보	2008.10.22

2008년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2008년 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법안

<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법안목록>

※ 2008년 10월 28일 현재

번호	의안번호	법안명 (제안자)	주요내용	소관위원회	제안일자	소관위 심사일자	법사 위 심사일자	본회 의 심사일자	처리 결과
1	1800052	도로교통법 일 부개정법률안 (김소남의원등 11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에 노인의 교통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	행정안전 위원회	2008.6.19	(회부) 2008.8.29.			
2	1800074	공직선거법 일 부개정법률안 (김소남의원등 14인)	실질적인 투표가 시작되는 부재자투표에 있어 부재자투표용지발송 이전에 후보자의 사퇴 여부가 확정되어 이를 반영할 수 있 도록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마감일 이전인 선거일 전 11일 오후6시까지로 후보자 사 퇴기한을 정함	행정안전 위원회	2008.6.24	(회부) 2008.8.29			
3	180008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김소남의원등 11인)	국가를 위해 공헌한 약 1,1000명의 6·25 참전소년병에 대한 보상, 교육, 취업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	정무위원 회	2008.6.25	(회부) 2008.8.29			
4	1800093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소 남의원등 11인)	대한민국6·25참전소년병회'를 설립하고, 국 가유공자 단체에 '대한민국 6·25참전소년병 회'를 추가함	정무위원 회	2008.6.27	(회부) 2008.8.29			
5	180013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남의원 등 11인)	'낙뢰'를 자연재해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정 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낙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낙뢰예방대책 과 낙뢰 예경보시스템 구축,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	행정안전 위원회	2008.7.2	(회부) 2008.8.29			
6	1800131	제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김소남의원등 11인)	급격한 기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기 위해 낙뢰를 자연재해의 범주안에 포함	행정안전 위원회	2008.7.2	(회부) 2008.8.29			
7	1800233	수도법 일부개 정법률안 (김소남의원등 14인)	수돗물 공급에 있어 노인·장애인 등 보호를 요하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제도가 매우 미 흡한 실정이므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의 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장애인, 노인, 기초생 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도요 금 할인제도 및 단수유예기간 설정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단수로 인한 인 권침해를 개선하고 빈곤가구의 행복추구권 을 보장함	환경노동 위원회	2008.7.11	(회부) 2008.8.29			

8	1800337	독도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및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촉구결의안 (김소남의원등 23인)	대한민국 국회는 '생태적 독도'가 세계시민들에게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독도를 세계자연유산 및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함	독도영토 수호대책 특별위원회	2008.7.18	(회부) 2008.8.29			
9	1800421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 (김소남의원등 11인)	16세 이상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범위를 배기량 50CC 미만의 차로 제한하고 이륜자동차와 운전면허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이에 적합한 운전교육을 받게 하고 운전면허의 종류에 합당한 차를 운전하게 함	행정안전위원회	2008.7.24	(회부) 2008.8.29			
10	1800422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 (김소남의원등 11인)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용 정보기록방식을 「저작권법」에 포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7.24	(회부) 2008.8.29			
11	1800423	도서관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소남의원등 11인)	공공도서관의 경우 음성자료나 동영상자료 등 장애인이 인식가능한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이를 서비스하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7.24	(회부) 2008.8.29			
12	1800425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의원등 11인)	시각장애인 등이 공공시설 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점자안내책자 외에 음성변환용 바코드가 인쇄된 안내책자를 함께 제공하고자 함.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08.7.24	(회부) 2008.8.29			
13	18004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의원등 11인)	문자정보를성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처방전에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해당 문자정보를 음성변환출력기기로 음성출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 등도 처방전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08.7.24	(회부) 2008.8.29			
14	18004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의원등 11인)	문자정보를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의약품의 용기나 첨부 문서 등에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 등이 음성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고자 함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08.8.24	(회부) 2008.8.29			
15	1800504	고령자 주거안정법안(김소남의원등 17인)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하며, 고령자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적합한 최저주거기준 및 최소안전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임대주택의 보급 및 기존 거주주택을 개조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국토해양위원회	2008.8.1	(회부) 2008.8.29			
16	1800703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의원등 20인)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열람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누범 또는 상습범에 해당하는 자의 신상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0년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08.8.22	(회부) 2008.8.29			